

어촌의 양극화 실태와 정책과제

- 소득 양극화 실태와 원인 분석을 중심으로 -

2006. 12

최성애 · 홍현표 · 김봉태

□ 보고서 집필 내역

◆ 연구책임자

- 최 성 애 :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 연구진

- 홍 현 표 : 제5장
- 김 봉 태 :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 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

◆ 박 대 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서 재 연 (해양수산부 과장)

* 연구자문위원은 산·학·연·정 순임

머 리 말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그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며 경기가 회복되어도 양극화 정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양극화 현상이 중장기 산업구조의 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도 볼 수 있으나 구조화된 양극화는 집단간 갈등과 충돌을 유발하여 사회 불안을 초래하는 등 사회통합을 저해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양극화 완화 또는 해소에 초점을 맞추어 특히 선도부문과 낙후부문의 ‘동반성장’ 전략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 구조적·사회적 통합에 양극화 정책방향을 두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정책과제를 마련하고 추진 중에 있다.

그런데 어촌의 양극화 현상은 농촌 및 도시와의 소득격차로 양극화의 한 축을 이루고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고 있다는 점은 널리 인식만 되고 있을 뿐 그 실태파악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체로 어촌양극화 문제가 농촌과 함께 다뤄지고 있어 어촌과 어업현실이 반영된 어촌의 양극화 완화 또는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WTO-DDA와 FTA 협상 타결 이후 어촌의 경우 특히 도시가구와의 소득격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양극화, 소득불평등, 빈곤이 어촌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2개 년도에 걸쳐 수행되는데 1차년도인 올해는 어촌의 소득 양극화 및 불평등 실태를 분석하여 그 원인을 규명해보고 향후 전망과 함께 양극화 완화 또는 해소를 위한 기본 정책방향 및 향후 정책과제의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어서 2차년도 연구에서는 소득 양극화를 제외한 사회양극화 실태를 조사하여 타 부문과 비교·분석하고 1차년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어촌유형별로 양극화 해소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차년도 연구를 통해서 어촌의 양극화 정도와 불평등은 과거에 비해 심화되고 있으며, 종사유형별로는 양식어가, 입지유형별로는 취락지구의 어촌이 양극화 정도와 불평등도가 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어촌의 양극화 심화의 원인은 소득이 넓게 분포하는 양식어업의 성장과 생산시설 경영규모의 차이로 분석되었다. 한편 설문조사에 의하면 어업인은 어업비용의 상승, 과잉생산에 따른 시장가격의 폭락 등 시장의 민감성을 주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양극화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이를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한 세 가지의 유효한 기본 정책방향과 이에 대응하는 대략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연구 범위의 방대함과 결과의 중요도에 비해 선행연구가 전무하고 기초통계자료가 미흡하여 한계가 많은 가운데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수행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어촌의 양극화 문제를 처음으로 정면에서 다뤘으며 양극화지수 및 불평등지수, 어촌계현황자료 활용 등에 의한 실증분석과 함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보완하는 등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에 그 의의가 있다.

그동안 어촌을 대상으로 한 관련 연구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후속 연구와 어촌정책 입안자들에게 유익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가치가 높으며 특히 이 연구를 계기로 지속적이고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수산어촌연구본부의 최성애 연구위원, 홍현표 부연구위원, 김봉태 연구원이 집필하였으며 이들 연구자 여러분께 노고를 표한다. 아울러 이 연구의 내용은 전적으로 연구자 개인의 의견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06년 12월

韓國海洋水產開發院
院長 李 正 煥

목 차

ABSTRACT	i
----------	---

요 약	iii
-----	-----

제1장 서 론	1
---------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2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1) 연구범위 / 3	
2) 연구방법 / 4	
3) 연구추진체계 / 4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6

제2장 양극화의 개념과 분석 방법	8
--------------------	---

1. 양극화 개념	8
1) 양극화 논의의 혼란 / 8	
2) 양극화의 개념 / 10	
2. 분석방법과 자료	13
1) 소득 양극화 정도의 측정 방법 / 13	
2) 소득불평등도 측정 방법 / 17	
3) 자료 / 23	

제3장 어촌 양극화의 실태 분석 25

1. 어촌과 농촌·도시 간 소득격차 25
2. 어촌의 양극화 실태 분석 29
 - 1) 소득 양극화 실태와 변화 / 30
 - 2) 소득불평등의 실태와 변화 / 37
 - 3)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 변화 종합 / 44
 - 4) 양극화 및 불평등 실태분석 소결 / 48

제4장 어촌 양극화의 원인 50

1. 어촌 양극화의 원인 50
 - 1) 어촌·도시의 격차 확대의 원인 / 50
 - 2) 어촌 내의 양극화와 불평등의 원인 / 57
 - 2) 생산시설 경영규모의 차이 / 65
2. 설문조사 67
 - 1) 설문조사 개요 / 68
 - 2) 설문조사 결과 / 70
3. 소결 및 시사점 82

제5장 어촌 양극화의 전망과 정책과제 86

1. 어촌 양극화의 전망 86
 - 1) 어촌과 도시의 소득격차 전망 / 86
 - 2) 어촌 내의 양극화 전망 / 87
2. 어촌 양극화의 정책과제 91
 - 1) 우리나라 양극화의 원인과 정책방향 / 91
 - 2) 어촌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본 정책방향과 과제 / 94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06
----------------	-----

1. 주요 연구결과	107
1) 양극화 및 불평등 실태 / 107	
2) 양극화 원인과 전망 / 107	
3) 기본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 108	
2. 정책제언	109

참고문헌	111
------	-----

부록1 2007년 2차년도 연구계획	113
---------------------	-----

부록2 어촌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에 대한 의견조사표	116
------------------------------	-----

표목차

〈요약 표-1〉 어가·농가·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 ER지수 비교	xi
〈요약 표-2〉 어촌계 유형별 소득 ER지수	xii
〈요약 표-3〉 어가·농가·전국가구·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 지니계수 비교 ..	xiii
〈요약 표-4〉 1995·2000·2005년 어촌계 유형별 지니계수	xv
〈요약 표-5〉 어업 부문별 양극화 심화 요소와 약화 요소	xxiv
〈요약 표-6〉 양극화 해소 대책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xxv
〈요약 표-7〉 어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xxvii

〈표 2-1〉 어촌계의 유형 구분	24
〈표 3-1〉 부문별 실질 가구소득 추이	26
〈표 3-2〉 종사자 1인당 어업소득·농업소득·근로소득 추이	28
〈표 3-3〉 어가·농가·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 ER지수 비교	30
〈표 3-4〉 어가 종사유형별 어가소득·어업소득의 ER지수	31
〈표 3-5〉 어촌계 유형별 소득 ER지수	32
〈표 3-6〉 1995~2005년 유형별 어촌계의 평균 어가소득	36
〈표 3-7〉 2000년·2005년 수산물 판매금액별 어가분포 추이	37
〈표 3-8〉 어가·농가·전국가구·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 지니계수 비교 ..	38
〈표 3-9〉 어가유형별 지니계수 추이	38
〈표 3-10〉 어가의 소득원별 지니계수 추이	39
〈표 3-11〉 2003~2005년 어가소득의 GE지수 추이	40
〈표 3-12〉 어가의 소득원별 GE지수	41
〈표 3-13〉 2003~2005년 유형별 어가내·어가간 GE지수	42
〈표 3-14〉 어가소득의 5분위배율	43

〈표 3-15〉 1995 · 2000 · 2005년 어촌계 유형별 지니계수	44
〈표 3-16〉 어촌계 유형별 불평등 및 양극화 수준	45
〈표 3-17〉 어촌계 유형별 불평등 · 양극화 · 소득 수준의 증감	47
〈표 4-1〉 산업 부문별 실질 국내총생산(GDP) 추이	51
〈표 4-2〉 2005년 어가소득과 어업경영주 연령의 상관계수	57
〈표 4-3〉 실질 어업생산액의 부문별 추이	59
〈표 4-4〉 실질 어가소득 · 어업소득의 부문별 추이	60
〈표 4-5〉 어업형태별 어가분포 추이	61
〈표 4-6〉 양식품목별 어가분포 추이	62
〈표 4-7〉 어업소득률별 어가분포 현황	64
〈표 4-8〉 조사대상 표본의 특성	68
〈표 4-9〉 가구소득에서 어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70
〈표 5-1〉 어업 부문별 양극화 심화 요소와 약화 요소	91
〈표 5-2〉 양극화 완화를 위한 국가 정책과제	94
〈표 5-3〉 양극화 해소 대책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96
〈표 5-4〉 어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98

그림목차

〈요약 그림-1〉 연구추진체계	iv
〈요약 그림-2〉 농가 및 도시근로자가구 대비 어가소득의 비율 추이	x
〈요약 그림-3〉 어촌 양극화 완화 기본 정책방향	xxvi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5
〈그림 2-1〉 불평등은 감소하나 양극화는 심화되는 경우	12
〈그림 2-2〉 빈곤은 감소하나 양극화는 심화되는 경우	12
〈그림 2-3〉 로렌즈곡선과 지니계수	18
〈그림 3-1〉 농가 및 도시근로자가구 대비 어가소득의 비율 추이	26
〈그림 3-2〉 농가 및 도시근로자가구 대비 가구원당 어가소득의 비율 추이	27
〈그림 3-3〉 주 소득원의 가계비충족도 추이	28
〈그림 3-4〉 가구소득의 가계비충족도 추이	29
〈그림 3-5〉 1995·2000·2005년 어촌계의 소득계층 분포와 계층이동 ..	35
〈그림 3-6〉 2005년 소득원별 어가소득 불평등 기여율	41
〈그림 3-7〉 어촌계 평균 어가소득의 지니계수·ER지수 추이	46
〈그림 4-1〉 1990~2005년 일반해면어업의 어획량 추이	52
〈그림 4-2〉 1990~2005년 수산물 수출입 추이	53
〈그림 4-3〉 1990~2002년 어가소득의 소득원별 구성비 추이	54
〈그림 4-4〉 1990~2005년 어업경영주 연령별 어가수 비중 추이	56
〈그림 4-5〉 2005년 어업경영주 연령별 소득 분포	56
〈그림 4-6〉 주요 양식품종 어가의 어업소득 현황(2003년)	63
〈그림 4-7〉 연안어선 경영규모별 어가수 비중 추이	66
〈그림 4-8〉 양식장 경영면적별 어가수 비중 추이	67

〈그림 4-9〉 농가·도시가구 대비 어가소득 격차변화	71
〈그림 4-10〉 농가·도시가구와의 소득격차 원인	72
〈그림 4-11〉 농가·도시가구와 소득격차를 줄이는 대책	73
〈그림 4-12〉 지난 10년 동안 어가의 생활환경 변화추이	74
〈그림 4-13〉 농가·도시가구와의 생활환경 격차 원인	75
〈그림 4-14〉 어촌 내의 소득격차(불평등) 추이	76
〈그림 4-15〉 어촌 내의 양극화 변화추이	77
〈그림 4-16〉 어촌 내의 불평등·양극화 심화의 원인	78
〈그림 4-17〉 양식어업의 양극화 심화 원인	79
〈그림 4-18〉 어촌 양극화 해소 대책	80
〈그림 4-19〉 어업 이외의 다른 경제활동	81
〈그림 4-20〉 다른 경제활동 의사는 있으나 하지 못하는 이유	82
〈그림 5-1〉 어촌 양극화 완화의 기본 정책방향	97

ABSTRACT

The Actual State of and Policy Tasks Regarding Income Bipolarization in Korean Fishing Villages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actual state of the bipolarization and inequality in Korean fishing households' incomes. Also, the outlook for this income distribution pattern and the policy tasks to combat bipolarization could be derived from this analysis.

On the basis of the fishery household economy survey for the years 2003 through 2005 and fishing village cooperatives survey for the years 1995, 2000 and 2005, respectively, this study introduced some indices such as the Gini index, Generalized Entropy index and the bipolarization index developed by Esteban and Ray (1994) and Duclos, Esteban, and Ray (2004). In addition to these statistical analyses a questionnaire survey of fishermen and fishing officers was conduct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degree of both bipolarization and inequality in the fishing households' incomes is higher than that in the farming households' incomes or the urban households' incomes. Second, the degree of bipolarization in the fishing households' incomes is

progressively worsening. Third, the degrees of bipolarization and inequality in the incomes of aquaculture households and the fishing households in remote areas are higher than in any other kinds of fishing households. Fourth, the high degree of bipolarization in fishing households' income results from the rapid growth of aquaculture, the bipolarization in fishing business scales, and the expanding low-income bracket.

In order to reduce or to remedy the bi-polarization in fishing households' income some policy tasks are necessary; increasing stable income sources, promoting balanced development, and reinforcing social safety net in fishing villages.

Key Words: *fishing villages, bipolarization, income inequa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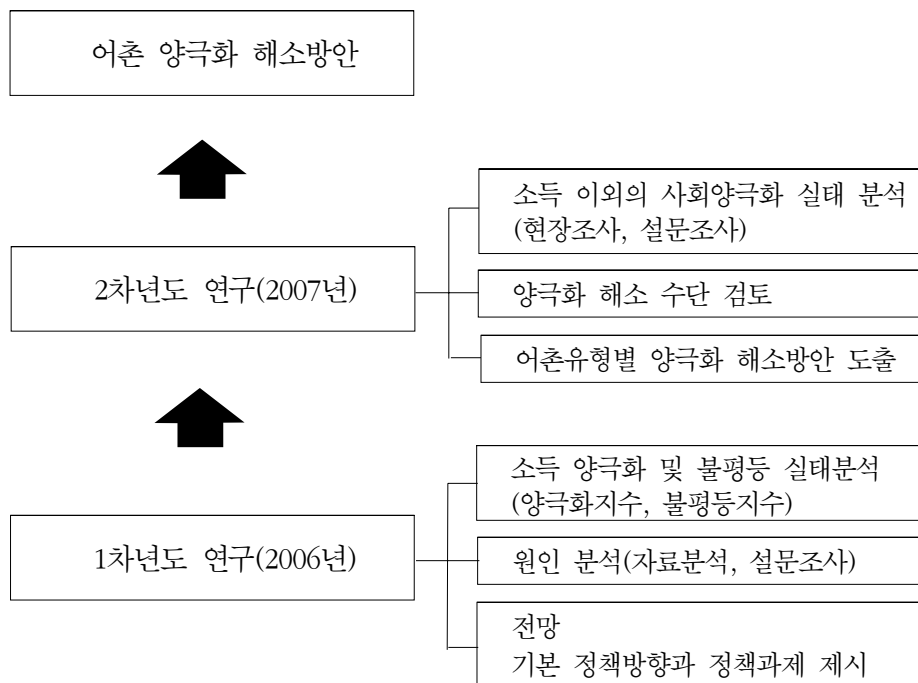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각 부문별 구조조정과 시장개방의 폭이 확대되면서 경쟁력의 우열에 따라 소득, 소비, 산업구조, 자금조달, 지역간 경제 활동 등의 측면에서 격차가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양극화 정도가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으며 경기회복으로 양극화가 개선되지 않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 이에 정부는 양극화 완화 또는 해소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사회경제정책을 마련하고 추진 중에 있음
- 어촌의 양극화 현상은 타 부문과의 소득격차가 벌어지면서 우리사회 양극화의 한 축을 차지하고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고 있다는 점은 막연하게 널리 인식되고 있으나, 그 실태파악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대체로 어촌양극화 문제는 농촌과 함께 묶여져 다뤄지고 있어 어촌과 어업 현실이 반영된 어촌의 양극화를 극복하고 완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방안이 제안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WTO-DDA와 FTA 협상 타결 이후 어촌의 경우 특히 도시가구와의 소득격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양극화, 소득불평등, 빈곤이 어촌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따라서 어촌에 대한 양극화 실태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이에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절한 방안마련에 대한 연구가 시급함
 - 양극화 완화 또는 해소를 위한 방안은 향후 WTO-DDA와 FTA 협상 이후의 어촌대책과 맞물려 기대되는 효과는 크다고 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2개년에 걸쳐 어촌의 양극화 실태와 타 부문과의 격차를 분석하여 그 원인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과 함께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본 정책방향과 해소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요약 그림-1〉 연구추진체계



- 1차년도인 올해의 연구는 어촌의 소득 양극화 및 소득불평등 실태와 원인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아울러 어촌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본 정책방향과 정책과제 제시를 목적으로 함
- 2차년도 연구에서는 1차년도의 연구를 바탕으로 어촌유형별 양극화 해소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양극화 문제는 각 부문의 격차 정도로 파악되는데 이러한 격차는 결국 소득격차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소득부문에 있어 양극화 정도를 지수화하여 타 부문, 또는 국가간 비교하는 것이 기본적이며 일반적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어촌의 양극화를 어가소득 양극화에 초점을 맞추어 현시점에서의 실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양극화 변화양상을 살펴보는 것을 1차년도의 연구범위로 한정함
- 아울러 소득불평등 실태에 대해서도 1차년도 연구에서 분석함
- 선행연구 및 관련 자료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양극화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양극화 측정 방법론, 우리나라 양극화 실태·원인·전망 그리고 대책방안 등 양극화 현상에 관한 기본적 내용 등을 파악함
- 통계청 「어가경제조사」의 3년간 기초자료(2003~2005년)를 분석하여 소득 양극화지수를 측정하여 현시점에서의 어촌 양극화 실태를 파악하고 아울러 농가 및 도시가구와의 비교·분석함
- 수협중앙회에서 발간하고 있는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을 활용하여 시계열분석을 통한 양극화 변화양상을 분석하여 시간흐름에 따른 양극화 정도를 파악하여 연구내용을 보완함
- 이와 함께 소득 불평등도를 지니계수, 일반화된 엔트로피지수 그리고 5분위배율로 측정하여 소득이 고르지 못한 어촌실태와 계층이동 분석을 통하여 어촌의 소득불평등이 개선 또는 악화되었는가를 파악함

- 다양한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양극화의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어업인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어촌현장에서 느끼는 양극화의 실태와 그 원인을 파악하여 통계자료 분석의 한계를 보완함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어촌양극화와 관련하여 본 연구가 최초로 수행되는 연구로 선행연구는 전무한 실정임
- 어촌양극화 연구실정과는 달리 최근 정부출연 연구기관, 삼성경제연구소 등 사설연구기관에서 양극화 문제와 관련하여 다수의 연구가 나왔거나 진행 중에 있어 양극화연구와 관련하여 결과물이 어느 정도 축적되고 있음 또한 재정경제부 등 여러 정부부처에서도 양극화를 진단하고 향후 정책방향과 정책과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자료가 제공되고 있음
 - 이들 연구는 어촌의 양극화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론과 어촌의 양극화 해소방안을 마련하는데 참고가 되지만 어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니므로 어촌의 양극화 실태 파악 및 해소방안을 도출하는데 한계를 가짐
- 어촌과 유사한 농촌의 양극화와 관련한 연구는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주도적으로 담당하여 연구가 많이 진척되고 있음
 - 이동필 외의 「도농간 소득 및 발전 격차의 실태와 원인 분석」(2004) 연구는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도농간 소득격차 완화방안에 관한 연구임
 - 이 연구는 농가소득증대와 농촌개발을 위해 추진한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와 국내외 지역활성화 성공사례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소득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관련 제도의 정비와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한편 김정호의 「농업부문의 양극화 실태와 정책과제」(2005)는 농업부문의 양극화는 농업구조조정의 필연적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강혜정의 ‘농가소득 양극화, 그 실태와 정책과제’ (2006)는 소득부문에 한정하여 양극화 실태와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있음
- 농업부문 및 농촌의 양극화 관련 연구는 본 연구의 방향 및 내용을 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됨

제2장 양극화의 개념과 분석 방법

1. 양극화 개념

- 경제정책부문에서의 양극화는 산업·기업 활동의 부문간 격차 확대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사회정책부문에서는 소득, 고용, 복지, 인적자본 등에서 발생하는 격차 현상이 양극화 개념으로 사용되고 이를 사회양극화라고도 함
- 경제정책부문에서의 양극화와 사회정책부문, 즉 사회양극화는 전혀 별개의 문제가 아니고 밀접한 관련을 지님
- 기업, 산업, 노동시장 등에서 발생하는 성과 격차가 결국 소득으로 귀결되므로 협의의 개념에서 양극화의 논의는 소득 양극화를 중심으로 전개할 수 있음
- 그런데 소득 양극화의 심화가 반드시 소득분배구조의 악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문제의식이 필요함
- 이는 중산층의 감소를 의미하는 소득 양극화와 소득분포가 고르지 못한 상태를 나타내는 소득불균등의 개념을 혼용하고 있는 데 따른 것임
- 양극화 의미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의가 없을 경우 정책적 대응 측면에서 기존의 대책과 차별성을 갖지 못할 것이며 양극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갈등문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게 됨
- 양극화가 소득불균등이나 빈곤과는 다른 개념이자 문제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엄밀한 개념정의와 이에 근거한 지표가 제시되어야 함

- 양극화는 정태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시간에 따른 소득분포 변화라는 동태적 관점에서 파악되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격차의 확대뿐 아니라 중간계층의 감소로 인한 양 집단의 비중과 각 집단의 밀집도가 증가하는 현상도 포함함
 - 불평등지수가 매우 낮다고 하더라도 그 분포가 서로 분리되어 양 극점을 중심으로 집락화되어 있을 때에는 소득분포가 양극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집단사이의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아짐
 - 여기에 양극화 현상의 본질이 있으며 소득 불평등과 다른 측면에서 왜 양극화 문제에 대처하고 이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한가를 잘 보여줌

2. 분석방법과 자료

- 본 연구는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 정도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지수 산출을 중점에 둠
 - 그리고 이를 보완하는 자료로 소득 또는 수산물판매액의 분포 변화, 계층이동 실태를 통계 자료를 살펴봄
- 이와 별도로 통계자료에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어업인과 수산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함
- 어촌의 소득 양극화 실태 분석에는 양극화지수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Esteban and Ray가 창안한 지수(ER지수)를 사용함
 - ER지수는 어느 한 소득집단에 속해 있는 특정 개인이 다른 소득집단에 대해 느끼는 반감의 정도를 동질성함수와 이질성함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개념에 근거함
- 어촌의 소득 불평등 실태 분석에는 지니계수, 일반화된 엔트로피지수(GE지수), 소득5분위배율을 사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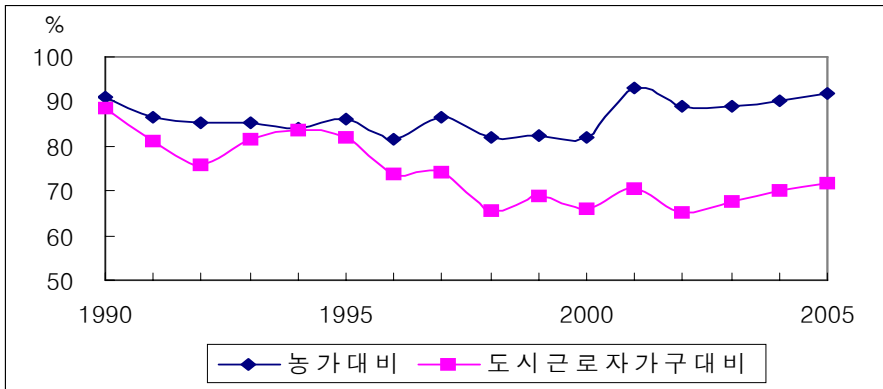
- 지니계수는 소득분배균등선 아래쪽의 삼각형 면적과 소득분배균등선과 로렌츠곡선 사이 면적(소득불균등면적)의 비율로 정의되며 널리 사용되는 불평등지수여서 어가 부문과 다른 부문을 비교하는 데 편리함
- GE지수는 불평등지수가 획득해야 하는 다섯 가지 성질을 모두 만족하는 지수로 전체 불평등도에 기여하는 소득원별 기여 정도를 파악하는 데 편리함
- 소득5분위배율은 소득 수준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배율로 간단하게 구할 수 있으면서 직관적으로 이해가 쉬워 지니계수와 함께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데 널리 쓰임
- 본 연구의 분석에 쓰인 자료는 1990년 이후의 산업 부문별 GDP, 부문별 가구소득, 부문별 어업생산액 등과 통계청의 「어가경제조사」, 「어업총조사」, 「농가경제조사」, 「어가경제조사」의 원자료, 수협중앙회의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 등임
- 「어가경제조사」의 원자료가 지수 산출에 기본 자료이나 2003~2005년 자료만 확보가 가능하여 「어촌계분류평정 및 현황」의 1995·2000·2005년 자료로 대체하여 사용함

제3장 어촌 양극화의 실태 분석

1. 어촌과 농촌·도시 간 소득격차

- 1990년 이후부터 살펴보면 어가는 농가와의 소득격차를 1990년 수준 이상으로 회복했지만 도시근로자가구와의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음
- 다시 말해 도시근로자가구와 비교할 때 어가와 농가의 소득 수준이 하향 평준화되고 있음
- 이는 각각의 기반 산업인 어업·농업과 제조업·서비스업의 산업간 격차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됨

〈요약 그림-2〉 농가 및 도시근로자가구 대비 어가소득의 비율 추이



자료 : 통계청의 통계정보시스템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함

- 가구 소득과 달리 어촌-도시 간 가구원당 소득격차는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젊은층이 중심이 된 가구원 수 감소에 따른 것이지 어촌 경제가 도시와의 격차를 줄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주 소득원의 가계비 충족도(가계지출에 대비한 주 소득의 비율)를 보면, 어가와 농가는 60% 미만에서 계속 하향 추세에 있고 도시근로자가구는 110%대에서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도시근로자가구가 소득원이 안정적인 데 반해 어가와 농가는 다른 소득원을 더 많이 개발해서 가계비를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 있음

2. 어촌의 양극화 실태 분석

- 어촌 내의 소득 양극화 실태는 현재의 시점에서 다른 부문과 비교하여 심각성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과 과거에서부터 양극화 정도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의 두 가지 방향으로 분석함

1) 소득 양극화 실태와 변화

- 현재 어가가 농가보다는 양극화 정도가 심하고 도시가구와는 비슷한 수준임
- 농가소득의 ER지수, 도시가구소득의 ER지수 그리고 어가소득의 ER지수를 비교할 때 어가소득이 농가소득보다는 수치가 다소 높고 도시가구소득과는 미세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요약 표-1〉 어가·농가·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 ER지수 비교

구 분		$\alpha=1.0$	$\alpha=1.3$	$\alpha=1.6$
2003년	어가소득	0.176	0.122	0.079
	농가소득	0.167	—	—
	도시가구소득	0.175	0.121	0.077
2004년	어가소득	0.172	0.118	0.074
	농가소득	0.168	—	—

자료 : 신동균 외, 소득분포의 양극화 추이, 노동경제논집, 2005. 1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양극화 문제 해소방안 연구 중간보고서」, 2006. 7; 어가의 수치는 직접 계산함

- 어가소득보다 어업소득의 양극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나 전체 어가소득의 양극화가 어업소득의 양극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됨
- 어가 종사유형별로 ER지수를 살펴보면 양식어가, 어선사용 어가, 어선비사용 어가 순으로 양극화 정도가 높았고 양식어가의 양극화 정도가 전체 평균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 양식어가의 양극화 정도가 전체 어가의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됨

〈요약 표-2〉 어촌계 유형별 소득 ER지수

구 분		1995년	2000년	2005년
전 체		0.050	0.042	0.062
종사유형	어선	0.062	0.054	0.060
	양식	0.041	0.040	0.063
	복합	0.042	0.032	0.064
입지유형	도시근교	0.035	0.047	0.060
	연안촌락	0.055	0.042	0.060
	취약지구	0.047	0.036	0.075

주 : <요약 표-1>의 지수 값보다 작은 것은 어촌계별 어가의 평균소득으로 지수를 산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요약 표-1>과의 직접적인 비교는 의미가 없음

- 1995 · 2000 · 2005년 어촌계 평균소득을 분석할 때 어촌의 양극화 정도는 2000년에 완화되었다가 2005년은 그 이전인 1995년보다 악화되어 전체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 1995 · 2000 · 2005년 어촌계 평균소득의 ER지수는 2000년에 낮아졌다가 2005년에는 1995년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음
 - 2005년에 모든 어촌 유형에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 어촌계의 소득계층이동 추이를 살펴보면 1995~2000년에는 중층으로 밀집하였다가 2000~2005년에는 상층과 하층으로 분산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임
 - 결과적으로 1995년과 2005년을 비교하면 중층이 얇아지는 슬립화 현상이 나타남
 - 이는 2000년에 낮아졌다가 2005년에 1995년 수준보다 높아진 양극화 ER지수의 추이와 일치함

- 2000년 양극화 정도가 낮았을 때 소득이 가장 낮았고 2005년 양극화 정도가 높을 때 소득도 높아지며 1995년은 그 중간쯤에 있는 소득 수준과 양극화 정도 사이에 뚜렷한 양(陽)의 상관관계가 확인됨
- 이러한 결과는 2000년에 상층에서 중층으로 많이 이동하여 소득이 하향 평준화되면서 양극화가 완화된 데 따른 것임
- 「어업총조사」의 수산물판매금액별 어가분포에서도 2000년과 비교하여 2005년에는 5백만~2천만 원 구간의 어가수 비중만 감소했을 뿐 다른 구간의 어가수 비중은 늘어나 어가소득이 이전보다 양극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줌

2) 소득불평등의 실태와 변화

- 2003~2005년 어가소득의 지니계수는 불평등도가 큰 수준인 0.44~0.45임
- 농가소득의 지니계수와 전국가구(비농어가)·도시근로자가구의 지니계수와 비교할 때 어가소득의 불평등도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됨

〈요약 표-3〉 어가·농가·전국가구·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 지니계수 비교

구 분	어가	농가	전국가구 (비농어가)	도시근로자가구
2003년	0.442	0.414	0.341	0.306
2004년	0.449	0.401	0.344	0.310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양극화 문제 해소방안 연구 중간보고서」, 2006. 7; 어가의 수치는 직접 계산함

- 양식어가의 불평등도가 전체 평균을 훨씬 상회하여 양식어가의 불평등 정도가 전체 어가의 불평등 정도를 높이고 있음
- 양식어가가 다른 유형의 어가에 비해 소득이 넓은 범위로 분포하여 소득격차가 크기 때문임

- 어가의 소득원별로는 전체 어가소득보다 어업소득을 비롯한 각 소득원의 불평등도가 컸는데 이들의 합이 서로 보완되면서 어가소득의 불평등도는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음
- GE지수 분석을 통하여 각 소득원의 전체 소득불평등 기여율을 살펴보면 2005년을 기준으로 할 때 어업소득 76%, 어업외소득 18%, 비경상소득 6%로 나타나 어업소득이 어가 전체 소득 불평등을 주도하고 있음
 - 어가 유형별 어업소득의 불평등 기여율은 2005년에 양식어가가 88%, 어선사용 어가가 60%, 어선비사용 어가가 38%로 양식어가 어업소득의 소득 불평등 기여도가 가장 높음
- 유형별 어가를 한 묶음으로 보았을 때 그 사이의 불평등도보다는 유형별 내 어가의 불평등도가 어가소득의 불평등도를 대부분 좌우하고 있음
 - 2003~2005년 어가소득의 GE지수를 분리해보면 유형별 어가내의 불평등도가 전체 불평등도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음
- 2003~2004년 어가소득의 5분위배율 값은 15~16으로 측정되어 최상위층과 최하위층의 격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도시근로자가구뿐만 아니라 농가의 경우보다도 큰 수치여서 어가가 농가 또는 도시근로자가구보다 소득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드러냄
- 1995 · 2000 · 2005년 어촌계 평균소득을 분석할 때 어촌의 소득 불평등 정도는 2000년에 완화되었다가 2005년은 그 이전인 1995년보다 악화되어 전체적으로 불평등 정도가 심화되고 있음
 - 2000년에 지니계수는 낮아졌다가 2005년에 1995년 수준 이상으로 높아짐
 - 어촌계의 유형별로 보아도 2005년에 모두 불평등 정도가 높아짐

〈요약 표-4〉 1995·2000·2005년 어촌계 유형별 지니계수

구 분		1995년	2000년	2005년
전 체		0.121	0.114	0.160
종사유형	어선	0.092	0.109	0.153
	양식	0.144	0.135	0.157
	복합	0.101	0.086	0.166
입지유형	도시근교	0.107	0.112	0.148
	연안촌락	0.125	0.117	0.150
	취약지구	0.109	0.106	0.213

주 : <요약 표-3>의 지수 값보다 작은 것은 어촌계별 어가의 평균소득으로 지수를 산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요약 표-3>과의 직접적인 비교는 의미가 없음

3)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 변화 종합

- 어촌의 소득 분포는 1995~2000년에 양극화와 불평등이 모두 완화되고 동시에 소득 수준도 내려갔다가 2000~2005년에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는 모습을 나타냄
 - 소득 수준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임에 따라 양극화와 불평등의 완화 또는 악화가 전적으로 좋다거나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움
- 2005년을 기준으로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어촌의 경우 불평등은 악화되고 있으나 다른 종사유형과 달리 유일하게 양극화는 완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소득은 감소세를 보임
 - 입지유형별로 보면 도시근교와 연안촌락과 비교했을 때 취약지구의 경우 양극화 정도와 불평등이 훨씬 심각한 것으로 분석됨

제4장 어촌 양극화의 원인

1. 어촌 양극화의 원인

1) 어촌-도시의 격차 확대의 원인

- 어촌과 도시의 격차가 확대되는 것은 어촌의 중심 산업인 어업과 도시 기반의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과 격차가 커지고 있기 때문임
 - － 어업 총생산(GDP)은 1992년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국내 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낮아지고 있음
-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 발효로 공해 상에서의 조업 가능한 어장이 축소되고 한·일, 한·중 간 새로운 어업협정 체결에 따라 조업어장의 53%가 축소되는 등 전반적으로 어장이 줄어들면서 어획량도 감소함
 - － 또한 육지로부터 오염물질 유입, 폐기물 해상투기, 매립·간척, 바닷모래 채취, 갯녹음 현상, 지구온난화 등은 어장오염 및 어장환경을 변화시켜 어업자원의 육성 및 조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 그리고 불법어업, 어획강도가 높은 어구·어법 사용, 과도한 어획활동 등은 어업자원 감소를 부추기는 주 원인으로 지적됨
- 1997년 수산물수입자유화에 따라 매년 수산물 수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더 이상 국내 어획량 감소에 따른 가격상승을 통해 어업소득을 보전하기 어려움
 - － 중국 수산업의 부상은 일본, 미국 등 주요 수산물 수출에서도 경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 어업의 쇠퇴에 따른 어업소득의 감소를 상쇄할 수 있는 어촌의 새로운 소득원 개발에 소홀해왔다는 점도 어촌-도시 격차 확대의 원인으로 지적됨
- 점점 심화되고 있는 어촌사회의 고령화도 어촌과 도시의 격차를 부추기는 중요한 원인임

- 1990~2005년의 어업경영주 연령별 어가수 비중 추이를 보면 15년 사이에 30대 미만의 비중이 23%에서 5%로, 40대의 비중이 30%에서 21%로 떨어진 반면 60대 이상의 비중이 15%에서 42%로 크게 높아짐
- 연령과 소득 사이에 상관계수를 분석해보면 약한 음(陰)의 상관관계가 드러나는데 어촌사회의 고령화가 이대로 진행된다면 어가소득이 계속 감소하여 도시와의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예견됨

2) 어촌 내의 양극화와 불평등의 원인

- 어촌의 양극화는 소득 증가를 동반하는데 이는 2000년 즈음부터 시작되었거나 이미 진행되어온 정부의 어업·어촌 정책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음
 - 정부 정책의 기초는 잡는어업 부문에서 어업자원 규모에 적정하게끔 어획능력을 줄이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기르는어업(양식어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연근해어선 감척사업과 어류 중심의 양식어업에 대한 지원으로 구체화됨
 - 이에 따라 잡는어업의 생산이 감소 또는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 양식어업 생산이 많이 늘어남
- 양식어업의 확대는 어가의 어업소득 면에서도 차이를 가져와 잡는어업(어선비사용·어선사용) 어가의 어업소득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반면 양식어가의 어업소득은 늘어나고 있음
 - 양식어업의 부상으로 고소득 어업인이 대거 어촌에 등장하여 어촌의 불평등 및 양극화를 심화시킴
- 그런데 양식어가와 다른 유형의 어가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소득격차보다 양식어업 내의 격차가 불평등 및 양극화의 더 중요한 원인임
 - 평균 소득이 높은 양식어업의 부상으로 양식부문에서 고소득 어업인이 진입한 것뿐만 아니라 저소득 어업인도 늘어남

- 양식어업의 이 같은 성격은 고수익 · 고위험인 양식어업 자체의 특성에 기인하는 면이 큼
 - 양식어업은 어업자원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계획적인 생산이 가능해 잡는 어업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나 태풍 · 적조와 같은 자연재해와 어병 발생으로 전혀 생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일이 이 산업에서는 예외적이지 않음
- 이 같은 고위험 · 고수익 성격은 양식어가 내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정도가 다른 유형의 어가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고, 전체 어업 · 어촌의 불평등도와 양극화 정도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함
 - 고위험 품목으로 양식어업이 확대될수록 앞으로 이러한 경향이 더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됨
- 아울러 어촌 내 불평등과 양극화는 가장 기본적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기반인 어선 · 양식장 등의 생산시설 경영규모의 분포에서 기인함
 - 어선보유규모 및 양식장면적은 어업경영의 규모를 나타내고 이는 어업소득 사이에 양(陽)의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어업소득의 양극화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음
- 어선규모별 어가분포를 보면 5~10톤의 어가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반면 다른 크기의 어선규모의 어가는 줄어들고 있음
 - 특히 10톤 미만 어선규모인 연안어업 어가만을 놓고 볼 때 최근 5년 사이 5톤 미만 어선의 어가 수는 줄었으나, 5~10톤 규모의 어가와 어선 없는 어가의 수는 늘어나 어선규모에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양식어장 경영 면적별 어가분포에서도 6ha 이상 또는 1ha 미만의 양식장을 경영하는 어가의 비중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 1~3ha 규모의 양식장을 경영하는 어가는 줄어드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이와 같이 어선 · 양식장의 생산시설 규모의 차이로 인한 양극화 경향은 어업경영 규모에서 중간층이 줄어들고 영세 어업인과 규모화된 어업인으로 분화되는 의미로 볼 수 있음

2. 설문조사

- 통계 자료에 기초한 분석을 보완하기 위해 어업인과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어촌 현장에서 느끼는 소득 양극화 정도와 통계적 분석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한 양극화 심화의 원인을 파악하고 어업인이 희망하면서 실질적으로 어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방향을 도출함
 -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회원 263명, 공무원 57명 등 총 320명이 설문조사에 응함
- 어촌-도시 간 소득격차 확대에 대해 상당수가 동의한 가운데 그 원인으로는 어업비용 증가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76%, 이하 복수응답), 수산물 수입증가(59%), 어장축소·어업자원 감소(52%), 해양환경 악화(39%) 등의 순서로 많이 지적함
 - 이 같은 결과는 어업비용을 다루지 않은 앞의 원인분석 결과를 보완하고 있음
- 어촌-도시 간 소득격차를 줄이는 대책으로는 어업자원 조성 and 어장환경 개선을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24%), 어업구조조정(21%), 어업 이외의 소득원 개발(20%), 수산물 유통·가공 기반 지원(20%) 등이 뒤를 이음
 - 어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대책이 어촌의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는 대책보다 더 앞서 있음
- 어촌-도시 간 생활환경격차 확대에 대해 소득격차보다는 동의 비율이 낮았으나 긍정하는 비율이 높았고 그 원인으로는 소득격차(23%)보다는 차별적인 어촌정책 지원(39%)과 지리적으로 불리한 위치의 어촌 여건(39%) 때문으로 보는 시각이 많음
 - 이는 소득격차를 줄인다고 해서 생활환경 격차가 해소되기 힘들다는 점을 암시함(2차년도 과제에서 심층 연구 필요)

- 어촌 내 양극화와 불평등에 대해서도 최근 10년 사이 그 정도가 심해졌다는 데 상당수가 동의를 표시한 가운데 그 원인으로 전체 응답자의 36%가 어선·양식어장 등의 생산시설 경영규모의 격차 확대를, 32%가 어가부채 증가 등에 따른 저소득층의 증가를, 15%가 양식어업의 확대를 꼽음
 - 특히 어가부채증가는 관련 공무원과는 대조적으로 어업인들이 많이 지적하여 어업인들이 어가부채와 빈곤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냄(2차년도 과제에서 심층 연구 필요)
- 양식어업의 양극화 정도가 큰 원인에 대한 설문에서는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폭락 등 시장여건에 대한 민감성(61%, 이하 복수응답)이 두드러지게 지적되었고 그 다음이 재해·환경 등에 민감한 성격(42%), 어장경영 규모의 차이(36%) 순이었음
- 어촌 내의 소득격차를 줄이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대책으로는 어업과 연관된 고부가가치 산업 개발(67%, 이하 복수응답)과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61%)가 많이 지적됨
 - 따라서 어촌의 양극화 해소 방향은 어업관련 고부가가치 산업개발을 통한 어업소득증대 및 어업 이외의 소득원 개발을 통한 중산층 육성과 어촌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 강화로 요약할 수 있음
- 한편 설문조사를 통해 어촌에는 어업 이외의 다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지 않고 그나마 주로 1차 산업에 경제활동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어업 이외의 소득원 개발의 어려움과 중요성을 일깨움

제5장 어촌 양극화의 전망과 대책방향

1. 어촌 양극화의 전망

1) 어촌과 도시의 소득격차 전망

- 앞으로도 어가와 도시가구의 소득격차가 완화되기 보다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오히려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유류비 등에 의한 어업비용 상승, 어장축소와 어업자원 감소, 수산물 수출경쟁 심화 등으로 어업부문의 소득을 늘리는 데에는 큰 한계가 있음
 - 특히 국제유가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여 어업비용이 내려갈 여지가 많지 않음
 - 또한 현재 과잉생산의 위험을 안고 있는 양식어업도 수익성 제고가 쉽지 않음
 - WTO-DDA 협상 타결과 FTA 체결 등의 대외 변수는 어촌경제에 호재보다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관세가 높은 편이어서 이를 인하할 경우 증가일로에 있는 수산물 수입이 더 늘어나는 반면 전반적으로 관세가 낮은 해외로의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임
 - 또한 여기에다 몇몇 수산보조금이 금지되면 어업과 어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어촌에서 매력적인 다른 소득원을 개발하는 일이 단시일 안에는 쉽지 않음. 열악한 기초생활환경,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경제 활력 저하 등 불리한 지역경제의 여건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임
 - 현재의 지역 여건으로는 설령 다른 소득원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어촌경제의 수익률이 도시경제의 수익률을 상회하기는 어려운 것임
- 기본적으로 지역경제 여건에서 차이가 나는 데다 앞으로 개방화가 진전될수록 어촌 경제에 부정적인 효과가 야기되어 어촌과 도시와의 소득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대응하는 과제로 첫째, 도시와의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 어업의 고부가가치화, 어업외 소득원 개발 등으로 어촌에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고. 둘째, 어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어촌경제의 제반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초생활환경 개선과 어촌고유의 지역개발로써 다원적 기능을 갖춘 정주공간이 마련되어야 함

2) 어촌 내의 양극화 전망

- 현재의 상황에서 양극화와 불평등 정도가 큰 양식어업이 계속 성장한다면 어촌의 양극화와 불평등은 현재보다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어류 및 갑각류와 같은 고위험-고수익 양식품종으로 확대될수록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이와 관련하여 양식어업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기본적으로 잡는어업의 생산만으로는 늘어나고 있는 수산물 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운 데다 어장이 좁아지고 어업자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임
- 양식어업이 계속 강세를 보이면 어가의 입지유형별 사이의 소득격차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 양식어업은 연안촌락과 취락지구에서 비중이 높은 반면 도시근교에서는 어선어업의 비중이 높는데, 지난 10년 동안 양식어업과 어선어업의 부침(浮沈)에 따라 연안촌락과 취락지구의 어가소득이 증가하고 도시근교의 어가소득이 감소하여 세 입지유형의 소득이 평준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앞으로 양식어업이 더욱 강세를 보인다면 다른 입지유형의 소득이 도시근교보다 많아져 소득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어업 내적으로는 연근해어업 및 양식어업의 구조조정과 고령화가 큰 변화의 요인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 구조조정 사업으로 잔존 어업경영체의 경영성과는 크게 개선될 수 있으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밀려나는 어업경영체는 어촌을 떠나지 않는다면 채취어업 등과 같이 소규모 어업으

로 전환하거나 어촌 내에서 다른 업종으로 직업을 전환해야 함

- 이러한 어업구조조정과 어촌의 고령화 추세와 맞물리면서 어업인의 세대교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고령 어업인에게 구조조정 사업은 은퇴 기회로 활용할 유인이 많기 때문임
 - 이에 따라 어업 구조조정은 어촌을 정예화된 청장년층의 어업경영체와 고령의 은퇴 어가로 양분할 것으로 보임
 - 은퇴한 고령 어업인은 다른 직업에 종사하기보다는 단순 채취어업으로부터 얻는 소득 또는 이전소득·비사업소득을 기반으로 생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반대로 잔류하는 어업경영체는 이전보다 규모화된 생산시설을 경영하는 전업(專業)어가 또는 영어조합법인조직 등을 통하여 어업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보임
- 어업 구조조정은 고령자와 청장년층간에 생산시설보유 또는 경영규모의 차이를 초래하고 이는 어촌 내 고령자와 청장년층간에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됨
 - 이처럼 어업 구조조정과 고령화로 어업소득 계층분화가 촉진되면 어촌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될 것은 명약관화하나 이는 어촌의 고령화에 따라 과도기로 꺾어야 하는 불가피한 측면이기도 함
 - 어업 구조조정이 성공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는 밑거름이 될 수도 있음
- 한편 양식어업의 경우 어업 구조조정이 양극화를 강화하는 요소만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고 구조조정을 통해 과잉생산의 위험이 감소되면 이는 양극화를 약화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음
 - 현재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수산업관측사업을 확대하고 유통협약제도를 활성화한다면 과잉생산의 위험을 더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아울러 재해에 따른 위험도 양식재해보험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어 어느 정도 제도 내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양식어업의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이 양식어업에 내재한 위험에 기인한 면이 크다고 볼 때 제도적으로 위험을 감소시키는 이러한 장치들이 도입되고 활성화되면 양식어가뿐 아니라 어촌 내 양극화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이장에서 어촌의 소득 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가려내 향후의 양극화 추세에 기여하는 모습을 부분적으로 전망해 보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내용과 같음

〈요약 표-5〉 어업 부문별 양극화 심화 요소와 약화 요소

구 분	심화 요소	약화 요소
잡는어업	· 종사자의 고령화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단기 효과) ➡ <i>어선경영규모의 양극화</i>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장기 효과) ➡ <i>어업소득 상향평준화</i>
양식어업	· 종사자의 고령화 + 양식어업 구조조정(단기 효과) ➡ <i>양식시설경영규모의 양극화</i> · 고수익-고위험 품종의 양식 확대 ➡ <i>양식 실패 위험 증가</i>	· 양식어업 구조조정(장기 효과) · 수산업관측사업 확대 · 유통협약제도 활성화 ➡ <i>과잉생산의 위험 감소</i> · 양식재해보험 도입 ➡ <i>재해 위험 감소</i>

- 이들을 종합한 양극화의 다면적인 전망은 각 요소를 조합한 효과의 크기에 의존할 것인데, 그 효과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은 향후 다른 연구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지기를 바랍

2. 어촌 양극화 기본 정책방향과 정책과제

1) 기본 정책방향

- 어촌의 소득 양극화 실태 분석 결과와 설문조사 결과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양극화 해소의 정책방향과 정책과

제 아울러 어업인의 의견 등 앞에서 분석한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어촌의 양극화 해소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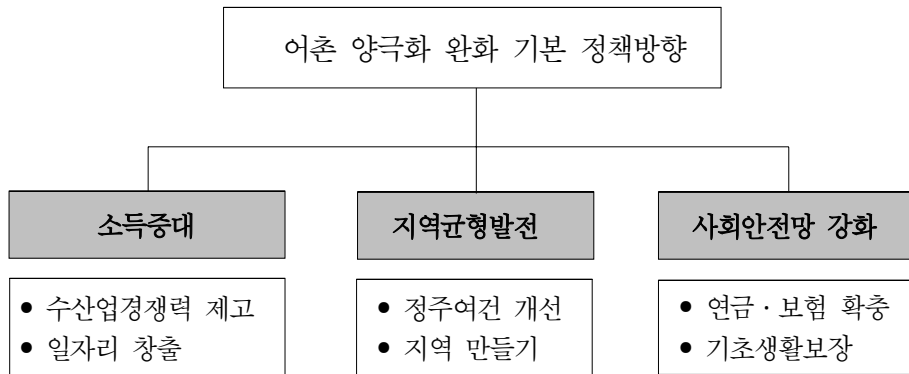
- 실증분석 결과 어가의 경우는 타 부문과 비교하여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양쪽 모두가 심화되고 특히 도시가구와의 소득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간계층이 얇아지는 것을 개선 즉 중간계층을 복원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동시에 소득분배의 개선으로 소득불평등과 소득증대를 통한 소득격차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음
- 설문조사에 의하면 어촌 양극화를 완화하거나 해소하는 대책으로 어업과 관련된 고부가가치 산업개발을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있어 어업소득의 증대에 의한 어촌의 양극화 완화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의료, 생계보조 등 사회안전망의 강화를 통해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어촌의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임

〈요약 표-6〉 양극화 해소 대책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구 분	복수응답률(%)		
	어업인	공무원	전체
부실 경영체의 퇴출지원과 전업유도	41	34	40
고령 경영인을 대체할 젊고 유능한 어업경영인 진입유도	32	64	38
가공, 유통산업 등 어업과 관련된 고부가가치 산업개발	64	79	67
체험관광 활성화 등 다원적 기능 활용 장려	39	59	42
경영컨설팅제, 교육프로그램 등을 도입하여 합리적 경영지원	30	18	28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의료, 생계보조 등 사회안전망 강화	64	43	61
기 타	3	4	3

- 이를 토대로 설정한 어촌의 양극화 해소 기본 정책방향은 다음 그림과 같음

〈요약 그림-3〉 어촌 양극화 완화 기본 정책방향



2) 정책과제

- 기본 정책방향에 의거하여 어촌양극화를 완화 또는 해소하는 정책과제를 크게 세 가지 부문, 즉 어가 소득의 안정적 확보, 어촌지역균형발전 그리고 어촌사회안전망에 관한 정책과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음
- － 본 연구에서 이들 정책과제를 모두 다루기보다는 2차년도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양극화 해소 방안과 연계하여 기존의 정책과제의 일부 또는 새로운 시각에서 간략하게 제시함

〈요약 표-7〉 어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구 분	정 책 과 제
어가소득의 안정적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소득의 안정적 확보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어업 경쟁력 강화 - 중간층 확보를 위한 사람육성 (교육지원, 전문어업경영체 육성, 어업경영컨설팅 지원 등) ○ 어업의 소득 확보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기회확대 (어촌관광, 공공사업 및 사회적 서비스업 발굴 등) ○ 직접소득지원(수산직불제 등)
어촌지역균형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환경 및 정주여건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림어촌지역개발기본계획추진 -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어촌·어항법)수립 및 추진 -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 ○ 지역만들기 (어촌주민과 국민이 함께 하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복합공간, 생활복합공간, 산업복합공간
어촌사회 안전망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복지기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림어촌지역개발기본 계획추진 -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어촌·어항법)수립 및 추진 ○ 어촌사회 안전망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차원의 사회안전망 강화(연금 및 보험 등) - 어촌차원의 사회안전망 확충(어촌계의 사회자본 활용)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어촌은 우리나라 사회 양극화의 한 극에 위치하는 존재로 막연히 인식되고 어촌 양극화 문제에 대해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대체로 어촌문제는 농촌과 함께 다뤄지는 것이 보통이어서 어촌과 어업현실이 반영된 양극화 완화 또는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한계가 많음

-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2개 년도에 걸쳐 수행되는데 1차년도인 올해는 어촌의 소득 양극화 및 불평등 실태를 분석하여 그 원인을 규명해보고 향후 전망과 함께 양극화 완화 또는 해소를 위한 기본 정책 방향 및 향후 정책과제의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어촌의 양극화 문제는 소득뿐만 아니라 교육·문화·복지 등에서 다차원적으로 접근하여 다뤄져야 하나 1차년도 연구에서 소득 양극화에 초점을 맞춘 것은 여러 측면에서 발생하는 성과의 격차가 결국은 소득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가장 기본적인 분석 대상이기 때문임
 - 따라서 2차년도에서는 소득 양극화를 제외한 사회양극화 실태를 조사하여 타 부문과 비교분석하고 1차년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어촌유형별로 양극화 해소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함
- 여기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으로 1차년도 주요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아울러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 등을 포함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함

1. 주요 연구결과

- 양극화 및 불평등 실태분석 결과
 - 현재 어촌 내의 양극화 정도와 불평등이 농촌·도시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인 수준에 있음
 - 1995~2005년 추이를 볼 때 2000년에 소득 감소와 함께 양극화와 불평등이 완화되다가 2005년에 소득이 늘어남과 동시에 양극화 정도는 1995년보다 심화되고 있음
 - 2005년을 기준으로 할 때 종사유형 중에서는 양식어업어가, 임지유형 중에서는 취약지구의 어촌(계)이 양극화 정도와 불평등도가 높음
- 양극화 원인과 전망
 - 어촌 양극화 심화의 원인으로는 잡는어업의 퇴조와 양식어업의 성장, 어선·양식장의 보유 또는 경영규모의 차이를 들 수 있음
 - 과잉생산으로 가격폭락 등의 시장 여건과 자연재해·어장환경에 민감

한 탓에 양식어업은 양극화와 불평등이 높은 부문인데 어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어촌의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이외에 설문조사에 의하면 어업인들은 어가부채 증가 등에 따른 저소득층의 증가가 양극화 심화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또한 타 부문과의 소득격차 원인으로는 어업비용의 증가를 꼽고 있음
- 향후에도 양식어업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어업 구조조정이 어촌의 고령화와 맞물려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고령의 은퇴 어가와 정예화된 어업경영어가로 양분되는 양극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됨
- 그리고 WTO-DDA, FTA 등이 타결되면 어촌의 소득을 더욱 떨어뜨릴 여지가 많아 도시와의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임

○ 기본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 어촌의 양극화 대응 기본 정책방향은 첫째 어가소득의 안정적 확보, 둘째 어촌지역균형발전, 셋째 어촌사회의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임
- 이러한 기본 정책방향에 따른 정책과제로는 다음을 제시할 수 있음
 - 첫째, 어가소득의 안정적 확보방안으로는 어업소득 및 어업외 소득의 증대 그리고 수산직불제 등에 의한 직접소득 지원 등이 있음. 특히 어업인 능력과 역량에 주목하여 어업인 스스로의 노력으로 소득 증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람육성 즉 전문어업경영인 육성이 중요함
 - 둘째, 어촌지역균형발전의 정책과제로는 국가적 최소단위의 기초생활환경 및 정주여건 마련과 국민과 함께 하는 복합공간으로 어촌지역 만들기를 통해 어촌과 도시가 상생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셋째, 어촌사회 안전망 확충의 과제로는 국가 차원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함께 새로운 시도로 어촌계의 사회자본을 활용하여 어촌의 지역차원에서도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 정책제언

- 1차년도 본 연구는 주로 양극화지수의 실증 분석에 의한 어촌 전체의 양극화 실태와 원인 파악에 중점을 두고 어촌계자료를 활용하여 어촌 양극화 정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을 분석함
 - 그러나 객관적 통계자료의 미흡으로 종사유형별 또는 입지유형별로 세분화된 실태와 원인 규명이 불가능했으며, 소득 이외의 사회양극화 실태를 분석하기에도 한계가 많았음
- 향후 2차년도 연구에서는 소득 이외의 격차를 포함하는 사회양극화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하여 어촌사회양극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1차년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심층적인 사례조사 분석 등을 수행함
 - 이를 통해 제시되는 어촌유형별 양극화 완화 또는 해소방안은 정책수립 및 추진에 있어 유익한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됨
-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처음으로 어촌의 양극화 문제를 정면에서 다뤘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으며, 그동안 어촌을 대상으로 한 관련 연구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와 어촌 정책 입안자들에게 유용한 기초로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됨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각 부문별 구조조정과 시장개방의 폭이 확대되면서 경쟁력의 우열에 따라 소득, 소비, 산업구조, 자금조달, 지역간 경제 활동 등의 측면에서 격차가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중장기 산업구조의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볼 수도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하여 이러한 구조 변화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경기 회복의 지연, 부문간 양극화의 악순환 구조 고착, 성장잠재력 잠식, 사회통합 저하, 정책 부담의 증가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기가 회복되어도 양극화의 정도는 개선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양극화 해소에 초점을 맞춘 정책에 더욱 힘을 기울여 다양한 사회경제정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관련 국책 연구기관들도 이러한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어촌의 양극화 현상은 어업부문의 경우 다른 산업 부문과 대비하여 소득이 감소하면서 양극화의 한 축을 차지하고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고 있다는 점은 널리 인식되고 있으나, 그 실태파악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대체로 어촌의 양극화 문제는 농촌과 함께 묶여져 다뤄지는 것이 보통이어서 어촌과 어업 현실이 반영되지 못하고 거의 찾아보기 힘들며, 그로 인해 어촌의 양극화를 극복하고 완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제안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WTO-DDA와 FTA 협상 타결 이후 어촌의 경우 소득 등에 있어 타 부문 특히 도시가구와의 격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양극화, 소득불평등, 빈곤이 어촌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계층간 지역간 양극화 문제는 시급한 대처를 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소득지표에 의한 어가의 낮은 소득 수준 정도만 알 수 있을 뿐 구체적인 어촌의 양극화 실태파악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어촌·어가에 대한 양극화 실태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이에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절한 방안마련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양극화 완화 또는 해소를 위한 방안은 향후 WTO-DDA와 FTA 협상 이후의 어촌대책과 맞물려 기대되는 효과는 크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어촌의 양극화 실태를 어가소득에 대한 양극화지수로 계측하여 타 부문과의 격차 또는 어촌 내 양극화 정도를 비교 분석하고 그 원인을 살펴봄으로써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본 정책방향과 해소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어가의 소득불평등을 지니계수, 엔트로피계수 및 소득분배율 등으로 측정·분석하여 어촌의 소득 불균등 정도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향후 어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산층의 감소를 의미하는 소득 양극화와 소득분포가 고르지 못한 상태를 나타내는 소득불균등은 측정과 해법에 있어 다른 접근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어촌의 양극화와 불균등이 함께 심화되고 있다면 이 두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이야말로 어촌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개 년도에 걸쳐 수행되며 1차년도인 올해의 연구는 어촌의 소득 양극화 및 소득불평등 실태와 원인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아울러 어촌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본 정책방향과 정책과제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후속연구로 2차년도 연구에서는 1차년도의 연구를 바탕으로 어촌유형별 양극화 해소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범위

양극화 문제는 각 부문의 격차 정도로 파악되는데 이러한 격차는 결국 소득 격차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소득부문에 있어 양극화 정도를 지수화 하여 타 부문, 또는 국가간 비교하는 것이 기본적이며 일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어촌의 양극화를 어가소득 양극화에 초점을 맞추어 현시점에서의 실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양극화 변화양상을 살펴보는 것을 1차년도의 연구범위로 한정한다. 또한 소득불균형 실태에 대해서도 1차년도 연구에서 분석하도록 한다.

그리고 양극화는 소득부문 이외에 교육, 주거, 건강, 고용 등의 격차문제로 확대하여 종합적 시각에서 양극화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사회양극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어촌양극화 문제를 종합적 시각에서 파악하기 위하여 소득부문을 제외한 사회양극화 실태는 2차년도의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특히 어촌의 사회양극화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없으므로 새로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타 부문 또는 어촌 내 비교 분석을 하고자 한다. 단 자료부족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어촌의 사회양극화 변화양상에 대하여는 분석이 불가능하므로 2차년도 연구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2) 연구방법

먼저 선행연구 및 관련 자료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양극화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양극화 계측 방법론, 우리나라 양극화 실태·원인·전망 그리고 대책방안 등 양극화 현상에 관한 기본적 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선행연구 및 관련 자료의 분석을 통해 파악한 내용은 어촌양극화 문제가 우리나라 전체 양극화 문제와 연계되어 있으며 대책방안 또한 어촌의 양극화를 완화 또는 해소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그리고 통계청 「어가경제조사」의 3년간 기초자료(2003~2005년)를 분석하여 소득 양극화지수를 측정하여 현시점에서의 어촌 양극화 실태를 파악하고 아울러 농가 및 도시가구와의 비교·분석 한다. 또한 수협중앙회에서 발간하고 있는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을 바탕으로 시간흐름에 따른 양극화 정도를 분석하여 연구내용을 보완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소득 불평등도를 지니계수, 일반화된 엔트로피지수, 소득5분위배율로 측정하여 소득이 고르지 못한 어촌실태와 계층이동 분석을 통하여 어촌의 소득불평등이 개선 또는 악화되었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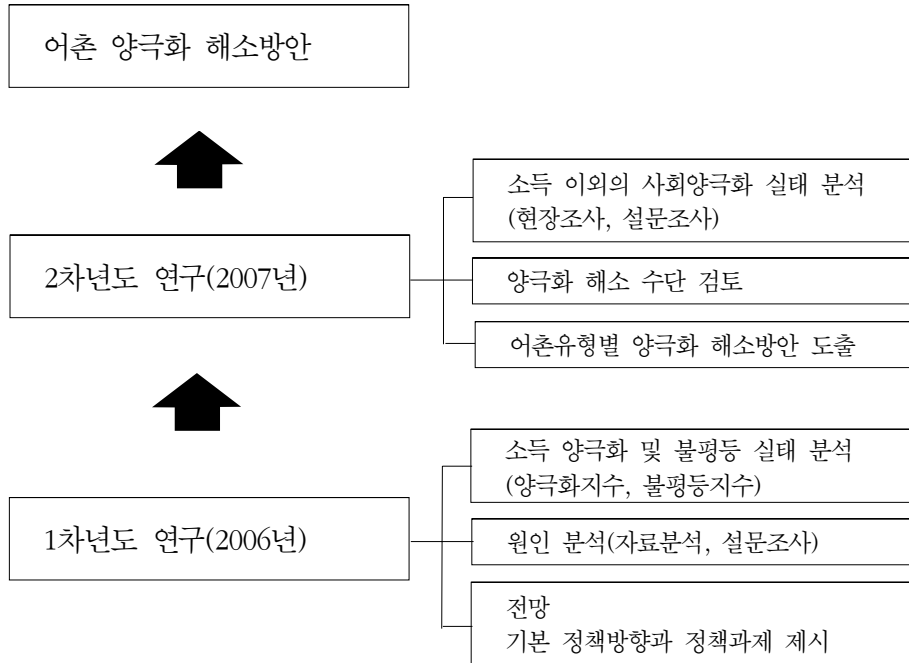
다양한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양극화의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어업인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어촌현장에서 느끼는 양극화의 실태와 그 원인에 대한 인식을 수렴하여 통계자료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덧붙여 어업인이 바라는 향후 어촌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방향도 함께 설문 조사하였다.

3) 연구추진체계

본 연구는 2개년에 걸쳐 수행하는데 이는 어촌양극화에 관한 선행연구가 전무한 데다 관련 통계자료의 부족으로 기초데이터 분석이 용이하지 않아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이 자료를 생성해야 하고 전국 어촌의 양극화 실태와 변화양

상을 분석하는 등 연구범위와 내용의 방대하여 장시간의 연구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1차년도의 주된 연구는 어촌의 소득 양극화 실태와 변화양상, 원인 등 주로 통계자료 분석에 의한 기초실태파악에 주력한다.

2차년도의 연구에서는 소득부문을 제외한 어촌의 사회양극화에 대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농촌과 도시와 비교 분석한다. 그리고 1차년도의 연구결과를 반영한 소득 양극화-불평등 정도, 종사유형 그리고 입지유형의 3가지 요인으로 유형화한 9개 어촌(계)을 대상으로 양극화해소수단 및 방안과 관련하여 설문조사, 심층 사례조사의 분석 등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어촌유형별 양극화 해소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어촌양극화와 관련하여 본 연구가 최초로 수행되는 연구로 선행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타 부문의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어촌양극화 연구실정과는 달리 최근 정부출연 연구기관, 삼성경제연구소 등 사설연구기관에서 양극화 문제와 관련하여 다수의 연구가 나왔거나 진행 중에 있어 양극화 연구와 관련하여 결과물이 어느 정도 축적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재정경제부 등 여러 정부부처에서도 양극화를 진단하고 향후 정책방향과 정책과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이들 연구나 자료는 대체로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양극화의 개념과 왜 양극화가 문제가 되는가 그리고 우리나라 양극화 실태를 외국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양극화의 정도와 위치를 알려주고 아울러 양극화의 원인에 대한 설명과 향후 전망 그리고 대안 등을 제안하고 있어 우리나라 전체 양극화 현상에 대하여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들 연구는 어촌의 양극화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론과 어촌의 양극화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었지만 어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니므로 어촌의 양극화 실태 파악 및 해소방안을 도출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한편 1차산업을 생계수단으로 하고 어촌과 유사한 농촌의 양극화와 관련한 연구는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주도적으로 담당하여 연구가 많이 진척되고 있다. 이들 연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동필 외의 ‘도농간 소득 및 발전 격차의 실태와 원인 분석’ (2004)과 박시현 외의 ‘경제활동기회의 농촌지역간 차이 분석’ (2005) 연구는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도농간 소득격차 완화방안에 관한 연구이다.¹⁾ 농가소득증대와 농촌개발을 위해 추진한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와 국내외 지역활성화 성공사례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소득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관련 제도의 정비와 효율적인 추진방안

1) 이동필 외, 「도농간 소득 및 발전격차의 실태와 원인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박준기 외, 「저소득농가의 농가경제 실태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4.

을 강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편 김정호의 ‘농업부문의 양극화 실태와 정책과제’ (2005)는 농업부문의 양극화는 농업구조조정의 필연적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있다.²⁾ 마지막으로 강혜정의 ‘농가소득 양극화, 그 실태와 정책과제’ (2006)는 소득부문에 한정하여 양극화 실태와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있다.³⁾ 이들 농업부문 및 농촌의 양극화 관련 연구는 본 연구의 방향 및 내용을 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2) 김정호, “농업부문의 양극화 실태와 정책과제”, 『산업 양극화 문제 해소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5. 8.

3) 강혜정, “농가소득 양극화, 그 실태와 정책과제”, 『농업·농촌의 양극화 실태와 대응(제14회 연례심포지엄 주제발표 논문집)』, 사단법인 농정연구센터, 2006.

제2장

양극화의 개념과 분석 방법

1. 양극화 개념

1) 양극화 논의의 혼란

최근 우리나라에서 양극화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견해 또한 분분한데 이는 양극화 개념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못하고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양극화 용어를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논의의 초점이 흐려졌기 때문이다. 경제부문 간 격차, 사회적 격차 등 모든 분야에서 무차별적으로 양극화의 표현이 사용되면서 양극화 개념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정책 부문에서의 양극화는 산업·기업 활동의 부문 간 격차 확대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수출 대 내수, 중화학공업 대 경공업, IT산업 대 비 IT산업, 제조업 대 서비스업, 대기업 대 중소기업 등에서 성과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현상을 양극화 현상으로 통용되고 있다.

한편 사회정책 부문에서는 소득, 고용, 복지, 인적자본 등에서 발생하는 격차 현상이 양극화 개념으로 사용되고 이를 사회 양극화라고도 한다. 경제정책 부문에서의 양극화와 사회정책 부문 즉 사회 양극화는 전혀 별개의 문제가 아니고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즉 기업, 산업, 노동시장 등에서 발생하는 성과 격차가 결국 소득으로 귀결되므로 협의의 개념에서 양극화의 논의는 소득

양극화를 중심으로 전개할 수 있다.⁴⁾

그런데 소득 양극화 개념은 소득불균등 또는 빈곤과 동일시하여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중산층의 감소를 의미하는 소득 양극화와 소득분포가 고르지 못한 상태를 나타내는 소득불균등의 개념을 혼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득 양극화의 심화가 반드시 소득분배구조의 악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더불어 양극화 논의에 혼란이 가중되는 것은 양극화의 발생원인과 배경에 대해서 상반되는 견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가속화되기 시작한 세계화·산업구조 고도화의 흐름 속에서 양극화의 발생은 불가피하며 세계적 현상이라는 불가피론이 자리 잡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경제가 지닌 구조적·제도적 특수성이 양극화를 필요 이상으로 심화시켰다는 ‘대응전략실패론’으로 불균형 성장전략, 외환위기 후 영미식 제도개혁 등이 주 요인이라는 것이다.⁵⁾

양극화가 본질적인 의미와는 관계없이 가계, 기업, 산업 등 각 부문의 성과 격차의 확대현상을 설명하는 통상적인 용어로, 그리고 그 격차라는 것이 소득 불균등과 빈곤과 혼용되면서 개념상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단순히 소득불균등 차원에서 양극화를 이해한다면 양극화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는 견해가 많으나 이는 양극화 개념에 대하여 잘못 인식하는 데에 따른 것으로 양극화는 소득불균등과는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양극화 의미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의가 없을 경우 정책적 대응 측면에서 기존의 대책과 차별성을 갖지 못할 것이며 양극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갈등 문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양극화가 소득불균등이나 빈곤과는 다른 개념이자 문제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엄밀한 개념정의와 이에

4) 소득 양극화뿐 아니라 복지교육 등의 양극화 등 다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확대된 개념에서 사회 양극화에 대한 연구도 있다. 사회의 양극화 문제는 반드시 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적 문제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Gradin(2000)은 교육, 직종, 혹은 종교집단 등 소득 이외의 특성변수들을 이용하여 양극화 문제를 다루었다.

5) 삼성경제연구소, 「소득양극화의 현상과 원인」, 2006. 4.

근거한 지표가 제시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지표에 따른 실태분석과 그 대응방안이야말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동시에 양극화 개념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 양극화의 개념

(1) 양극화의 개념

양극화의 개념은 기존의 소득불평등 관련 지수가 중산층의 쇠퇴 또는 몰락을 알 수 있게 하는 분포의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개념이 양극화(bi-polarization) 또는 다극화(polarization)다. 미국에서 중산층의 몰락을 계측하고 파악하기 위한 연구과정에서 양극화의 개념정의가 구체화되었다.

양극화는 정태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시간에 따른 소득분포 변화라는 동태적 관점에서 파악되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격차의 확대뿐 아니라 중간계층의 감소로 인한 양 집단의 비중과 각 집단의 밀집도가 증가하는 현상도 포함한다. 따라서 양극화의 수위는 두 집단 간 소득격차가 커져도 높아지지만 각 집단 간 소득격차가 불변이거나 집단 내 구성원 사이의 소득격차가 줄어들 때도 높아진다.

양극화 개념을 간단히 표현하면 중산계층이 줄어들면서 소득분포가 양 극단에 밀집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개념상으로는 소득변수의 분포상에서 중간계층이 얇아지는 측면과 양 극단이 두터워지는 측면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양극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양극화지수로서 중산층의 쇠퇴에 주목한 것이 Wolfson지수⁶⁾이고, 양극단이 두터워지는 현상과 관련된 것이 Esteban and Ray의 ER지수⁷⁾이다.

6) M.C.Wolfson, "When Inequalities Diverge",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4, 1994.

7) J. Duclos, J. Esteban, D. Ray, "Polarization : Concept, Measurement, Estimation", *Econometrica*, Vol. 72, 2004.

Wolfson은 중산계층을 중위소득을 가진 인구계층으로 규정하고, 중위소득으로부터의 분산정도가 커질수록 즉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과 여타 계층의 소득차이가 커질수록 양극화가 커지는 것으로 양극화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Esteben and Ray는 양극화를 ‘사회집단이 일정한 특성(소득, 자산 등)에 의해 몇 개의 집단으로 집락화(cluster)되어 한 집단 내부의 동질성은 강화되는(격차는 줄어드는) 한편 집단 간의 이질성도 강화되는(격차가 확대되는) 현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들에 의해 개발된 양극화지수는 궁극적으로 그 사회의 내적 갈등 수준을 나타낸다. 즉 그 지수 값이 큰 사회 내에서는 집단간 충돌의 가능성이 크며, 그 값이 작을 때에는 그 가능성은 낮아진다. 그리고 충돌 가능성은 집단 내의 동질성이 강할수록, 집단 간의 이질성이 강할수록, 상당한 규모를 갖춘 그룹의 수가 적을수록 커진다. 양극화지수는 불평등지수와 비교하여 사회 갈등 내지 사회 불안정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수치이다.⁸⁾

(2)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의 개념 차이

앞에서 언급한 양극화 개념정의에 따르면 양극화는 소득불평등과 빈곤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의 개념상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양극화의 개념은 더욱 분명해진다.

소득불평등에 대한 일반적인 척도는 주어진 모집단에서 개인 간 소득차이를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대개의 소득불평등지수인 지니계수⁹⁾나 소득배율¹⁰⁾은 근본적으로는 분포의 산포도(dispersion)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 소득불평등지수들의 기저에는 부자로부터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득을 이전하는 행위는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¹¹⁾, 소득불평등도를 감소

8) 신동균·전병유, “소득분포의 양극화 추이”, 『노동경제논집』 제28권(3), 2005. 12, p. 80.

9) 지니계수는 계층간 소득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반영하는 지수로 0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균등한 분배를, 1에 가까울수록 불균등한 소득분배를 나타낸다.

10) 소득배율(소득5분위배율)은 모든 가계소득을 크기 순으로 배열하고 이를 5등급으로 분류한 후 최상위 계층과 최하위 계층의 소득배율을 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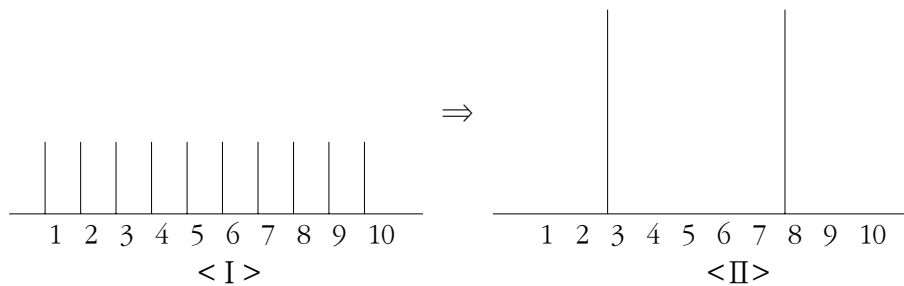
11) 여기에는 소득의 순위가 불변이라는 조건도 포함된다.

시킨다는 피구-달톤의 공리(Pigou-Dalton axion)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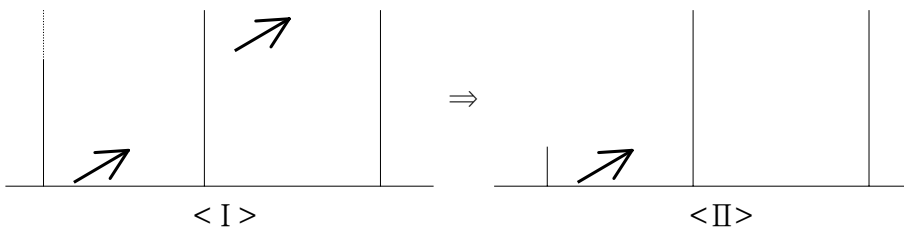
그러나 불평등지수들은 전체 평균(global-mean)으로부터의 차이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 지역평균(local mean) 중심으로 집락화(clustering)되는 현상을 무시하는 특성이 있다. 달리 표현하면 소득불평등지수들은 분포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는 달리 양극화지수는 분포의 집락성에 보다 큰 의미를 두면서 분포의 변동이 지수 값의 변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양극화 개념은 소득불평등지수의 바탕이 되는 피구-달톤의 공리와 배치될 수 있다. 예를 들어보면 <그림 2-1>에서 소득분포상태가 <Ⅰ>에서 <Ⅱ>로 바뀌면 소득불평등은 줄어들었다. 그러나 재분배 이전과 비교하여 재분배 이후에 소득분포가 보다 집락화되었으며 중간계층이 사라진 사회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

<그림 2-1> 불평등은 감소하나 양극화는 심화되는 경우



<그림 2-2> 빈곤은 감소하나 양극화는 심화되는 경우



다음으로 <그림 2-2>는 저소득계층의 상향이동으로 중간층과 고소득층이 모두 증가한 상황을 보여준다. <Ⅰ>의 경우는 양극화가 심화되었다고 판단하기 힘들으나, <Ⅱ>의 경우는 저소득층의 규모가 훨씬 줄어들었음에도 심화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양극화는 빈곤율 증가와도 구분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개념상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밝힌 연구에 의하면 한 소득분포로부터 계산된 불평등지수가 매우 낮다고 하더라도 그 분포가 서로 분리되어 양 극점을 중심으로 집락화되어 있을 때에는(아무리 극점사이의 거리가 가깝다고 하더라도) 소득분포가 양극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집단 사이의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여기에 양극화 현상의 본질이 있으며 소득 불평등과 다른 측면에서 왜 양극화 문제에 대처하고 이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한가를 잘 보여준다.

2. 분석방법과 자료

본 연구에서는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 정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지수 산출에 중점을 둔다. 이에 보완하여 소득 또는 수산물판매액의 분포 변화, 계층이동 실태를 통계 자료로 살펴본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통계자료에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어업인과 수산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는 방법을 채택한다.

다음에서는 이론적인 논의가 필요한 양극화지수와 불평등 지수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분석에 사용된 통계 자료를 제시한다.

1) 소득 양극화 정도의 측정 방법

본 연구는 소득 양극화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양극화지수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Esteban and Ray가 창안한 지수(ER지수)를 사용한다. 소득분포

가 N개의 소득집단으로 대표될 수 있다고 가정하면 ER지수는 어느 한 소득집단에 속해 있는 특정 개인이 다른 소득집단에 대해 느끼는 반감의 정도를 동질성함수와 이질성함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개념에 근거해 있다.

Esteban and Ray(1994)는 서로 다른 소득분포 간 양극화지수 값을 비교하려면 몇 가지 직관적인 공리들이 만족되어야 하는데 이 공리들에 따라 동질성함수와 이질성함수가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Esteban and Ray(1994)의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모집단이 N개의 소득집단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는 제약이 따른다. Esteban et al.(1999)은 이전의 방법을 더욱 발전시켜 연속분포를 몇 개의 극점들로 표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근사오차를 교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방법론이 계속 발전하여 ER지수 중에서 가장 최근에 개발된 Duclos et al.(2004)에 근거한 방법론을 채용한다.

확률 변수인 소득 y 는 유한 폐구간 $[a, b]$ 에서 밀도함수 f 로 표시되고 y 는 평균(μ)이 1이 되도록 정규화되어 있다고 하자. 이 밀도함수 f 는 다음과 같은 N개의 극점들로 구성된 집합(ρ)으로 표시할 수 있다.

$$\begin{aligned}\rho &= (y_0, y_1, \dots, y_n; \pi_1, \dots, \pi_n; \mu_1, \dots, \mu_n) \\ a &= y_0 < \dots < y_n = b \\ \pi_i &= P(y_{i-1} < y < y_i) = \int_{y_{i-1}}^{y_i} f(y)dy, i = 1, \dots, n \\ \mu_i &= E(y \mid y_{i-1} < y < y_i) = \frac{1}{\pi_i} \int_{y_{i-1}}^{y_i} yf(y)dy\end{aligned} \quad \dots\dots\dots \text{식(1)}$$

여기서 π_i 는 특정 구간 내에 놓일 확률이고, μ_i 는 각 구간 내의 조건부 평균값이다. Esteban and Ray(1994)가 제시한 다극화 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R(\alpha, \rho)^N = \sum_i \sum_j \pi_i^{1+\alpha} \pi_j |\mu_i - \mu_j| \dots\dots\dots \text{식(2)}$$

이 ER지수는 동질성함수(identification function, π_i^α)와 이질성함수(alienation function, $|\mu_i - \mu_j|$)의 두 행태함수에 의존함을 보인다. α 는 다극화 지수의 민감도를 나타내는 모수로서 다극화 지수를 불평등지수와 구별하게 하는 값이다. α 가 클수록 ER지수는 지니계수와 차이가 커진다. α 가 0이면 ER지수는 지니계수와 같아져 지니계수가 ER지수의 특별한 경우라 볼 수 있다. Esteban and Ray(1994)는 다극화 지수에 대한 일정한 공리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0 \leq \alpha \leq 1.6$ 을 만족해야 함을 보였다.

연속밀도함수를 몇 개의 극점으로 표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 Esteban et al.(1999)과 Duclos et al.(2004)은 ER지수에 근사한 다극화의 과장된 부분을 조정하는 다음과 같은 개선된 다극화 지수를 제안하였다.

$$P(f, \alpha, \beta) = ER(\alpha, \rho) - \beta \epsilon(f, \rho) \dots\dots\dots \text{식(3)}$$

여기서 $\epsilon(f, \rho)$ 는 근사에 따른 오차를, β 는 근사오차에 두는 가중치를 나타내는 모수 값이다. 근사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ρ^* 가 선택해야 하는데, 앞의 연구들은 극점들의 위치를 선택할 때 인접한 두 구간을 분할하는 소득 수준이 두 구간의 조건부 평균값의 가중평균이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 모형에서 양극화는 극점이 두 개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소득분할점은 하나만 존재한다. 이를 y ,이 분할점에서의 분포함수를 π 라 하면 다음 식이 성립한다.

$$\pi = \int_{\alpha}^y f(x) dx \dots\dots\dots \text{식(4)}$$

한편 π 에서 평가한 로렌즈곡선의 세로축 길이를 $L(\pi)$ 라 하면 각 그룹의 평균은 $\mu_1 = L(\pi)/\pi$, $\mu_2 = \{1 - L(\pi)\}/(1 - \pi)$ 이다. 이를 이용하면 식 (2)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begin{aligned} ER(\alpha, \rho) &= (\mu_2 - \mu_1) \{ \pi^{1+\alpha} (1 - \pi) + (1 - \pi)^{1+\alpha} \pi \} \dots \text{식(5)} \\ &= \{ \pi^\alpha + (1 - \pi)^\alpha \} (\pi - L(\pi)) \end{aligned}$$

그리고 연속변수의 분포를 극값으로 표시하는 데 따라 발생하는 오차는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epsilon(f, \rho) &= G(\pi) - (\pi - L(\pi)) \\ G(\cdot): \text{소득분포의 지니계수} &\dots \text{식(6)} \end{aligned}$$

개선된 ER지수는 다음과 같다.

$$P(f, \alpha, \beta, y) = \{ \pi^\alpha + (1 - \pi)^\alpha \} (\pi - L(\pi)) - \beta \{ G - (\pi - L(\pi)) \} \dots \text{식(7)}$$

여기서 근사에 따른 오차를 최소화하는 최적의 소득분할점은 전체 소득의 평균값으로 알려져 있다($y = \mu$). $\mu = 1$ 이므로 오차를 최소화한 ER지수는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begin{aligned} P(f; \alpha, \beta) &= \{ \pi_\mu^\alpha + (1 - \pi_\mu)^\alpha \} D - \beta (G - D) \\ D &= \pi_\mu - L(\pi_\mu), : \pi_\mu = \int_a^\mu f(x) dx, \dots \text{식(8)} \end{aligned}$$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양극화지수는 개선된 ER지수로 이 식에 기초해 있다.¹²⁾

12) 아래에서는 '개선된 ER지수'를 'ER지수'로 통칭한다.

2) 소득불평등도 측정 방법

소득불평등도는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될 수 있고 각각의 방법은 나름대로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분산은 가장 간단한 불평등도 측정 방법의 하나인데 측정단위에 의존하는 단점이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시간에 걸친 소득불평등도 변화 양상, 국가간 또는 지역간의 소득불평등도 비교, 각 소득원의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설명력, 소득의 하위 그룹 내 격차와 하위 그룹 간 격차가 소득불평등에 기여하는 정도 등의 과제에 직면하여 가장 적절한 불평등지수를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평등지수가 획득해야 하는 바람직한 성질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성질이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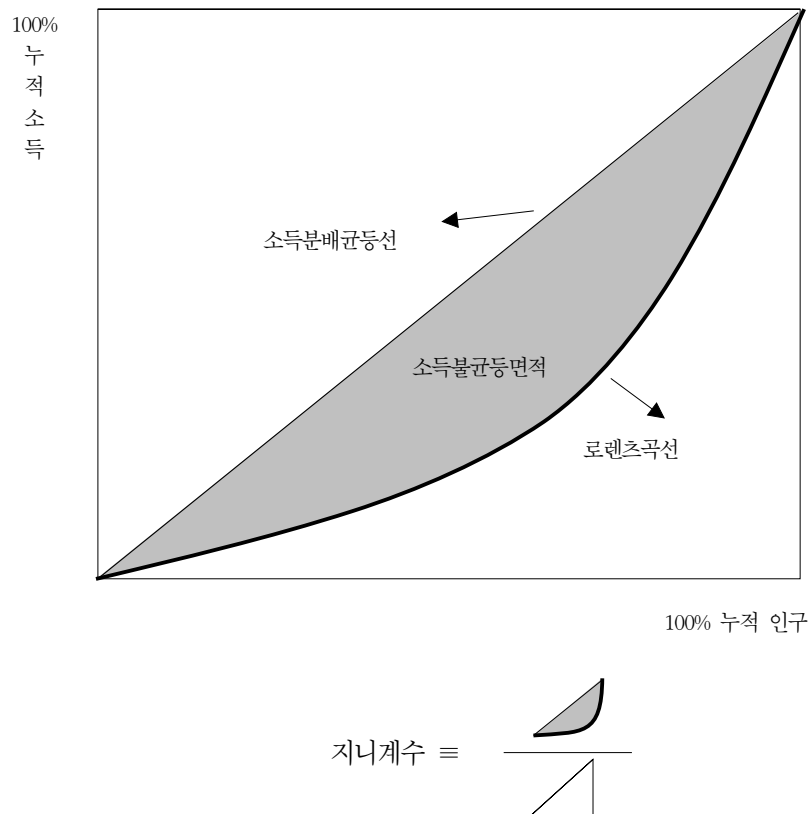
첫째,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 낮은 계층으로의 소득 이전은 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Pigou-Dalton Transfer Principle). 이것은 불평등지수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다. 둘째, 불평등지수는 소득의 절대적 분포가 아니라 상대적 분포에 좌우되어야 한다(Population Principle). 이는 다시 말해 동일한 소득분포를 가진 두 집단을 통합하더라도 불평등지수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모든 소득이 같은 비율로 변하면 불평등지수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Income Scale Independence). 넷째, 불평등지수는 개인의 특성에 대해 독립적이어야 한다(Anonymity or Symmetry). 끝으로 전체 소득분포의 불평등지수는 그러한 소득분포를 이루는 하위 집단들의 불평등지수와 일관된 관계에 있어야 한다(Decomposability). 부연하면 전체 집단의 불평등지수는 각 하위 집단 내의 불평등지수와 하위 집단 간의 불평등지수로 분리될 수 있다는 것으로 실증분석에서 매우 유용한 성질이다.

실증분석에서 많이 사용되는 불평등지수는 지니계수, 앳킨슨(Atkinson) 계열의 불평등지수와 일반화된 엔트로피(Generalized Entropy: GE) 계열의 불평등지수(GE지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니계수와 GE지수를 중심으로 불평등도를 측정하고 더 간단한 방법인 소득5분위배율을 이에 덧붙여 제시한다.

(1) 지니계수

지니계수는 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매우 널리 사용되어온 것으로 통계학자 지니(Gini)에 의해 고안되었다. 대표적인 불평등지수여서 통계기관, 다른 부문의 연구기관에서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불평등 면에서 여가 부문과 다른 부문을 비교하는 데 편리하다.

〈그림 2-3〉 로렌츠곡선과 지니계수



지니계수를 보는 하나의 방식은 로렌츠(Lorentz)가 고안한 로렌츠곡선을 이용하는 것이다. 로렌츠곡선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부터 가장 부유한 사람까지

정렬한 인구의 비율이 횡단축을 나타내고 인구의 x%에 의해 향유되는 소득의 비율이 종단축을 나타낸다. 이 때, 인구의 0%가 0%의 소득을 향유하며, 100%는 모든 소득을 향유한다. 따라서 로렌즈곡선은 단위 사각형의 한쪽 꼭짓점에서 정반대쪽 꼭짓점까지 움직인다. 만일 모든 사람이 동일한 소득을 가진다면 로렌즈곡선은 단순히 사선(45도선, 소득분배균등선)이 되지만, 완전한 평등이 아닌 상태에서는 하위 소득집단들은 비율적으로 더 낮은 비율의 소득을 향유할 것이다. 따라서 로렌즈 곡선은 일반적으로 완전한 평등의 상태를 제외하고는 사선 아래쪽에 있을 것이며, 그 기울기는 인구의 점점 더 부유한 부분으로 움직일수록 점점증할 것이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균등선 아래쪽의 삼각형 면적과 소득분배균등선과 로렌즈곡선 사이 면적(소득불균등면적)의 비율로 정의된다. 이밖에도 지니계수를 정의하는 방식은 다양하며, 약간의 조작을 하면 모든 쌍의 소득들 간의 차이의 절대값의 산술평균으로 정의되는 상대 평균차의 정확히 절반이 된다. 불평등도가 가장 높을 때 지니계수는 1, 완전히 균등할 때 0의 값으로 나타난다.

$$Gini = 1 - 2 \int_0^1 L(z) dz \quad \dots\dots\dots \text{식(9)}$$

$$L(z) \equiv \int_0^1 s(z') dz', s(z'): \text{소득점유율의 확률밀도함수}$$

(2) GE지수

GE지수를 본 연구에서 채용한 것은 불평등지수가 획득해야 하는 다섯 가지 성질을 모두 만족하고 모집단을 구성하는 하위 그룹별 불평등지수의 분리와 소득원별 불평등지수의 분리가 쉬워 실증분석에서 활용할 점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GE지수를 이용하면 전체 불평등도에 기여하는 유형별 어가의 그룹 내 불평등도와 그룹 간 불평등도의 기여 정도, 전체 불평등도에 기여하는 소득원별 불평등도의 기여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GE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GE(\alpha) = \frac{1}{\alpha(\alpha-1)} \left\{ \frac{1}{n} \sum_{i=1}^n \left(\frac{y_i}{\bar{y}} \right)^\alpha - 1 \right\} \dots\dots\dots \text{식(10)}$$

n : 총 가구수, y_i : i 번째 가구의 소득, \bar{y} : 평균 가구소득

파라미터 α 는 가구소득의 전체분포 상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부여되는 가구 간 소득차이에 대한 가중치로 모든 실수 값을 취할 수 있다. GE지수는 α 값이 작을수록 저소득층의 소득변화에 민감하며, 반대로 α 값이 클수록 고소득층의 소득변화에 민감하다.

GE지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파라미터 α 값은 0, 1, 2이다. α 가 0이면 저소득층의 소득격차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고 α 가 2이면 고소득층의 소득격차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α 가 1이면 전체 소득분포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α 가 0 또는 1이면 GE지수는 로피탈정리(L'Hopital rule)로 식 (3-1), 식 (3-2)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들을 각각 Theil 지수 I, Theil 지수 II라 부른다. 만일 α 가 2이면 GE지수는 변동계수(CV: coefficient of variation)의 제곱의 0.5배와 같아진다. 본 연구는 0 또는 음(陰)의 소득에서도 정의되며 요인별 분리가 용이하여 실증분석에서 널리 이용되는 GE(2) 지수를 이용한다. 불평등도가 가장 높을 때 GE(2) 지수 값은 $n-1$, 완전히 균등할 때 0이다.

$$GE(0) = \frac{1}{n} \sum_{i=1}^n \log \left(\frac{\bar{y}}{y_i} \right) \dots\dots\dots \text{식(11-1)}$$

$$GE(1) = \frac{1}{n} \sum_{i=1}^n \frac{y_i}{\bar{y}} \log \left(\frac{\bar{y}}{y_i} \right) \dots\dots\dots \text{식(11-2)}$$

$$GE(2) = \frac{1}{2} CV^2 \dots\dots\dots \text{식(11-3)}$$

$$CV = \frac{1}{\bar{y}} \left\{ \frac{1}{n} \sum_{i=1}^n (y_i - \bar{y})^2 \right\}^{1/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GE지수는 모집단을 K개의소집단으로 구분할 경우 그룹 내 불평등(within-group inequality) 지수와 그룹 간 불평등(between-group inequality) 지수로 분리할 수 있다. 그룹 내 불평등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이 정의에 따르면 그룹 내 불평등지수는 가중치가 각 그룹의 모집단 내 비중 및 소득비율인 각 그룹별 불평등지수의 가중 합이다.

$$I_w = \sum_{k=1}^K v_k^\alpha f_k^{1-\alpha} GE_k(\alpha) \quad \dots\dots \text{식(12)}$$

k : 가구유형, f_k : k번째 유형에 속하는 가구 비율,
 v_k : k번째 유형의 가구소득 비율, $GE_k(\alpha)$: k번째 유형 내 불평등지수

그룹 간 불평등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I_b = \frac{1}{\alpha(1-\alpha)} \left\{ \sum_{k=1}^K f_k \left(\frac{\bar{y}_k}{\bar{y}} \right)^\alpha - 1 \right\} \quad \dots\dots \text{식(13)}$$

\bar{y}_k : k번째 유형 가구의 평균소득

일반적으로 총소득은 여러 가지 소득원으로 구성되므로 이러한 소득원별로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를 살펴보는 일은 소득분배 형태의 결정요인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전체 불평등도(I)를 소득원천(j)별 불평등의 절대적 기여도(S_j)의 합($I = \sum_{j=1}^J S_j$)으로 분리하여 나타낼 수 있다면 불평등도를 높이는 요인(소득원)과 이를 완화하는 요인(소득원), 그리고 그 기여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만일 S_j 가 양이면 j 번째 소득원은 소득불평등을 확대하는 요인이고, S_j 가 음이면 j 번째 소득원은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요인이다.

j 번째 소득원의 소득불평등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s_j)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s_j 는 비율적으로 나타낸 기여도로서 절대적 불평등 기여도인 S_j 와 구분된다.

$$s_j = \frac{S_j}{I} \dots\dots\dots \text{식(14)}$$

$$\sum_{j=1}^J s_j = 1$$

Shorrocks(1982)은 불평등지수가 지녀야 할 성질들이 만족되면 s_j 가 다음 식 (15)와 같이 정의되며 여기서 정의된 s_j 를 이용할 경우 어떤 불평등지수에 대해서도 요인별 분리 방법은 유일함을 증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Shorrocks이 제시한 s_j 의 정의를 이용하여 소득원별 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한다.

$$s_j(I) = \frac{S(Y_j, Y)}{I(Y)} = \frac{Cov(Y_j, Y)}{\sigma^2(Y)} \dots\dots\dots \text{식(15)}$$

GE지수 중에서 GE(2)를 사용하면 Shorrocks가 제시한 s_j 의 정의에 따라 j 번째 소득원에 의한 불평등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S_j = s_j GE(2) = \rho_j \frac{\mu_j}{\mu} \sqrt{GE(2) GE_j(2)} \dots\dots\dots \text{식(16)}$$

ρ_j : j 번째 소득원과 전체소득과의 상관계수,
 μ : 전체소득의 평균, μ_i : j 번째 소득원의 평균

(3) 소득5분위배율

소득 수준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배율을 말한다. 어가에 적용하면 어가를 소득별로 20%씩 5개 분위로 나눴을 때 가장 높은 5분 위 소득을 가장 낮은 1분위로 나눈 배율이다. 소득배율은 고소득자와 저소득 자간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배율이 높을수록 소득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간단하게 구할 수 있으면서 직관적으로 이해가 쉬워 지니계수와 함께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데 널리 쓰이고 있다.

3) 자료

본 연구는 다른 산업 부문과 어업 부문의 격차, 농가·도시가구와 어가의 경제적인 격차를 살피고 어가 내의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실태를 분석한다. 여기에 쓰인 자료는 1990년 이후의 산업 부문별 GDP, 부문별 가구소득, 부문별 어업생산액 등과 통계청의 「어가경제조사」, 「어업총조사」, 「농가경제조사」, 「어가경제조사」의 원자료, 수협중앙회의 「어촌계분류평정 및 현황」 등이다.

이 가운데 「어가경제조사」의 원자료는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어가의 소득자료와 기본통계로서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실태를 분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2003~2005년 자료만 확보가 가능하여 분석에 상당한 제약이 따랐다.¹³⁾ 분석의 기본 단위가 될 「어가경제조사」의 ‘어가’는 가구주나 가구원 중에서 어업에 종사하면서 연간 1개월 이상 판매를 목적으로 해면에서 수산 동식물의 포획·채취나 양식어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있는 가구이다. 근해어업 어가가 포함되어 있으나 연안의 어로어업, 양식어업에 종사하는 어가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조사에서 어업임금노동자 가구는 제외되어 있다.

「어가경제조사」의 제약을 보완하기 위해 공식통계는 아니지만 수협중앙회가 발간하는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의 1995·2000·2005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는 어촌계를 발전수준별, 종사유형별, 입지유형별로 분류·평정하여 어촌계 육성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매년 제공되고 있다. 이 자료는 법적으로 승인된 공식통계가 아니어서 자료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개별 어가의 소득분포를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으나 전국의 모든 어촌계를 대상으로 어가수, 평균 어가소득, 생산기반 등 17개 항목의 현황을 수록하여 현재로서는 통계청의 「어가경제조사」를 보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전수조사이므로 지역별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종사유형별로 어선어업·양식어업·복합어업 형, 입지유형별로 도시근교·

13) 통계청의 「어가경제조사」는 전국 276개 조사구에서 표본어가를 대상으로 어가의 수입, 지출, 노동시간, 자산 및 부채 등의 통계를 수록하고 있다. 2003~2005년 자료는 2000년 어업총조사에서 조사된 81,571어가를 모집단으로 한다.

취약지구·연안촌락 형이 구분되어 다양한 유형별로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도 이 자료의 어촌계 유형 구분을 따랐는데 그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1〉 어촌계의 유형 구분

구 분		설 명
종사유형	어선어업형	어촌계원 대다수 또는 절대적인 생산기반이 어선어업을 주 소득원으로 하는 어촌계
	양식어업형	마을어업 및 양식어업을 주 소득원으로 하는 어촌계(육상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 포함)
	복합어업형	어선어업형과 양식어업의 세력이 비슷한 어촌계
입지유형	도시근교형	시·군·읍 소재지 및 인접의 어촌계로 생활여건이 도시형인 어촌계
	취약지구형	교통·통신이 불편한 낙도 벽지 및 접적지역 내에 위치한 어촌계
	연안촌락형	도시근교형 및 취약지구형이 아닌 어촌계

제3장

어촌 양극화의 실태 분석

1. 어촌과 농촌·도시 간 소득격차

최근 5년 사이 어가소득은 농가·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에 비해 증가 비율이 높아졌지만 농가와 도시근로자가구에 비해 어가의 경제적 지위는 여전히 낮은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표 3-1〉 참조).

외환위기 이후 어가와 농가 모두 가구소득이 크게 감소했다가 증가하고 있는데 어가의 증가율이 농가보다 더 높다. 이에 따라 2005년 농가소득에 대비한 어가소득의 비율이 92%로 높아져 1990년대 벌어졌던 소득격차가 해소되고 있다. 도시근로자가구와 어가소득의 격차도 약간씩 좁혀지고 있다.¹⁴⁾ 그러나 2005년 도시근로자가구소득에 대비한 어가소득의 비율은 72%에 불과하여 아직 크게 낮은 수준이다. 외환위기를 전후로 벌어진 소득격차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1990년 이후부터 살펴보면 어가는 농가와의 소득격차를 1990년 수준 이상으로 회복했지만 도시근로자가구와의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도시근로자가구와 비교할 때 어가와 농가의 소득 수준이 하향 평준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어촌·농촌과 도시의 소득격차는 각각의 기반 산업인 어업·농업과 제조업·서비스업의 산업간 격차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14) 2003년부터 도시가구와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2003년부터 「어가경제조사」의 작성 범위가 2종 겸업가구까지 확대된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3-1〉 부문별 실질 가구소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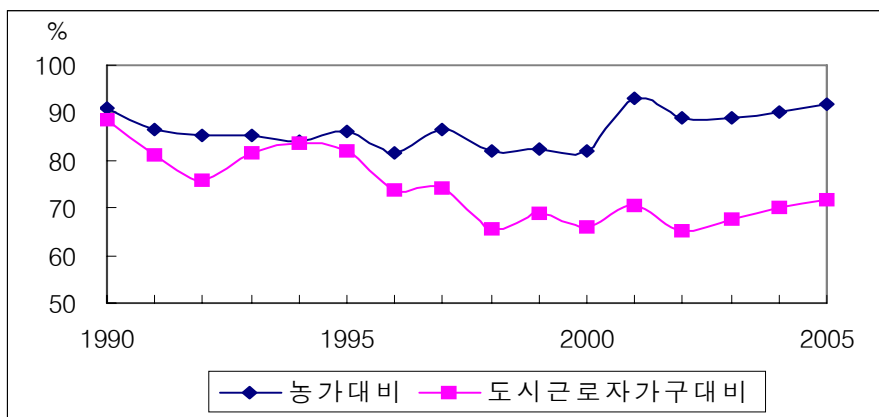
단위 : 천 원, %

구 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최근5년간 증가율	연평균 증가율
어 가	17,222	21,991	18,875	25,070	32.8	2.5
농 가	18,945	25,530	23,072	27,284	18.3	2.5
도시근로자가구	19,449	26,853	28,643	34,893	21.8	4.0

주 : 2000년 기준 가치로 환산한 금액임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그림 3-1〉 농가 및 도시근로자가구 대비 어가소득의 비율 추이



자료 : 통계청의 통계정보시스템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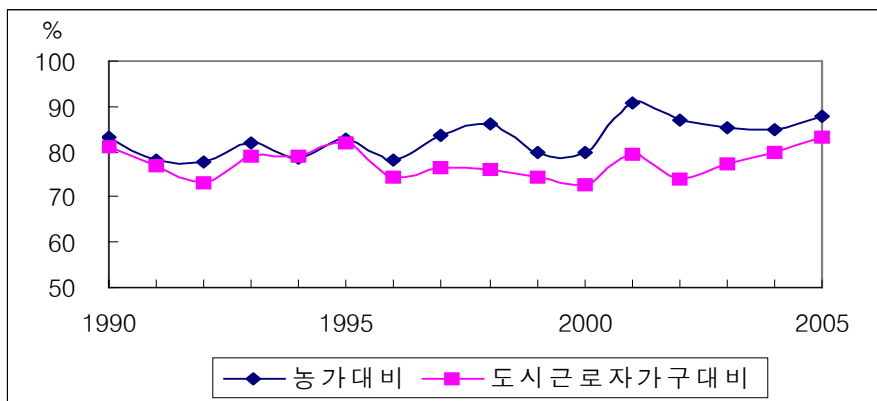
가구원당 소득비율은 양상이 좀 다르다. 농가에 대비한 어가의 소득비율 추이는 가구소득이나 가구원당 소득이나 비슷하지만 도시근로자가구에 대비한 추이는 가구소득 격차보다 가구원당 소득의 격차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와 달리 어촌, 농촌 모두 비슷한 비율로 가구당 인구가 감소한 데 힘입은 것이다.¹⁵⁾ 2005년 가구원당 소득비율은 농가 대비 어가가

15) 가구소득과 마찬가지로 가구원당 소득도 2003년부터 도시가구와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 또한 2003년부터 「어가경제조사」의 작성 범위가 2종 겸업가구까지 확대된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88%, 도시근로자가구 대비 어가가 83%로 1995년 수준을 회복했다(〈그림 3-2〉 참조).

가구원당 비율로 보면 격차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젊은층의 이탈에 따른 어촌 사회의 고령화가 있다. 어가소득 구성에서 사업소득인 어업소득·점업소득의 비중이 작아지고 사업외소득, 이전소득 등을 포괄하는 기타소득의 비중이 커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업소득이 위축되는 것은 어촌 경제의 자생력이 저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컨대 가구원당 소득격차의 완화는 순전히 젊은층이 중심이 된 가구원수 감소에 따른 것이지 어촌 경제가 도시와의 격차를 줄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림 3-2〉 농가 및 도시근로자가구 대비 가구원당 어가소득의 비율 추이



자료 : 통계청의 통계정보시스템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함

최근 10년 사이 가구의 종사자 1인당 주 취업부문 소득을 살펴보면 도시근로자가구의 근로소득은 큰 폭으로 늘어났으나 어가의 어업소득은 감소하여 근로소득의 30% 수준에 그치고 있다(〈표 3-2〉 참조).

이에 따라 어업소득만으로는 어가의 가계를 점점 더 운영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주 소득원의 가계비 충족도(가계지출에 대비한 주 소득의 비율)에서도 잘 드러난다. 어가와 농가는 60% 미만에서 계속 하향 추세에 있고 도시

근로자가구는 110%대에서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3-3〉 참조). 도시근로자가구가 소득원이 안정적인 데 반해 어가와 농가는 다른 소득원을 더 많이 개발해서 가계비를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표 3-2〉 종사자 1인당 어업소득·농업소득·근로소득 추이

단위 : 천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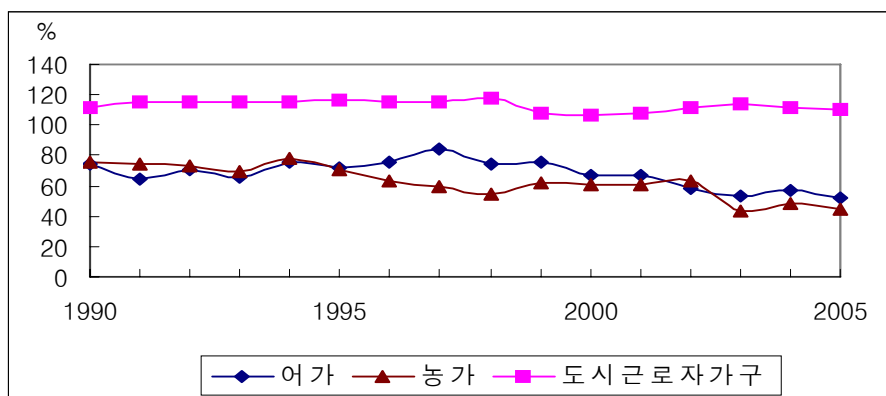
구 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4년
어업소득(어가)	5,602 (48.0)	6,500 (43.4)	5,090 (31.9)	5,605 (30.0)
농업소득(농가)	4,485	5,584	5,393	5,291
근로소득 (도시근로자가구)	11,669	14,987	15,961	18,687

주 : 2000년 기준 가치로 환산한 금액임

괄호 안의 수치는 도시근로자가구에 대비한 비율임

자료 : 통계청의 통계정보시스템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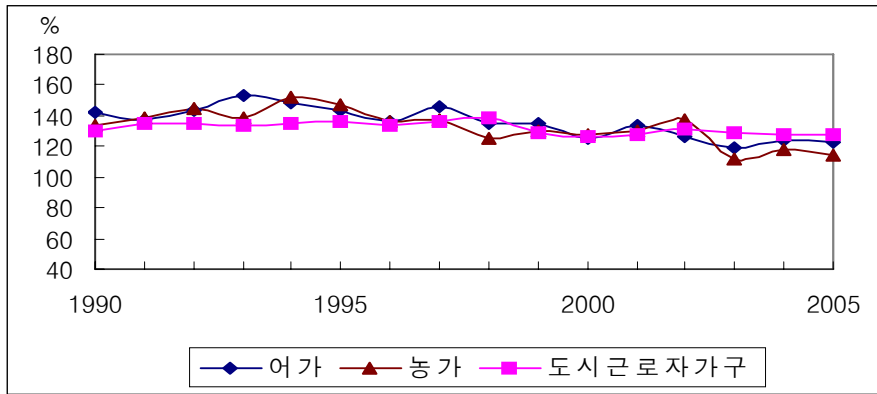
〈그림 3-3〉 주 소득원의 가계비충족도 추이



주 : 주 소득원의 가계비충족도=주 소득(어업소득, 농업소득, 근로소득)÷가계지출(가계비)×100(%)

자료 : 통계청의 통계정보시스템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함

〈그림 3-4〉 가구소득의 가계비충족도 추이



주 : 가구소득의 가계비충족도=가구소득÷가계지출(가계비)×100(%)

자료 : 통계청의 통계정보시스템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함

다른 소득을 포함한 가구소득의 가계비 충족도(가계지출에 대비한 가구소득의 비율)는 어가가 도시근로자가구 수준에 많이 접근해 있다(〈그림 3-4〉 참조).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도시와 농어촌의 절대적인 생활수준 격차를 간과할 위험이 있다.

2. 어촌의 양극화 실태 분석

어촌 내의 소득 양극화 실태는 현재의 시점에서 다른 부문과 비교하여 심각성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과 과거에서부터 양극화 정도의 변화를 살피는 것의 두 가지 방향으로 분석할 수 있다. 전자의 분석에는 「어가경제조사」의 2003~2005년 소득 관련 원자료를, 후자의 분석에는 「어촌계분류평정 및 현황」의 1995·2000·2005년 소득 관련 자료를 사용하였다.

아울러 같은 방식과 자료로 어촌 내의 소득 불평등 실태도 함께 살펴본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앞서 언급한 대로 양극화 정도를 측정하는 ER지수와 불

평등 정도를 재는 지니계수·GE지수·소득5분위배율을 구하는 것이고 이에 덧붙여 최근 10년 사이의 계층이동 실태와 수산물 판매금액별 분포를 분석한다.

1) 소득 양극화 실태와 변화

(1) 현재의 양극화 실태

양극화 정도를 측정하는 양극화지수(이하 ER지수라 함)에서 $\beta=1$ 로 두고 α 값을 1.0, 1.3, 1.6으로 변화를 주면서 어가소득과 어업소득의 양극화지수를 측정하여 <표 3-3>으로 제시하였다. α 값을 세 가지로 지정한 것은 다른 부분의 연구와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기 위해서이다. 현재 가용한 다른 연구결과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측정한 2003~2004년 농가소득의 ER지수와 신동균 외(2005)가 측정한 2003년 도시가구소득의 ER지수가 있다.

농가소득의 ER지수, 도시가구소득의 ER지수 그리고 어가소득의 ER지수를 비교할 때 어가소득이 농가소득보다는 수치가 다소 높고 도시가구소득과는 미세하게 높은 수준이었다(<표 3-3> 참조). 이로써 어가가 농가보다는 양극화 정도가 심하고 도시가구와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표 3-3> 어가·농가·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 ER지수 비교

구 분		$\alpha=1.0$	$\alpha=1.3$	$\alpha=1.6$
2003년	어가소득	0.176	0.122	0.079
	농가소득	0.167	-	-
	도시가구소득	0.175	0.121	0.077
2004년	어가소득	0.172	0.118	0.074
	농가소득	0.168	-	-

자료 : 신동균 외, 소득분포의 양극화 추이, 노동경제논집, 2005. 1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양극화 문제 해소방안 연구 중간보고서」, 2006. 7; 어가의 수치는 직접 계산함

그리고 최근 3년간(2003~2005) 어가유형별 어가소득 및 어업소득의 ER지수를 측정하여 제시한 것이 <표 3-4>이며, α 값이 1.0일 때를 기준으로 할 때 2003~2005년 어가소득의 ER지수는 0.17~0.18을 유지하여 큰 변화는 없으나 2004년 양극화가 다소 완화된 것이 2005년에 다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어업소득의 ER지수는 0.26~0.31로 어가소득에 비해 값이 컸고, 매년 상승하여 어업소득의 양극화가 최근에 계속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처럼 어가소득보다 어업소득의 양극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나 전체 어가소득의 양극화가 어가소득을 구성하는 여러 소득 중에서 어업소득의 양극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3-4> 어가 종사유형별 어가소득·어업소득의 ER지수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어가소득	전 체	0.175	0.172	0.179
	어선비사용	0.151	0.145	0.161
	어선사용	0.170	0.166	0.171
	양식	0.207	0.204	0.202
어업소득	전 체	0.265	0.277	0.309
	어선비사용	0.221	0.213	0.227
	어선사용	0.236	0.255	0.284
	양식	0.500	0.332	0.311

주 : ER지수 값은 $\alpha = \beta = 1$ 일 때를 기준으로 함

어가 종사유형별로 ER지수를 살펴보면 양식어가, 어선사용 어가, 어선비사용 어가 순으로 양극화 정도가 높았고 양식어가의 양극화 정도가 전체 평균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다(<표 3-4> 참조). 이는 양식어가의 양극화 정도가 전체 어가의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3년 동안의 추이를 보면 양식어가의 양극화 정도는 약간씩 완화되고 있는 반면 어선비사용 어가와 어선사용 어가는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 양극화의 변화 실태

① ER지수 분석

어가의 소득 양극화 정도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1995·2000·2005년의 어촌계 평균 어가소득을 ER지수로써 측정하였고 그 결과를 제시한 것이 <표 3-5>이다. 여기서 ER지수 값은 α 와 β 값이 1일 때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때 측정대상은 어촌계 평균 어가소득이므로 소득을 기준으로 어촌계의 평균 어가를 대표로 뽑아 전국적으로 그 분포를 비교했다고 이해하면 된다.

그리고 「어촌계분류평정 및 현황」의 소득자료 가운데 상식적으로 지나치게 높거나 낮아 납득하기 힘든 소수의 극단 값은 배제하였다. 전수조사이기는 하지만 자료의 신뢰성이 공식통계에 비해 떨어지는 탓에 이들 극단 값이 지수를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평균 어가소득이므로 당연히 개별 어가소득에 비해 분산이 작다. 따라서 그 값이 「어가경제조사」 분석 결과보다 낮게 나타난다.

<표 3-5> 어촌계 유형별 소득 ER지수

구 분		1995년	2000년	2005년
전 체		0.050	0.042	0.062
종사유형	어선	0.062	0.054	0.060
	양식	0.041	0.040	0.063
	복합	0.042	0.032	0.064
입지유형	도시근교	0.035	0.047	0.060
	연안촌락	0.055	0.042	0.060
	취약지구	0.047	0.036	0.075

주 : <표 3-4>의 지수 값보다 작은 것은 어촌계별 어가의 평균소득으로 지수를 산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 3-4>과의 직접적인 비교는 의미가 없음

〈표 3-5〉의 1995~2005년 측정 결과를 보면 ER지수가 2000년에 낮아졌다가 2005년에는 1995년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다. 어촌의 양극화 정도는 2000년에 완화되었다가 2005년은 그 이전인 1995년보다 악화되어 전체적으로 어촌 양극화는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종사 및 입지유형별로 어촌계의 양극화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편의상 1995년 어촌계 전체 ER지수인 0.05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고양극화, 낮으면 저양극화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유형별 어촌계의 양극화 정도를 보면 종사유형별로는 어선어업이 ‘고양극화→고양극화→고양극화’ 추이를, 양식어업과 복합어업이 ‘저양극화→저양극화→고양극화’의 변화 추이를 보였다. 입지유형별로 보면 도시 근교와 취락지구가 ‘저양극화→저양극화→고양극화’의 추이를, 연안촌락이 ‘고양극화→저양극화→고양극화’의 추이를 나타냈다. 모든 어촌계 유형에서 어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② 어촌계의 계층이동 실태 분석

어촌계의 소득 양극화 심화가 어느 계층의 이동변화에 따른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상층의 대폭 증가, 반대로 하층의 대폭 증가에 따라 대책방안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촌계의 계층이동은 1995~2005년 「어촌계분류평정 및 현황」을 패널자료로 활용하여 그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계층은 1,900만 원을 기준으로 상·중·하로 구분한다. 이는 2000년의 화폐가치로 환산할 때 1995~2005년 소득의 중앙값과 전체 평균소득이 1,900만 원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¹⁶⁾ 그리고 평균 어가소득이므로 분산이 작아서 이 부근에 밀집하여 어촌계가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1,900만 원을 기준으로 위 아래로 200만 원의 범위를 두어 1,700만 원 미만을 하층, 1,700만~2,100만 원을 중층, 2,100만 원 이상을 상층으로 계층을 구분하였다.

16) 실질가치로 환산한 1995·2000·2005년 소득의 중앙값은 각각 1,911만 원, 1,850만 원, 1,887만 원이고, 전체 평균소득은 각각 1,901만 원, 1,888만 원, 1,943만 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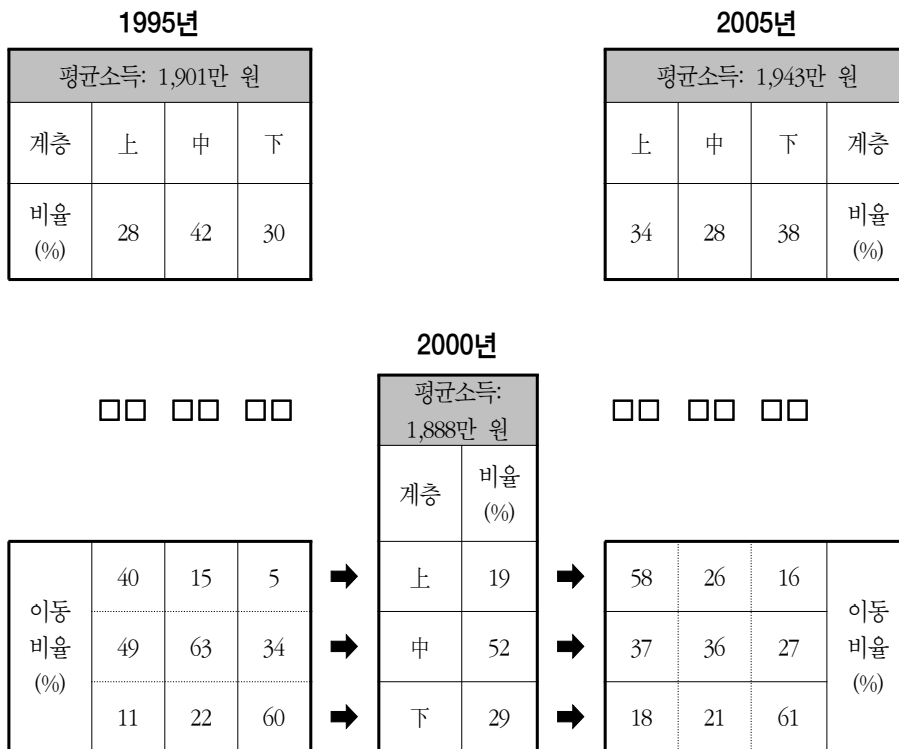
이때 이들 금액은 모두 2000년을 기준으로 한 실질가치이다.

이 계층 기준에 따라 1995년의 분포 비율은 상층·중층·하층이 각각 28%, 42%, 30%이었다가 2000년에 19%, 52%, 29%로 상층이 대폭 줄고 중층이 크게 늘어난다(〈그림 3-5〉 참조). 이는 1995년 상층의 절반가량(49%)이 중층으로 이동한 반면 다른 계층에서 상층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미미했기 때문이다.

2005년에는 사정이 달라져 34%, 28%, 38%로 상층과 하층의 비율이 늘어난다. 이는 2000년 상층의 58%, 하층의 61%가 계층 이동을 하지 않는 가운데 중층의 37%가 상층으로, 중층의 27%가 하층으로 활발하게 이동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1995~2000년에는 중층으로 밀집하였다가 2000~2005년에는 상층과 하층으로 분산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1995년과 2005년을 비교하면 중층이 얇아지는 슬럼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00년에 낮아졌다가 2005년에 1995년 수준보다 높아진 양극화 ER지수의 추이와 일치한다.

〈그림 3-5〉 1995·2000·2005년 어촌계의 소득계층 분포와 계층 이동



이를 1995~2005년의 전체 평균소득과 연계해보면 2000년 가치로 환산한 연도별 전체 평균소득은 1995년이 1,901만 원, 2000년이 1,881만 원, 2005년이 1,943만 원이었다(〈표 3-6〉 참조). 2000년 양극화 정도가 낮았을 때 소득이 가장 낮았고 2005년 양극화 정도가 높을 때 소득도 높아지며 1995년은 그 중간쯤에 있다.

다시 말해 소득 수준과 양극화 정도 사이에 뚜렷한 양(陽)의 상관관계가 확인된다. 이러한 결과는 2000년에 상층에서 중층으로 많이 이동하여 소득이 하향 평준화되면서 양극화가 완화된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2000년의 양극화 완화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

〈표 3-6〉 1995~2005년 유형별 어촌계의 평균 어가소득

구 분		1995년	2000년	2005년
전 체		19,011	18,881	19,431
종사유형별	어선어업	19,632	18,991	18,871
	양식어업	18,774	19,001	19,398
	복합어업	18,803	18,644	20,017
입지유형별	도시근교	20,755	19,707	19,797
	연안촌락	18,202	18,428	19,329
	취약지구	18,728	18,917	18,955

③ 수산물 판매금액별 어가분포 분석

「어업총조사」의 수산물판매금액별 어가분포에서도 양극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계층을 5백만 원 미만, 5백만~2천만 원, 2천만~5천만 원, 5천만 원 이상으로 구분했을 때 2000년과 비교하여 2005년에는 5백만~2천만 원 구간의 어가수 비중만 감소했을 뿐 다른 구간의 어가수 비중은 늘어났다(〈표 3-7〉 참조). 2천만~5천만 원 구간의 증가폭이 작고 이를 5년 사이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거의 정체되어 있다고 본다면 결국 양 극단에서 그 비중이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가를 어선 미보유, 동력선 보유, 양식어업, 어로어업 등의 유형으로 구분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수산물판매금액은 어가소득의 대리지표라기보다는 어업소득의 대리지표이다. 유형에 따라 수산물판매금액이 어가소득에 기여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어가소득의 양극화와 곧바로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특히 어선을 보유하지 않은 어가는 어업소득의 비중이 낮아 다른 소득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앞의 분석에서 확인했듯이 전체적으로 어가소득의 불평등과 양극화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은 역시 어업소득이다. 수산물 판매금액별 어가분포가 양극화되어 있다는 것은 어가소득 역시 이전보다 양극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표 3-7〉 2000년·2005년 수산물 판매금액별 어가분포 추이

구 분(원)		5백만 미만	5백만~2천만	2천만~5천만	5천만 이상
전 체	2000년	35.0	42.6	15.5	6.9
	2005년	41.0	33.6	16.8	8.6
어선미보유	2000년	59.7	35.4	3.0	1.9
	2005년	68.5	25.4	3.9	2.2
동력선보유	2000년	17.0	48.0	24.5	10.6
	2005년	20.0	39.7	26.7	13.5
양식어업	2000년	37.5	35.3	18.2	9.0
	2005년	40.6	27.8	19.3	12.4
어로어업	2000년	33.9	45.8	14.4	5.9
	2005년	41.1	36.1	15.8	7.0

자료 : 통계청, 「어업총조사」, 2000년·2005년

2) 소득불평등의 실태와 변화

(1) 현재의 불평등 실태

① 지니계수 분석

2003~2005년 동안 전체 어가소득의 지니계수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0.44~0.45로 나타났다(〈표 3-8〉 참조). 통상적으로 지니계수가 0.4 이상이면 소득 분배가 불평등하다고 판단하므로 어가소득의 경우 0.442~0.449로 불평등도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어가 이외의 부문과 비교해서도 그러하다. 〈표 3-8〉에서 알 수 있듯이 농가소득의 지니계수와 전국가구(비농어가)·도시근로자가구의 지니계수와 비교할 때 어가소득의 불평등도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된다.¹⁷⁾

17) 사용하는 통계에 따라 지니계수 값이 달리 나타나므로 다양한 통계를 이용한 더 많은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표 3-8〉 어가·농가·전국가구·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 지니계수 비교

구 분	어가	농가	전국가구 (비농어가)	도시근로자가구
2003년	0.442	0.414	0.341	0.306
2004년	0.449	0.401	0.344	0.310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양극화 문제 해소방안 연구 중간보고서』, 2006. 7; 어가의 수치는 직접 계산함

어의 유형별로 지니계수에 의한 불평등도를 살펴보면 어선비사용 어가가 0.35~0.39, 어선사용 어가가 0.41, 양식어가가 0.50~0.56으로 나타났다(〈표 3-9〉 참조). 특히 양식어가의 불평등도가 전체 평균을 훨씬 상회하여 양식어가의 불평등 정도가 전체 어가의 불평등 정도를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양식어가의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것은 다른 유형의 어가에 비해 소득이 넓은 범위로 분포하여 소득격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표 3-9〉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니계수 추이를 보면 전체 어가와 어선사용 어가의 불평등도는 거의 변동 없이 일정한 가운데 어선비사용 어가의 소득분배 상태가 다소 악화되고 양식어가의 불평등도는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3-9〉 어가유형별 지니계수 추이

구 분	전 체	어선비사용	어선사용	양식
2003년	0.442	0.360	0.411	0.532
2004년	0.449	0.349	0.414	0.558
2005년	0.442	0.394	0.414	0.495

어의 소득원별로는 전체 어가소득보다 어업소득을 비롯한 각 소득원의 불평등도가 컸는데(〈표 3-10〉 참조) 이들의 합이 서로 보완되면서 어가소득의 불평등도는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반농반어의 겸업가구라면 어

업소득이 적더라도 농업소득으로 보충될 수 있고, 경영주가 고령이어서 어업소득이 적다면 정부나 자녀로부터 지원받는 이전 소득이 다른 가구보다 많을 수 있다.

〈표 3-10〉 어가의 소득원별 지니계수 추이

구 분	어가소득	어업소득	어업외소득	이전소득	비정상소득
2003년	0.442	0.693	0.645	0.791	0.722
2004년	0.449	0.708	0.680	0.740	0.694
2005년	0.442	0.712	0.668	0.711	0.718

② 일반화된 엔트로피(GE) 지수 분석

어가소득의 GE지수 분석 결과는 지니계수 분석 결과와 대동소이하다. 다만 GE지수가 지니계수보다 어가 유형별 차이나 변동 폭이 좀더 큰 것이 특징이다. 이는 분석의 편의상 높은 소득에서 지수가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지수의 계수를 조정하였기 때문이다.¹⁸⁾

2003~2005년 어가소득의 GE지수는 0.46~0.59이고 2003년 이후 다소 악화된 추이를 보인다(〈표 3-11〉 참조). 어가 유형별로 볼 때 어선비사용 어가가 0.24~0.31, 어선사용 어가가 0.35~0.42, 양식어가가 0.68~1.01로 나타났다. 지니계수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양식어가의 불평등도가 다른 부문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아 전체 어가의 소득불평등을 주도하였다. 2005년에는 어선비사용 어가의 소득분배가 다소 악화된 반면 양식어가는 개선되고 있지만 어선사용 또는 어선비사용에 비해 2배 이상의 높은 지수를 보이고 있다.

18) 제2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렇게 계수를 조정하면 소득원별 기여율을 측정할 수 있다.

〈표 3-11〉 2003~2005년 어가소득의 GE지수 추이

구 분	전체	어선비사용	어선사용	양식
2003년	0.459	0.309	0.352	0.684
2004년	0.586	0.244	0.422	1.010
2005년	0.582	0.305	0.402	0.841

GE지수의 장점은 소득원별로 어가소득의 불평등에 기여하는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개별 소득원의 불평등도와 어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결정된다. 지니계수와 마찬가지로 소득원별 GE지수를 보면 어가소득보다 훨씬 큰 범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GE지수는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어업소득, 어업외소득의 순서로 크지만 전체적으로 불평등도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어업소득이다(〈표 3-12〉 참조). 이는 어업소득이 어가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소득불평등에 기여율을 살펴보면 어업소득 76%, 어업외소득 18%, 비경상소득 6% 정도로 어업소득이 어가 전체 소득 불평등을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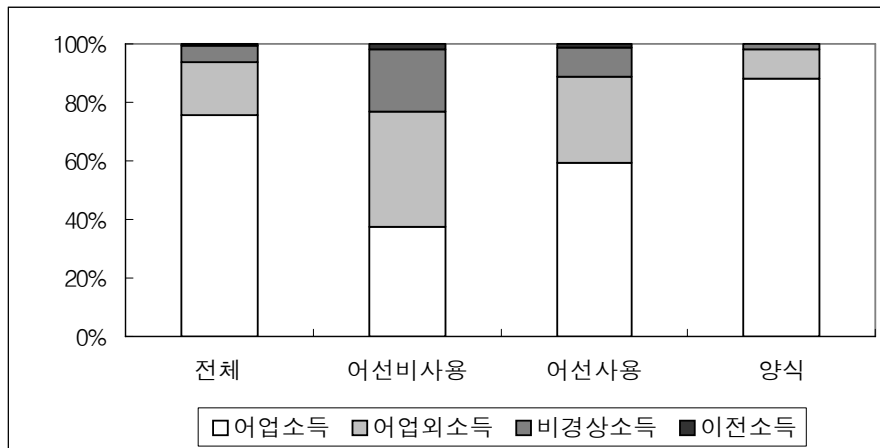
또한 어가 유형별로도 어업소득의 비중과 불평등 정도에 따라 소득불평등 기여율이 다르다. 2005년에 양식어가가 88%, 어선사용 어가가 60%, 어선비사용 어가가 38%로 양식어가 어업소득의 소득 불평등 기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6〉 참조). 이는 같은 해에 이들 각각의 어업소득 비중이 56%, 41%, 21%로 상이하고, 어업소득의 GE지수가 각각 1.92, 1.17, 1.70이었다(〈표 3-12〉 참조)는 점에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¹⁹⁾

19) 유형별 어가의 어업소득 비중은 61쪽 〈표 4-4〉에 수록하였다.

〈표 3-12〉 어가의 소득원별 GE지수

구 분	어가소득	어업소득	어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2003년	0.459	1.340	0.922	2.477	2.268
2004년	0.586	1.813	1.277	2.053	2.020
2005년	0.582	1.854	1.280	1.774	1.923

〈그림 3-6〉 2005년 소득원별 어가소득 불평등 기여율



그리고 〈그림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선비사용 어가의 경우는 불평등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소득원은 어업소득이 아닌 어업외소득이며 비경상소득의 기여율도 꽤 높아 양식어가와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는 어선비사용 어가가 겸업소득의 비중이 높고 비경상소득의 불평등한 정도가 크기 때문이다. 한편 어선사용 어가는 양식어가와 어선비사용 어가의 중간자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GE지수는 또 다른 장점이 있는데, 부문 내와 부문 외로 지수를 분리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다시 말해 전체 어가소득의 GE지수를 유형별 어가 내의 불평등도와 유형별 어가 사이의 불평등도로 구분하여 나타낼 수 있다.

2003~2005년 어가소득의 GE지수를 분리해보면 유형별 어가 내의 불평등도가 전체 불평등도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13〉 참조).

이는 유형별 어가를 한 묶음으로 보았을 때 그 사이의 불평등도보다는 유형별 내 어가의 불평등도가 어가소득의 불평등도를 대부분 좌우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유형별 어가 사이에 평균 어가소득의 격차가 크게 존재하더라도 이것이 항상 어가소득의 전체 불평등과 직결된다고 할 수 없다. 그보다는 유형 내, 즉 양식어가 또는 어선사용어가 내에서 소득분포가 넓게 퍼져 있는 정도가 전체 불평등도에 더 많이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3〉 2003~2005년 유형별 어가내·어가간 GE지수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유형별 어가 내	0.456	0.583	0.571
유형별 어가 간	0.004	0.004	0.012
전 체	0.459	0.586	0.582

③ 소득5분위배율 분석

어가소득 순으로 다섯 계층을 나누고 최하위층에 대한 최상위층의 소득비율을 측정한 것이 어가소득5분위배율이다. 여기서는 2003~2004년 자료로 어가소득5분위배율을 구하여 다른 부문과 간단히 비교해보기로 한다.

2003~2004년 어가소득의 5분위배율 값은 15~16으로 측정되어 최상위층과 최하위층의 격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3-14〉 참조). 이는 도시근로자가구뿐만 아니라 농가의 경우보다도 큰 수치로 어가가 농가 또는 도시근로자가구보다 소득불평등이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원별로는 어업소득의 편차가 다른 소득원에 비해 월등히 컸는데 이는 도시근로자가구와 달리 어가가 독립적인 경영체여서 어업소득이 음(陰)인 경우도 꽤 있기 때문이다.²⁰⁾ 이처럼 어가소득에서 가장 비중이 큰 어업소득의 편차가 반영됨에 따라 어가소득의 5분위배율도 커질 수밖에 없다.

20) 어가 유형별 소득5분위배율 분석은 표본이 많지 않은 탓에 오차가 클 것으로 보여 생략하였다.

〈표 3-14〉 어가소득의 5분위배율

구 분	어가	농가	도시근로자가구
2003년	15.2	12.3	5.4
2004년	16.2	-	5.4

자료 : 박준기 외, 「저소득농가의 농가경제 실태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4; 통계청, 통계정보 시스템; 어가의 수치는 직접 계산함

(2) 불평등의 변화 실태

불평등의 변화 실태 분석은 1995·2000·2005년 어촌계 평균 어가소득의 불평등도를 지니계수로써 측정하였다(〈표 3-15〉 참조). 앞의 ER지수 분석과 마찬가지로 측정 대상이 평균 어가소득이어서 지니계수 값이 「어가경제조사」 분석 결과보다 낮게 나타난다.

1995~2000년 측정 결과를 보면 지니계수가 2000년에 낮아졌다가 2005년에 1995년 수준 이상으로 높아졌다. 다시 말해 2000년에 불평등 정도가 완화되었다가 2005년에 그 이전인 1995년 수준보다 더 많이 악화되었다.

어촌계의 유형별로 보아도 2005년에 모두 불평등 정도가 높아졌다. 어촌계 유형별로 시간에 걸친 불평등도의 고저(高低)를 파악하고 상호 비교하기 위해 1995년 어촌계 전체의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삼았다. 종사유형별로 보면 어선 어업과 복합어업은 ‘저불평등→저불평등→고불평등’의 추이를, 양식어업은 ‘고불평등→고불평등→고불평등’의 추이를 보였다.

입지유형별로는 도시근교와 취락지구가 ‘저불평등→저불평등→고불평등’의 추이를, 연안촌락이 ‘고불평등→저불평등→고불평등’의 추이를 나타냈다. 2005년은 어느 유형이든지 1995년 전체와 비교하여 불평등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체 지니계수 수치가 2005년에 급상승한 것과 맥이 닿는다.

〈표 3-15〉 1995·2000·2005년 어촌계 유형별 지니계수

구 분		1995년	2000년	2005년
전 체		0.121	0.114	0.160
종사유형	어선	0.092	0.109	0.153
	양식	0.144	0.135	0.157
	복합	0.101	0.086	0.166
입지유형	도시근교	0.107	0.112	0.148
	연안촌락	0.125	0.117	0.150
	취약지구	0.109	0.106	0.213

주 : 〈표 3-9〉의 지수 값보다 작은 것은 어촌계별 어가의 평균소득으로 지수를 산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 3-9〉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의미가 없음

3)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 변화 종합

소득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가치 판단하려면 양극화와 불평등의 변화 실태와 함께 소득 수준의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 설사 불평등 또는 양극화 정도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소득 수준이 낮아지면 그것도 온전하게 바람직한 상태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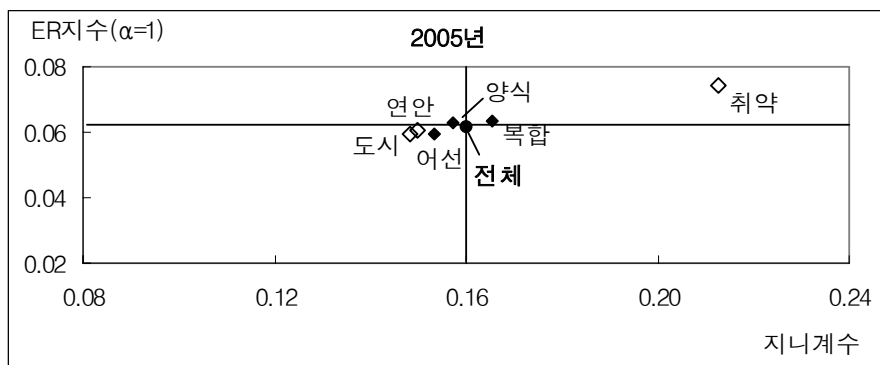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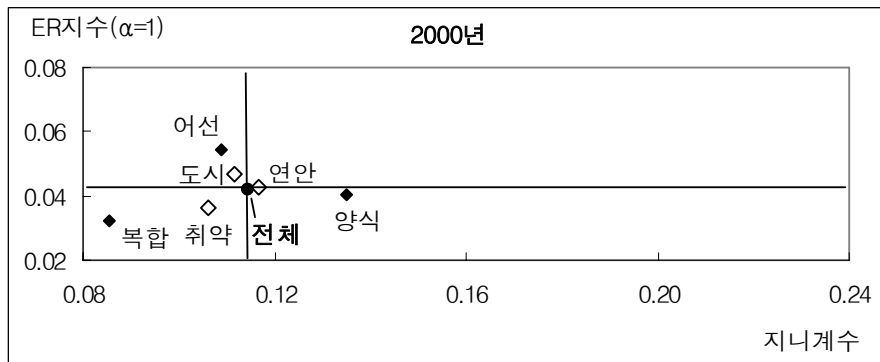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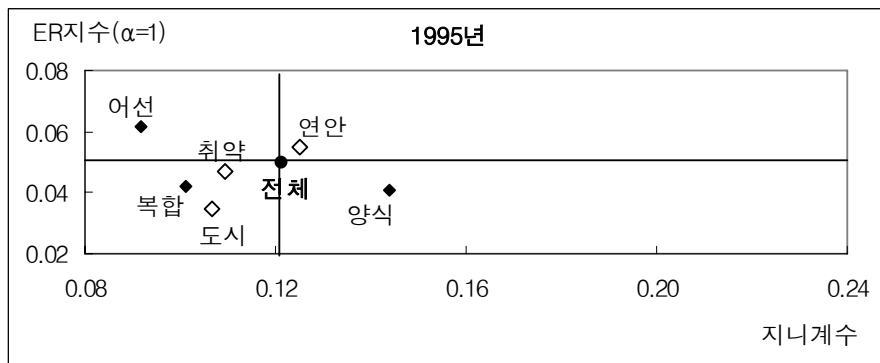
이러한 관점에서 이상의 분석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어촌의 소득 분포는 1995~2000년에 양극화와 불평등이 모두 완화되고 동시에 소득 수준도 내려갔다가 2000~2005년에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는 모습을 나타낸다(〈표 3-5〉, 〈표 3-6〉 참조). 다시 말해 최근 10년 사이 양극화 정도, 불평등 정도, 소득 수준이 모두 하락 후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다. 소득 수준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임에 따라 양극화와 불평등의 완화 또는 악화가 전적으로 좋거나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다.

어촌계 유형별로 이를 살펴보자. 먼저 1995·2000·2005년 불평등과 양극화의 절대적인 수준을 1995년 전체 ER지수·지니계수 값을 기준으로 고저(高低)를 나타내면 〈표 3-16〉과 같다.

〈표 3-16〉 어촌계 유형별 불평등 및 양극화 수준

구 분		1995년		2000년		2005년	
		불평등	양극화	불평등	양극화	불평등	양극화
전 체		-	-	낮음	낮음	높음	높음
종사유형별	어선어업	낮음	높음	낮음	높음	높음	높음
	양식어업	높음	낮음	높음	낮음	높음	높음
	복합어업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높음	높음
입지유형별	도시근교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높음	높음
	연안촌락	높음	높음	낮음	낮음	높음	높음
	취약지구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높음	높음

〈그림 3-7〉 여촌계 평균 어가소득의 지니계수 · ER지수 추이



주 : 실선은 전체 평균을 나타냄

어촌계 종사유형별로 볼 때 1995~2000년에는 어선어업과 양식어업이 불평등 정도와 양극화 정도가 서로 반대 수준에 있다가 2005년에 같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복합어업은 이 두 가지 추이가 일치한다. 절대적인 수준으로 보았을 때 이들 세 종사유형은 2005년에 전체 평균에 가까운 비슷한 지점에 있다(〈그림 3-7〉 참조).

어촌계 입지유형별로는 모든 입지유형이 불평등 정도와 양극화 정도에서 같은 추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절대적인 수준으로 보았을 때 도시근교와 연안촌락은 전체 평균에 가까운 비슷한 지점에 있으나 취약지구는 불평등과 양극화 정도가 훨씬 더 심각한 위치에 있다(〈그림 3-7〉 참조).

1995년을 기준으로 2000~2005년의 지니계수, ER지수, 소득 수준의 증감(増減)을 나타내면 〈표 3-17〉와 같다. 2000년에는 전체적으로 불평등과 양극화가 완화되었지만 소득은 감소를 동반하였다. 이와 반대로 2005년에는 소득이 증가하면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평가는 달라지겠지만 두 경우 모두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다.

〈표 3-17〉 어촌계 유형별 불평등·양극화·소득 수준의 증감

구 분		2000년			2005년		
		불평등	양극화	소득	불평등	양극화	소득
전 체		감소	감소	감소	증가	증가	증가
종사유형별	어선어업	증가	감소	감소	증가	감소	감소
	양식어업	감소	감소	증가	증가	증가	증가
	복합어업	감소	감소	감소	증가	증가	증가
입지유형별	도시근교	증가	증가	감소	증가	증가	증가
	연안촌락	감소	감소	증가	증가	증가	증가
	취약지구	감소	감소	증가	증가	증가	증가

주 : 1995년 수준을 기준으로 한 증가·감소임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불평등과 양극화가 완화되면서 소득도 증가하는 경우이다. 이것을 유도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방향이 되어야 한다. <표 3-17>의 2000년에 이런 유형이 보이는데 종사유형 중 양식어업이, 입지유형 중 연안촌락과 취락지구가 그러하다. 연안촌락과 취락지구에서 양식어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들 세 유형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이와 반대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는 불평등과 양극화가 악화됨과 동시에 소득도 감소하는 것인데 가장 피해야 할 상황이다. 2000년의 입지유형 중 도시근교가 해당되는데 도시근교 어촌계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원인 양식어업이 취락하고 어선어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정책적으로는 잡는어업의 퇴조와 양식어업의 성장으로 설명할 수 있다.

4) 양극화 및 불평등 실태분석 소결

어촌의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의 실태 및 변동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3년간(2003~2005) 어촌의 소득 양극화 추이를 보면 2005년에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둘째, 2004년 현재 어가의 소득 양극화 정도는 농가보다는 심하고 도시가구와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셋째, 어가의 소득은 어업소득, 어업외소득, 비경상소득 그리고 이전소득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가의 주 소득원인 어업소득에 있어 양극화 정도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어가의 종사유형별로 보면 양식어가, 어선사용어가 그리고 어선비사용어의 순으로 양극화 정도가 높았으며, 특히 양식어가의 양극화 정도는 전체 평균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다. 양식어가의 양극화 정도가 전체 어가의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1995~2005년의 과거 10년 동안 어촌계 평균소득을 측정한 양극화

정도의 변동추이를 보면 2000년도에는 완화되었다가 2005년에는 1995년보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양극화와 소득 수준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2000년도에 양극화가 완화된 것은 상층에서 중층으로 많이 이동하여 소득의 하향 평준화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양극화 완화가 반드시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다.

일곱째, 어가의 소득 불평등의 정도는 농가나 도시근로자가구에 비해 큰 것으로 분석되어 어가소득 분배의 불평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가의 소득5분위배율이 15로 상당히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농가의 12 또는 도시근로자가구의 5와 비교했을 때 어촌의 소득불평등 정도가 매우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여덟째, 전체적으로 어촌의 경우 2000년도에 비해 2005년에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동시에 소득 수준은 높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아홉째,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어촌의 경우 불평등은 악화되고 있으나 다른 종사유형과 달리 유일하게 양극화는 완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소득은 감소하는 경향에 있다.

열째, 입지유형별로 보면 도시근교와 연안촌락과 비교했을 때 취약지구의 경우 양극화 정도와 불평등이 훨씬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

어촌 양극화의 원인

앞 장에서 소득을 기준으로 양극화 및 불평등 실태 분석을 통하여 어촌은 도시와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최근 어촌 내부에서도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그 정도가 농촌이나 도시와 비교할 때 비슷하거나 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장에서는 도시와의 소득격차 확대 그리고 양극화 심화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원인 분석은 먼저 통계 자료 등을 이용한 분석 내용을 제시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어업인과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으로 뒷받침하였다.

1. 어촌 양극화의 원인

1) 어촌-도시의 격차 확대의 원인

어촌과 도시의 격차가 확대되는 것은 어촌의 중심 산업인 어업과 도시 기반의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과 격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산업 간 격차는 경제발전 단계로 볼 때 당연한 현상이다. 그런데 이는 어업이 상대적으로 덜 성장해서라기보다는 절대적으로 어업이 쇠퇴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업 총생산(GDP)은 1992년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국내총생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낮아지고 있다(〈표 4-1〉 참조). 이와 달리 제조업은 1990년 이후 연평균 7.6%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면서 GDP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농림업도 GDP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나 절대적인 총생산이 연평균 1.5%씩 늘어나고 있다.²¹⁾ 이에 따라 어업과 제조업, 어업과 농림업의 산업간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1차 산업의 위축은 경제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불가피한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농림업보다 절대적인 생산이 줄고 있는 어업이 더욱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와 같은 어업의 쇠퇴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다음에서는 이를 하나씩 살펴본다.

〈표 4-1〉 산업 부문별 실질 국내총생산(GDP) 추이

단위 : 십억 원, %

구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최근 5년간 증가율	연평균 증가율
국내총생산	320,775 (100.0)	467,023 (100.0)	578,665 (100.0)	721,486 (100.0)	24.7	5.6
어업	2,499 (0.8)	2,532 (0.5)	2,155 (0.4)	1,961 (0.3)	-9.0	-1.6
농림업	18,526 (5.8)	20,777 (4.4)	22,875 (4.0)	23,262 (3.2)	1.7	1.5
제조업	69,525 (21.7)	103,279 (22.1)	151,243 (26.1)	208,519 (28.9)	37.9	7.6

주 : 2000년 기준 가치로 환산한 금액임

괄호 안의 수치는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1) 어업 GDP가 감소하고 농업 GDP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어가소득과 농가소득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어가소득이 어업소득만으로 구성되지 않기도 하지만 어업 GDP에는 어가로 집계되지 않는 원양어업·내수면어업의 생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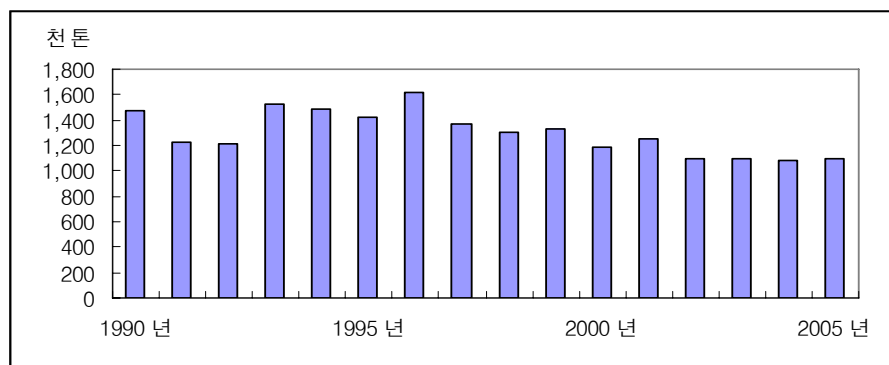
(1) 어장축소와 어업자원 감소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되어 각국은 경쟁적으로 20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EEZ)을 선포하고 이를 연안국의 관할 하에 두게 되면서 공해 상에서의 조업 가능한 어장이 축소되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의 EEZ 체제로 한·일, 한·중 간 새로운 어업협정 체결로 인한 전통 조업어장의 53%가 축소되는 등 조업어장이 줄어들면서 어획량도 감소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1,000만 톤에 달했던 어업자원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4년 790만 톤 수준이며 이러한 자원량 감소에 따라 1990년대 중반 160만 톤 수준이던 어획량도 2004년에는 108만 톤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그림 4-1> 참조).

그리고 육지로부터 오염물질 유입, 폐기물 해상투기, 매립·간척, 바닷모래 채취, 갯녹음 현상, 지구온난화 등은 어장오염 및 어장환경을 변화시켜 어족자원의 산란 및 서식환경 파괴로 어업자원의 육성 및 조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울러 불법어업, 어획강도가 높은 어구·어법 사용, 과도한 어획활동 등은 어업자원이 감소하는 주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림 4-1〉 1990~2005년 일반해면어업의 어획량 추이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생산통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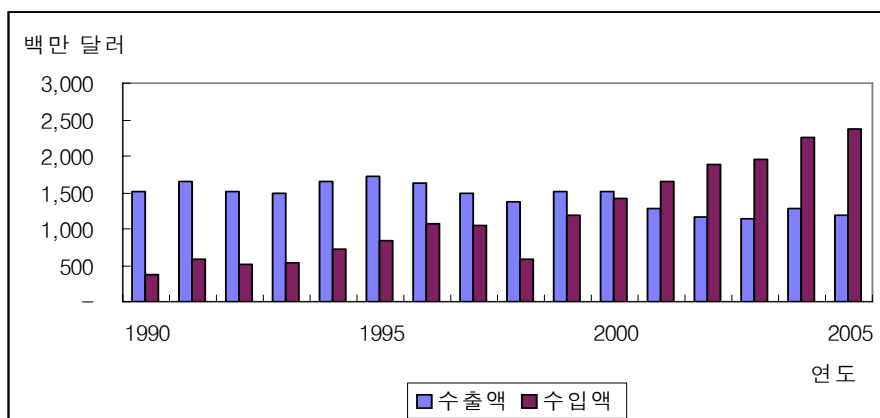
이러한 어장의 축소와 어업자원의 감소는 어획량의 감소로 이어지고, 어업의 GDP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어가의 소득감소로 나타나 도시와의 격차를 벌이는 결과를 낳고 있다.

(2) 수산물 수입 증가와 수출경쟁 심화

1997년 수산물수입자유화에 따라 매년 수산물 수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00년대부터 수산물 수입액이 수출액을 초과하여 전형적인 수산물 수입국으로 전환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4-2〉 참조).

특히 국내산과 별로 차이가 없으면서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수산물의 수입 비중이 높다. 이에 따라 어획량 변동에 따른 가격등락 폭이 줄어들어 국내산 수산물의 가격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생산자의 입장에서 보면 수입자유화 이전에 어획량 감소를 가격 상승으로 보전 받을 수 있었던 때와는 시장 환경이 크게 달라진 것이다. 즉 더 이상 국내 어획량 감소에 따른 가격상승을 통해 어업소득의 보전 또는 유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2〉 1990~2005년 수산물 수출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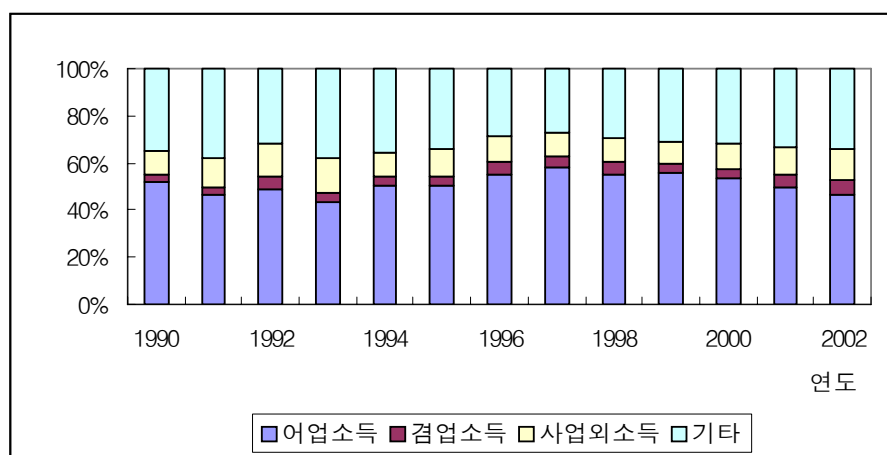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각 년도

또한 중국 수산업의 부상은 일본, 미국 등 주요 수산물 수출에서도 경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처럼 국내외 시장에서 좁아지고 있는 입지는 생산량 감소와 맞물려 어업의 위축을 더욱 진행시키고 있다.

(3) 어업외 사업소득원 부족

어업의 쇠퇴에 따른 어업소득의 감소를 상쇄할 수 있는 어촌의 새로운 소득원 개발에 소홀해왔다는 점도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1990년 이후 어가소득에서 차지하는 어업외 소득의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어업외 소득원 중 사업소득이라 할 수 있는 겸업소득의 비중은 그리 많이 늘지 않았다. 적어도 2002년까지는 여전히 어업소득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²²⁾

〈그림 4-3〉 1990~2002년 어가소득의 소득원별 구성비 추이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앞서 서술한 어장축소, 어장환경악화, 국내외 시장 등의 변화는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다. 이런 변화를 주어진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는 데에 어업인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으나 미흡한 점이 많

22) 2003년부터 「어가경제조사」에 2종 겸업가구까지 포함된 시계열적 불연속성 탓에 2003~2005년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았다. 예를 들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어촌관광 활성화는 하드웨어적인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어 실제 사업성과가 어업인의 다른 사업소득으로 귀착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어업인들은 각종 개발에 따른 어업 피해보상, 어업 구조조정, 시장개방에 따른 보상 등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으려는 기대심리로 어촌에서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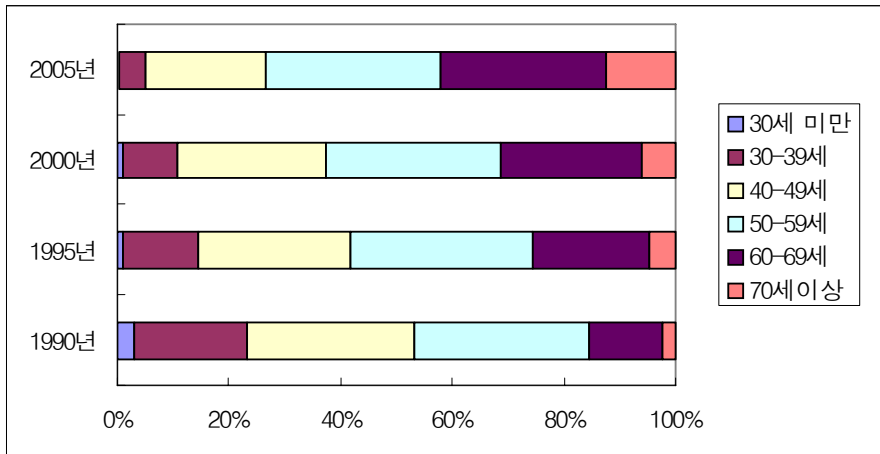
(4) 어촌사회의 고령화

점점 심화되고 있는 어촌사회의 고령화도 어촌과 도시의 격차를 부추기는 중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고령화는 어촌사회가 어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려는 의욕과 능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현재 어촌사회의 고령화 추세는 통계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1990~2005년의 어업경영주 연령별 어가수 비중 추이를 보면 15년 사이에 30대 미만의 비중이 23%에서 5%로, 40대의 비중이 30%에서 21%로 떨어진 반면 60대 이상의 비중이 15%에서 42%로 크게 높아졌다(〈그림 4-4〉 참조). 이러한 고령화 변화는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왔는데 이는 그동안 어촌사회에 젊은 경영주의 어가가 진입하는 비율이 낮았다는 것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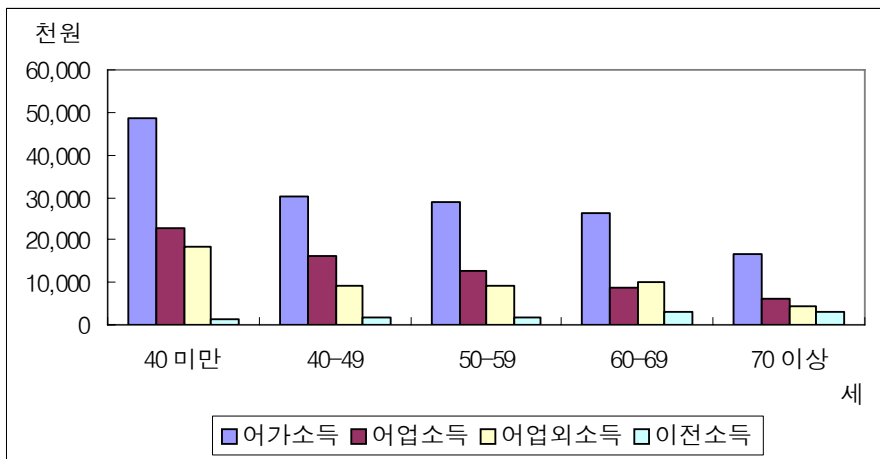
2005년 「어가경제조사」 표본의 원자료를 분석하면 40대 미만과 40대 이상에서 소득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40대 미만 가구는 어업소득과 어업외소득 모두 월등히 높다. 40~60대는 어업소득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이전소득이 감소분을 어느 정도 보충하면서 비교적 비슷한 수준을 보이다가 70대부터 더 많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그림 4-5〉 참조).

〈그림 4-4〉 1990~2005년 어업경영주 연령별 어가수 비중 추이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그림 4-5〉 2005년 어업경영주 연령별 소득 분포



자료 : 통계청, 2005년 「어가경제조사」 원자료

실제로 연령과 소득 사이에 상관계수를 분석해보면 약한 음(陰)의 상관관계가 드러난다(〈표 4-2〉 참조). 소득원별로 살펴보면 어업소득과는 그 상관계수의 절대 값이 더 크고 이전소득과는 약한 양(陽)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일반적

인 직관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고령자의 경우 노동에 의한 소득보다는 자식들의 송금 등에 의한 이전수입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촌사회의 고령화가 이대로 진행된다면 어가소득이 계속 감소하여 도시와의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표 4-2〉 2005년 어가소득과 어업경영주 연령의 상관계수

구 분	어가소득	어업소득	어업외소득	이전소득
전 체	-0.194	-0.235	-0.100	0.166
어선비사용	-0.226	-0.249	-0.199	-0.024
어선사용	-0.178	-0.203	-0.093	0.241
양 식	-0.215	-0.278	-0.104	0.087

자료 : 통계청의 2005년 「어가경제조사」 원자료로 계산함

2) 어촌 내의 양극화와 불평등의 원인

제3장에서 1995~2005년 동안 5년 단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어촌 내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는 2000년에 크게 완화되다가 2005년 다시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다른 연구에서 분석한 우리나라 전체의 소득 양극화 추세와 비슷하다.²³⁾ 이 연구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심화되었던 양극화 정도는 2000~2002년 중상층이 일부 복원되면서 완화되었다가 다시 2003년부터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양극화의 원인으로는 저성장과 내수침체, 노동시장의 변화, 구조조정에 따른 자영업자의 증가 등이 제시되었다.

어촌 내의 양극화도 이러한 거시적인 양극화 추세와 맞물려 있다. 저 성장과 내수침체는 수산물 수요를 떨어뜨려 자본력이 부족한 중간층 이하 어업경영자의 수익성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도시의 고용이 늘어나지 않고 영세 자영업자가 증가하면 어업에서 이탈하고 싶어도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기

23) 삼성경제연구소, 「소득양극화의 현황과 원인」, 2006. 8.

도 쉽지 않아 저소득층으로 계속 어촌에 머무르게 된다. 이는 곧 어촌 내의 불평등과 양극화로 이어진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러한 거시적인 경제 여건 변화에서 원인을 찾기보다는 어촌 내의 고유한 원인 규명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지적될 부분은 어촌 내 양극화 정도가 소득의 증가 방향과 일치한다는 점이다. 2000년에 양극화가 완화된 것은 상층과 하층에서 중층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인데 특히 상층의 이동이 많아서 전체 평균소득은 감소하였다. 그 원인은 2000년경에도 여진이 강하게 남아있던 외환위기의 영향, 새 한·일 어업협정의 체결 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2005년 양극화가 악화된 것은 중층부에서 상층부와 하층부로 이동하는 비율이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상층부로 옮겨간 비율이 높아서 양극화 심화는 자연히 소득 증가를 동반한다. 이는 2000년 즈음부터 시작되었거나 이미 진행되어온 정부의 어업·어촌 정책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정부 정책의 기초는 잡는어업 부문에서 어업자원 규모에 적정하게끔 어획능력을 줄이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기르는어업(양식어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것이었다. 이는 연근해어선 감척사업과 어류 중심의 양식어업에 대한 지원으로 구체화된다.

또한 규모화된 어업경영을 추구하는 영어조합법인은 양적 성장과 함께 소득 증대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혜택을 입은 양식어가 또는 영어조합법인 등의 어업인 소득계층이 상층부로 이동할 힘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양식어업의 성장은 과잉생산, 자연재해의 피해 등으로 고위험-고수익의 성격이 강하여 어업경영의 위험을 더 크게 증폭하기도 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양식어업의 성장이 어촌의 불평등과 양극화에 미친 영향을 자세하게 살펴본다. 그리고 양극화의 또 다른 원인으로 어업소득과 직결되는 생산시설 보유 및 경영규모의 실태를 덧붙여 설명한다.

(1) 양식어업의 성장

최근 10년 사이 전체 어업생산액(조생산액)은 소폭 늘어났다²⁴⁾. 어업 부문별 생산 추이를 보면 잡는어업의 생산이 감소 또는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 양식어업 생산이 많이 늘었다(〈표 4-3〉 참조). 어업생산의 비중도 원양어업이 크게 축소되었고 연근해어업이 소폭 낮아진 반면 양식어업은 크게 높아졌다. 2005년 양식어업 생산액은 연안어업 생산액보다 많으며 근해어업과도 대등한 수준이다.

〈표 4-3〉 실질 어업생산액의 부문별 추이

단위 : 십억 원, %

구 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전체	4,155 (100.0)	4,445 (100.0)	4,066 (100.0)	4,516 (100.0)
근해어업	1,598 (38.5)	1,723 (38.8)	1,241 (30.5)	1,250 (27.7)
연안어업	835 (20.1)	1,180 (26.5)	1,088 (26.8)	1,170 (25.9)
천해양식	721 (17.4)	759 (17.1)	684 (16.8)	1,206 (26.7)
원양어업	844 (20.3)	616 (13.9)	930 (22.9)	733 (16.2)
내수면어업	156 (3.8)	167 (3.8)	123 (3.0)	157 (3.5)

주 : 2000년 기준 가치로 환산한 어업조생산 금액임

괄호 안의 수치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생산통계시스템

24) 어업GDP가 감소한 것과 달리 어업조생산액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유류비 증가 등 어업비용이 가파르게 오른 결과로 풀이된다.

이러한 양식어업의 부상은 주변국과의 어업협정에 따라 어장이 좁아지고 과도한 어획에 따른 어업자원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잡는어업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한 데 힘입은 바가 크다.

① 고수의 양식어업 확대

양식어업의 확대는 어가의 어업소득 면에서도 차이를 가져왔다. 잡는어업(어선비사용·어선사용) 어가의 어업소득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반면 양식어가의 어업소득은 늘어나고 있다(〈표 4-4〉 참조). 이에 따라 이들 종사유형별 어가 사이 평균어업소득의 격차도 커지고 있다. 양식어가의 어업소득만이 최근 증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이 전체 어가소득의 50% 이상으로 양식어가의 어업의존도는 타 어업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4〉 실질 어가소득·어업소득의 부문별 추이

단위 : 천 원, %

구 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최근10년간 증가율
어가 소득	전 체	17,222	21,991	18,875	25,070	14.0
	어선비사용	14,941	18,484	16,406	19,476	5.4
	어선사용	19,236	24,893	17,548	24,703	-0.8
	양식	16,901	25,547	25,392	30,609	19.8
어업 소득	전 체	8,964 (52.1)	11,050 (50.2)	10,078 (53.4)	10,689 (42.6)	-3.3
	어선비사용	5,326 (35.6)	5,761 (31.2)	5,867 (35.8)	4,174 (21.4)	-27.5
	어선사용	12,589 (65.4)	15,416 (61.9)	10,644 (60.7)	10,206 (41.3)	-33.8
	양식	8,235 (48.7)	14,598 (57.1)	14,211 (56.0)	17,253 (56.4)	18.2

주 : 2000년 기준 가치로 환산한 금액임

괄호 안의 수치는 어가소득에서 차지하는 어업소득의 비중임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1990년 이후 어가소득은 양식어가 뿐만 아니라 잡는어업의 어가에서도 증가하고 있지만 <표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업소득의 격차를 반영하여 유형별 어가의 평균소득격차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는 양식어업의 부상으로 고소득 어업인이 대거 어촌에 등장하여 어촌의 불평등 및 양극화를 심화시켰음을 뜻한다.

한편 어선비사용 어가는 어가소득에서 차지하는 어업소득의 비중이 2005년에 21%에 불과하여 다른 소득원이 어가경제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식어가와의 어업소득 격차를 다른 소득원이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

어가의 분포 양상은 어가소득과 다르게 나타난다. 양식어가는 1990년대에 급격하게 감소했다가 2000년대 이후 거의 정체돼 있다(<표 4-5> 참조). 그럼에도 2000년대 이후 생산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경제적 가치가 낮은 해조류·패류 양식어가가 줄어든 반면 가치가 높은 어류·갑각류 등의 양식어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표 4-6> 참조).

<표 4-5> 어업형태별 어가분포 추이

단위 : 가구, %

구 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최근5년간 증가율
전 체	121,525 (100.0)	104,480 (100.0)	81,571 (100.0)	79,942 (100.0)	-2.0
어선비사용	32,628 (26.8)	33,362 (31.9)	17,793 (21.8)	19,134 (23.9)	7.5
어선사용	39,170 (32.2)	37,109 (35.5)	38,968 (47.8)	36,733 (45.9)	-5.7
양식어업	49,727 (40.9)	34,009 (32.6)	24,810 (30.4)	24,075 (30.1)	-3.0

주 : 괄호 안의 수치는 '전체' 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한편 어선비사용 어가수가 최근 5년 사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2003년부터 통계에 집계되는 어가의 범위가 2종 겸업가구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²⁵⁾.

〈표 4-6〉 양식품목별 어가분포 추이

단위 : 가구

구 분	1989년	1994년	1999년	2004년
총 계	52,896	39,511	32,360	20,696
어류	0	687	1,703	2,035
패류	13,632	19,829	16,631	11,181
갑각류	0	31	83	68
해조류	38,306	18,431	13,695	6,545
기타	958	533	248	536
종묘생산	-	-	-	331

주 : 종묘생산은 2000년부터 따로 집계됨

1990년 및 1995년 어업총조사에서 세목이 집계되지 않아 1989년부터 5년 단위로 살펴봄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② 양식어업의 고위험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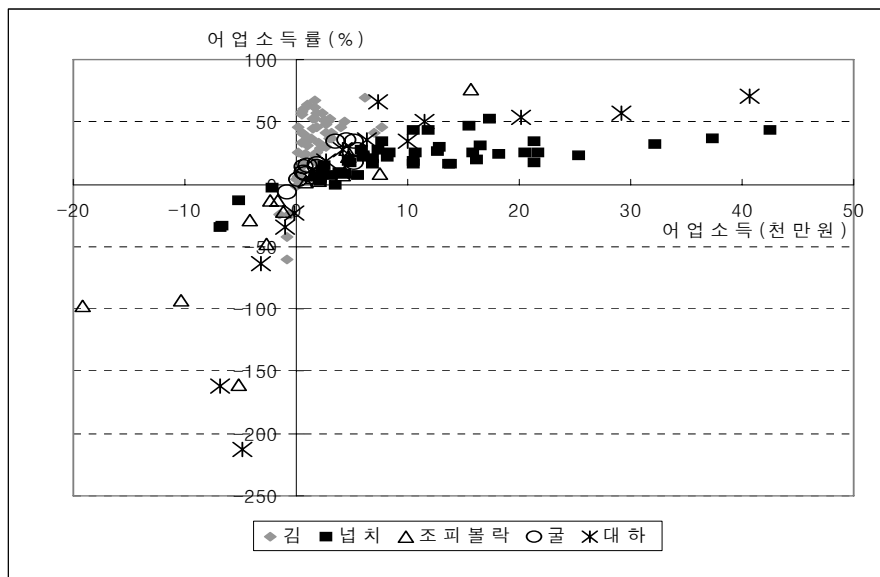
그런데 앞의 GE지수를 이용한 실태 분석에서 확인하였듯이 양식어가와 다른 유형의 어가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소득격차가 불평등의 핵심적인 원인은 아니다. 그보다 양식어업 내의 격차가 더 중요한 원인이다. 평균 소득이 높은 양식어업의 부상으로 양식부문에서 고소득 어업인이 진입한 것뿐만 아니라 저소득 어업인도 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소득분포의 범위가 넓은 양식어업의 진입으로 전체 어가의 소득 분포도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양극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25) 2종 겸업가구는 겸업소득이 어업소득보다 많은 가구이다. 1종 겸업가구는 어업소득이 겸업소득보다 많은 가구이다. 비어선사용 어가는 어업경영규모가 작아 겸업가구의 비중이 높다.

양식어업의 이 같은 성격은 고수익·고위험인 양식어업 자체의 특성에 기인하는 면이 크다. 양식어업은 어업자원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계획적인 생산이 가능해 잡는 어업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태풍·적조와 같은 자연재해와 어병 발생으로 전혀 생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거나 이상수온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는 일이 이 산업에서는 예외적이지 않다. 양식물재해보험이 아직 도입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을 기피할 수 있는 수단이 현재로서는 없다.

해양수산부가 발행한 「주요양식품종 어가별 소득자료집」(2003)을 분석하면 양식어가의 고수익과 고위험의 이러한 사실을 잘 뒷받침 해준다. <그림 4-6>에서 알 수 있듯이 생산이 비교적 쉬운 김과 굴은 위험도 크지 않고 수익도 안정적인 편이나 넙치, 조피볼락, 대하의 성공하면 큰 수익을 내지만 태풍과 어병(魚病)의 영향으로 큰 손실을 보거나 미미한 수익을 낸 어가가 적지 않다.

〈그림 4-6〉 주요 양식품종 어가의 어업소득 현황(2003년)



자료 : 해양수산부, 「주요양식품종 어가별 소득자료집」, 2003

양식어업의 이 같은 고위험·고수익 성격은 양식어가 내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정도가 다른 유형의 어가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고, 전체 어업·어촌의 불평등도와 양극화 정도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고위험 품목으로 양식어업이 확대될수록 앞으로 이러한 경향이 더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어업경영의 수익성 지표인 어업소득률(어업수입에 대비한 어업소득의 비율)의 분포에서도 양식어업의 이 같은 측면을 확인할 수 있다(〈표 4-7〉참조). 이 분포는 어업소득의 절대적인 수준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어선비사용 어가는 어업소득은 낮지만 어업비용이 적게 드는 까닭에 어업소득률이 75% 이상에서 아주 많이 분포하고 있다. 수익도 낮지만 위험도 낮은 경우가 어선비사용 어가라 할 수 있다.

〈표 4-7〉 어업소득률별 어가분포 현황

단위 : %

구 분		적자경영	0~25%	25~50%	50~75%	75~100%
2003년	전체	9.5	9.0	23.0	31.5	27.0
	어선비사용	3.9	0.6	2.6	10.3	82.6
	어선사용	9.2	11.1	27.0	36.0	16.7
	양식	13.2	8.6	24.3	32.5	21.4
2004년	전체	10.7	10.6	21.0	30.7	26.9
	어선비사용	1.6	0.8	1.6	7.8	88.3
	어선사용	11.6	12.5	23.4	34.7	17.8
	양식	12.9	10.3	23.9	30.9	22.1

주 : 어업소득률 = 어업소득 ÷ 어업수입 × 100(%)

어선비사용어가보다 어업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양식어가와 어선사용 어가를 비교하면 두 어가 모두 대체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지만 양식어가가 적자경영과 75% 이상의 고수익률에 분포하는 빈도가 더 높아 어선사용 어가보다 소득

수준도 높지만 실패할 위험도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양식 어가의 소득 불평등도가 어선사용 어가보다 크다는 분석 결과를 뒷받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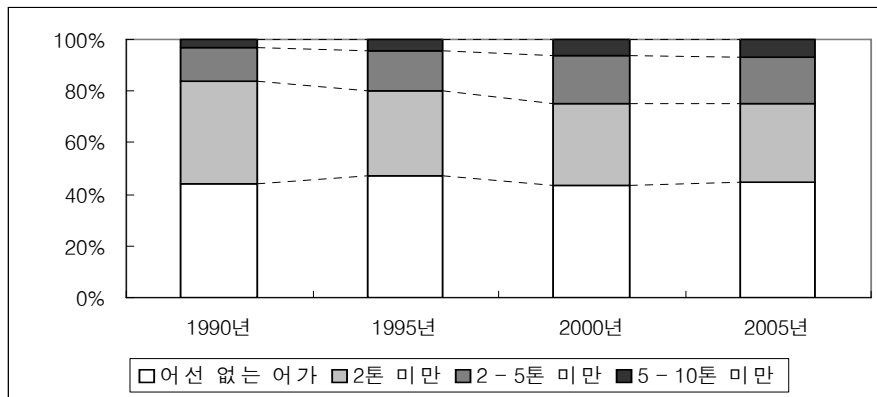
2) 생산시설 경영규모의 차이

어촌 내 불평등과 양극화는 가장 기본적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기반인 어선·양식장 등의 생산시설 경영규모의 분포에서 기인한다. 어선경영규모 및 양식장면적은 어업경영의 규모를 나타내고 이는 어업소득 사이에 양(陽)의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어업소득의 양극화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한편으로 어선과 양식장을 보유하지 못한 어선비사용 어가가 내부적으로 불평등도와 양극화 정도가 낮은 데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생산시설의 경영규모 분포의 특징과 소득분포의 특징을 연결하는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직관적으로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로서는 어선 규모 및 양식장면적에 따른 소득 자료가 없어 불평등과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계측하기 어렵다. 다만 통계청의 「어업기본통계조사」, 「어가경제조사」, 「어업총조사」 등 입수할 수 있는 통계에서 생산시설 경영규모의 추이는 파악할 수 있다.

〈그림 4-7〉에서 어선규모별 어가분포를 보면 5~10톤의 어가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반면 다른 크기의 어선규모의 어가는 줄어들고 있다. 특히 10톤 미만 어선규모인 연안어업 어가만을 놓고 볼 때 최근 5년 사이 5톤 미만 어선의 어가 수는 줄었으나, 5~10톤 규모의 어가와 어선 없는 어가의 수는 늘어나 어선규모에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10톤 이상의 기업형 경영체인 근해어선은 어선감척사업 등의 영향으로 6.2% 감소하였다.

〈그림 4-7〉 연안어선 경영규모별 어가수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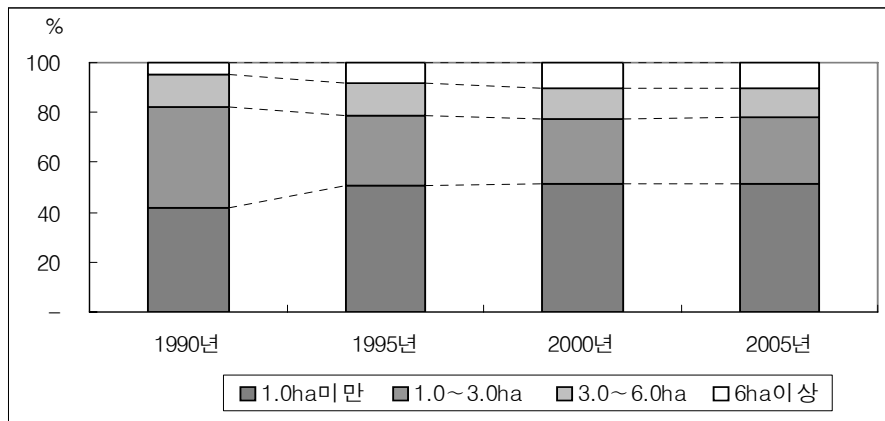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그리고 양식장 면적별 어가 분포 추이에서도 해조류 양식의 퇴조로 절대적인 양식면적은 크게 줄어든 가운데 최근으로 올수록 6ha 이상 또는 1ha 미만의 양식장을 경영하는 어가의 비중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 1~3ha 규모의 양식장을 경영하는 어가는 줄어드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그림 4-8〉 참조).

이와 같이 어선·양식장의 생산시설 규모의 차이로 인한 양극화 경향은 어업경영 규모에서 중간층이 얇어지고 영세 어업인과 규모화된 어업인으로 분화되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앞으로 이에 따른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4-8〉 양식장 경영면적별 어가수 비중 추이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2. 설문조사

지금까지 통계 자료에 기초하여 어가의 불평등지수 및 양극화지수에 의한 소득불평등 및 소득 양극화 실태를 살펴보고 그 원인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어업·어촌 관련 통계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한 데다 일부 분석의 기본 자료로 쓰인 「어촌계분류평정 및 현황」 자료는 비공식 통계여서 보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계 자료에 기초한 분석을 보완하기 위해 어업인과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어촌 현장에서 느끼는 소득 양극화 정도를 파악하고 통계적 분석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한 양극화 심화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를 양극화 완화 또는 해소 관련 대책 또는 정책수요를 파악하는 수단으로 삼아 어업인이 희망하면서 실질적으로 어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1) 설문조사 개요

본 설문조사대상은 어업인과 어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지방 해양수산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어업인의 경우 전국에 있는 한국 수산업경영인연합회 회원 263명, 공무원 57명 등 총 320명이 설문조사에 응하였다.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하여 어업인을 대상으로는 민간조사기관인 ‘(주)아이알씨리서치’가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를 작성하고 집계하였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하여는 우편으로 배포하여 회신을 받아서 집계하였다.

〈표 4-8〉 조사대상 표본의 특성

구 분		표 본(개)	구성비(%)
어업인 전체		263	100
연 령	20 대	16	6.1
	30 대	57	21.7
	40 대	125	47.5
	50 세 이 상	65	24.7
지 역	부 산	6	2.3
	인 천	5	1.9
	울 산	2	0.8
	강 원	17	6.5
	경 기	3	1.1
	충 남	21	8.0
	전 북	14	5.3
	전 남	110	41.8
	경 북	14	5.3
	경 남	58	22.1
	제 주	13	4.9

(계속)

〈표 4-8〉 조사대상 표본의 특성(계속)

구 분		표 본(개)	구성비(%)
어업인 전체		263	100
종사어업	어선 유자망	34	12.9
	어선 통발	23	8.7
	어선 연승	26	9.9
	어선 채낚기	17	6.5
	어선 기타	25	9.5
	어류 양식 넙치	21	8.0
	어류 양식 조피볼락	25	9.5
	어류 양식 기타	7	2.7
	패류 양식	40	15.2
	해조류 양식	43	16.3
	비어선 채취어업	2	0.8
종사기간	10년 미만	32	12.2
	10-20년 미만	83	31.6
	20-30년 미만	76	28.9
	30년 이상	72	27.4
소득 수준	1천만 원 미만	26	9.9
	1천-2천만 원 미만	53	20.2
	2천-3천만 원 미만	64	24.3
	3천-4천만 원 미만	36	13.7
	4천-5천만 원 미만	21	8.0
	5천만 원 이상	63	24.0
공무원 전체		57(지자체, 지방해양수산청)	
합 계		320	

어업인의 조사대상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40대가 가장 많고, 50대 미만이 전체의 75%를 차지해 대체로 젊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지역별로는 어업세력이 큰 순서대로 전남과 경남이 많았으며, 종사어업은 어선어업과 양식어업이 각각 48%, 51%로 비슷한 비중을 보이고

있다. 어업종사기간은 10년 미만이 전체의 12%에 불과하여 대체로 10년 이상 장기간 종사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 수준은 연간 3천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조사대상자가 전체의 약 46%를 차지하는데, 특히 5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도 24%가 포함되어 있다.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의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기 때문에 가구소득에서 어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가구소득 중 어업소득이 90% 이상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73%였고, 50% 미만은 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4-9〉 가구소득에서 어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어업소득의 비중	응답빈도	응답률(%)
50% 미만	21	8.0
50-70%미만	26	9.9
70-90%미만	24	9.1
90-100%미만	192	73
합 계	263	100

주요 설문내용은 타 부문과 비교하여 어가의 소득격차 및 생활환경격차의 실태·원인·대책방향, 어촌 내의 소득격차 및 양극화 실태·원인·대책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설문조사 결과

(1) 어촌과 타 부문과의 소득격차와 대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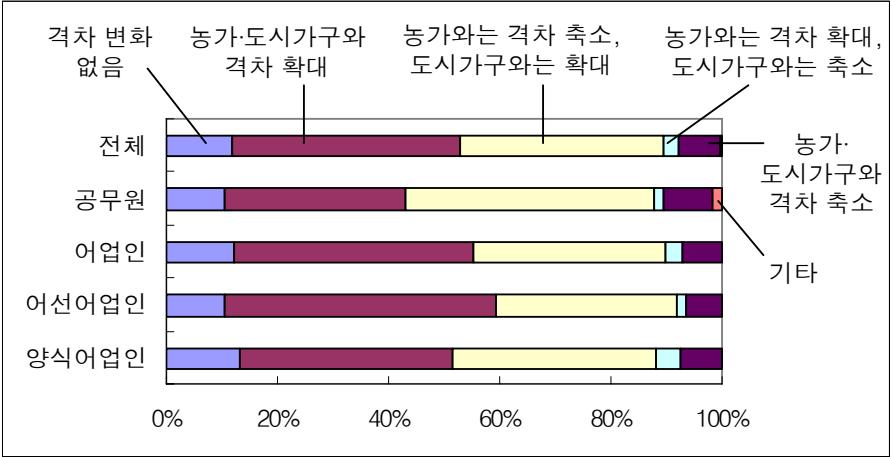
① 인식

지난 10년 동안 농가와 도시가구와 비교한 어가소득 격차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1%가 농가와 도시가구 모두와 격차가 확대되었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응답자의 36%는 농가와 격차가 줄었지만 도시가구와는 벌어진 것으로 보았

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도시가구와의 격차 확대에 대하여는 78%가 인식을 같이 하였으나, 농가와의 격차에 대해서는 의견이 양분되는 양상을 보였다.

공무원은 농가와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의견을 더 많이 제시하였고(53%) 어업인은 농가와의 확대되고 있다는 견해를 더 많이 지지하였다(46%). 특히 양식어업인(43%)보다 어선어업인에 있어 소득격차 확대 응답 비율이 높았다(50%).

〈그림 4-9〉 농가·도시가구 대비 어가소득 격차변화



②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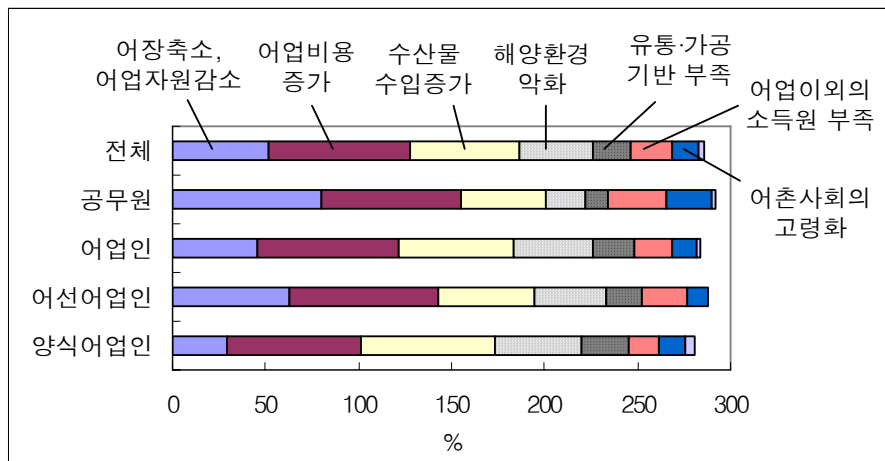
어가소득이 농가 또는 도시가구와 격차가 확대된 원인으로는 어업비용 증가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76%, 이하 복수응답), 수산물 수입증가(59%), 어장축소·어업자원 감소(52%), 해양환경악화(39%) 등의 순서로 많이 지적하였다. 어업 이외의 소득원 부족(22%), 어촌사회의 고령화(15%) 등은 전체적으로 많이 지적되지는 않았다.

어업비용 증가는 어업인이 많이 지적하였는데(76%), 특히 유류비 부담이 큰 어선어업인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1%). 양식어업인은

어업비용 증가(71%)보다 수산물 수입 증가에 더 민감한 반응을 드러냈다(72%). 이는 최근 수년 동안 상당수 양식 수산물이 중국산의 수입 증가로 타격을 입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공무원은 어장축소·어업자원 감소를 소득격차 확대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았다(80%). 아울러 공무원은 어업인보다 어업 이외의 소득원 부족(31%), 어촌사회의 고령화(23%)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0〉 농가·도시가구와의 소득격차 원인



③ 대책방향

농가 또는 도시가구와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데 필요한 대책으로는 어업자원 조성 및 어장환경 개선을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24%), 어업구조조정(21%), 어업 이외의 소득원 개발(20%), 수산물 유통·가공 기반 지원(20%)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볼 때 어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대책이 어촌의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는 대책보다 더 앞서 있음을 알 수 있다.

어업 이외의 소득원 개발에 대해서 공무원(22%)보다 당사자인 어업인(19%)의 응답비율이 낮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본 설문조사가 전업(專業)의 비율이 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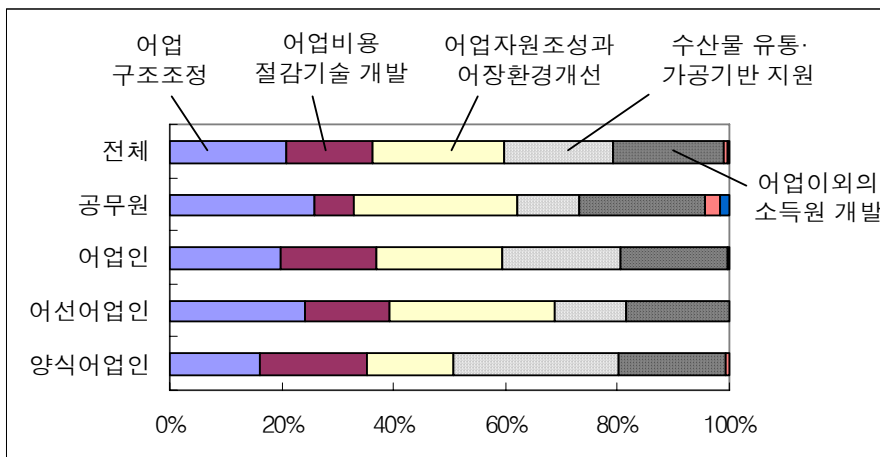
은 어업인후계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업구조 조정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경영체의 퇴출을 의미하므로 이들을 흡수할 수 있는 다른 소득원 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공무원과 어선어업인이 어업자원 조성과 어장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 반면에 어업자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양식어업인은 수산물 유통·가공 기반 지원에 가장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다(29%).

어업구조조정은 공무원(26%)과 어선어업인(24%) 모두 두 번째로 많이 제시한 대책인데, 이는 이들 집단이 격차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어업비용 증가, 어장축소·어업자원 감소를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어업비용을 절감하는 기술 개발에 대해서는 양식어업인이 비교적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19%) 반면, 공무원의 호응은 상대적으로 적었다(7%).

〈그림 4-11〉 농가·도시가구와 소득격차를 줄이는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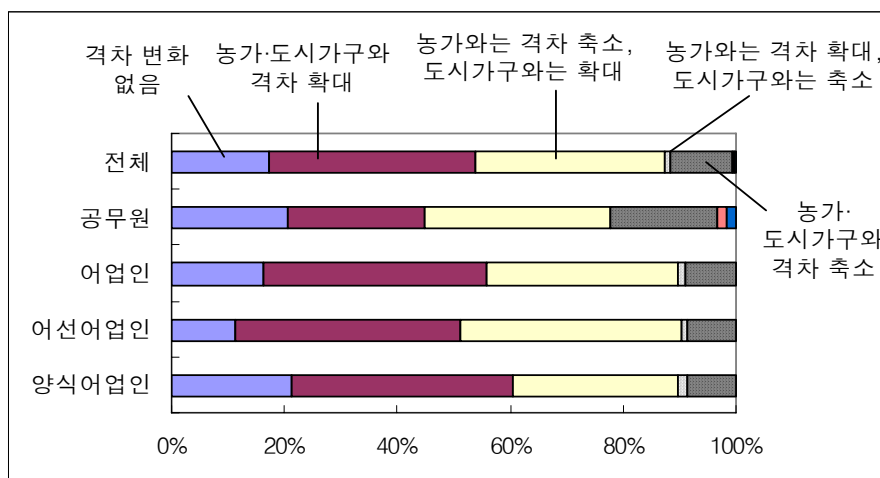
이처럼 어선어업어가와 양식어업어가는 인식하는 소득격차의 상이한 원인에 따라 각각 대책방향을 달리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관련 공무원은 어촌 전체의 상황을 고려하여 대책방향을 제안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 어가와 타 부문과 생활환경 격차

① 인식

지난 10년 동안 농가·도시가구와 비교한 교육·의료·문화 등의 생활환경 변화 추이에 대해 응답자의 37%가 농가·도시가구 모두와 격차가 확대되었다고 답하였다. 농가와는 격차가 줄었으나 도시가구와는 확대되었다는 의견도 34%로 비슷하였다. 소득격차 인식에 대한 의견과 마찬가지로 어업인은 농가와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은 반면 공무원은 농가와는 격차가 줄고 있다는 견해를 많이 제시했다.

〈그림 4-12〉 지난 10년 동안 어가의 생활환경 변화추이



또한 소득격차 인식에 대한 의견과 비교할 때 ‘격차 확대’를 응답한 비율이 약간 낮게 나와 생활환경의 격차를 소득격차보다는 덜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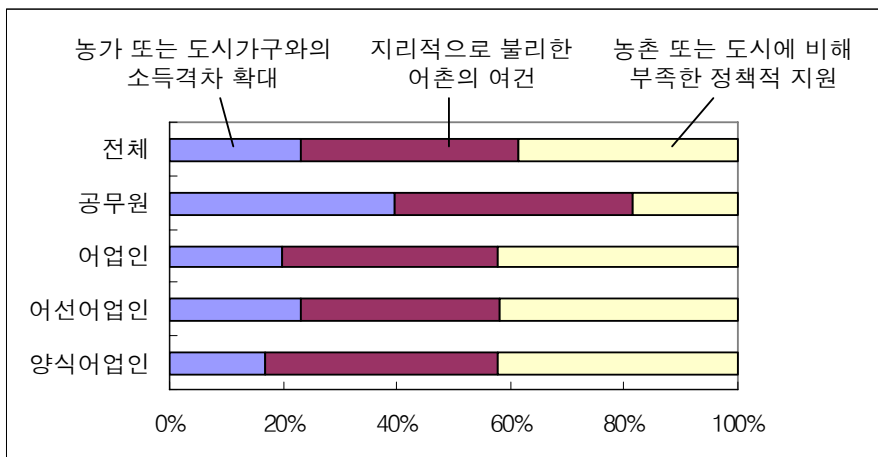
② 원인

전체적으로 농가 또는 도시가구와 비교하여 어가의 생활환경이 악화된 원인

으로 농촌 또는 도시에 비해 정책적 지원부족(39%), 지리적으로 불리한 어촌의 여건(39%)이라는 응답이 동일하게 많았다. 즉 차별적인 정책지원과 주어진 어촌의 여건 때문에 어가의 생활환경이 상대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농가 또는 도시가구와의 소득격차 확대가 생활환경의 악화요인이라는 응답은 23%였다.

생활환경 악화의 원인에 대한 인식이 어업인과 공무원 간에 매우 상이한데 어업인은 정책적 지원부족(42%)을 공무원은 어촌고유의 여건(43%)을 들고 있어 정부 정책에 대해 어업인이 더 많은 기대를 걸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응답이었다.

〈그림 4-13〉 농가·도시가구와의 생활환경 격차 원인



(3) 어촌내 소득격차(불평등)와 양극화 인식과 대책방향

①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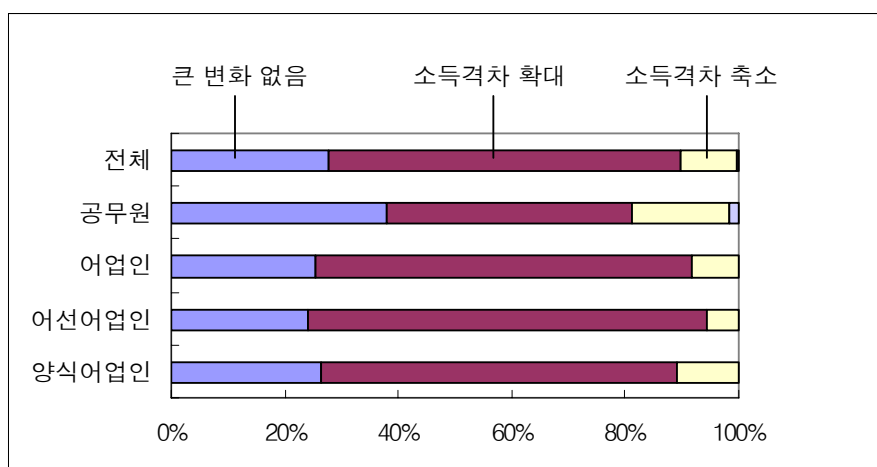
어촌사회 내부의 소득격차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2%가 지난 10년 동안 소득격차가 확대되었다고 응답하여 다수가 불평등이 더 심화됐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선어업인의 70%가 이같이 응답하여 어선어업의 불평등

지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 제3장의 분석내용을 뒷받침하였다. 양식어업인도 전체 비율과 비슷하게 응답하였다.

이와 달리 관련 공무원은 43%만이 어촌 내 어가 사이에 소득격차가 확대되었다고 응답하였고, 큰 변화가 없다는 의견도 38%로 많은 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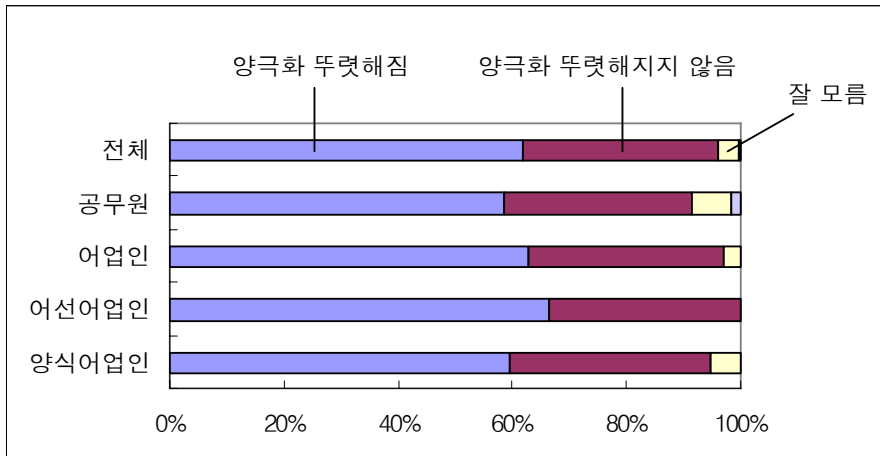
중산층이 사라지는 양극화에 대해서도 소득격차와 같은 비율인 62%가 지난 10년 동안 뚜렷해졌다고 응답하였다. 공무원도 59%가 이 같이 응답하여 소득격차 확대보다 양극화 심화에 문제의 심각성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4〉 어촌 내의 소득격차(불평등) 추이



한편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양극화 정도에 따라 어업 부문의 순위를 조사하였는데 1순위로 양식어업이 가장 많이 나왔고(57%), 그 다음이 어선어업(39%)이었다. 이러한 설문결과는 제3장에서 양식어업 부문에서 양극화가 보다 심하게 나타난 통계분석 결과를 뒷받침해 주는 의미를 가진다.

〈그림 4-15〉 어촌 내의 양극화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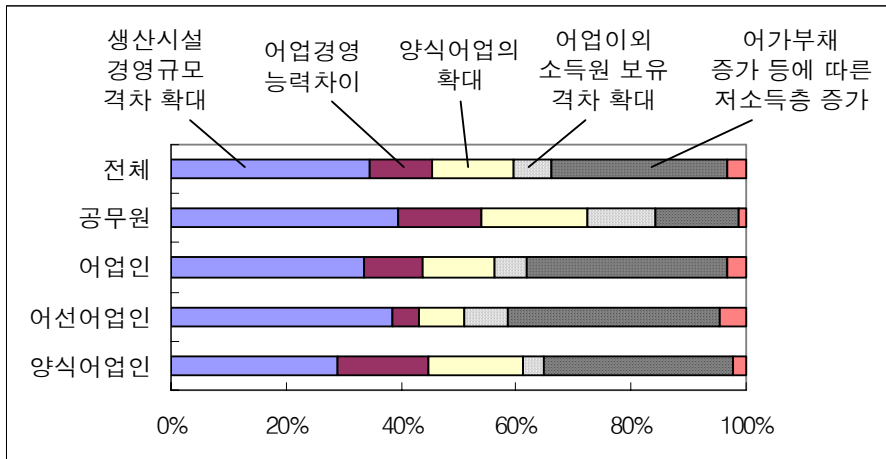


② 원인

소득격차 확대 또는 양극화 심화의 원인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36%가 어선·양식어장 등의 생산시설 경영규모의 격차 확대를, 32%가 어가부채 증가 등에 따른 저소득층의 증가를, 15%가 양식어업의 확대를 꼽았다.

생산시설 보유 규모의 격차 확대에 대해서는 어업인과 관련 공무원 모두가 응답 비율이 높았으나 어가부채 증가 등에 따른 저소득층 증가에 대해서는 어업인의 응답 비율이 공무원 응답보다 높게 나와 어업인이 어가부채 등에 따른 빈곤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림 4-16〉 어촌 내의 불평등·양극화 심화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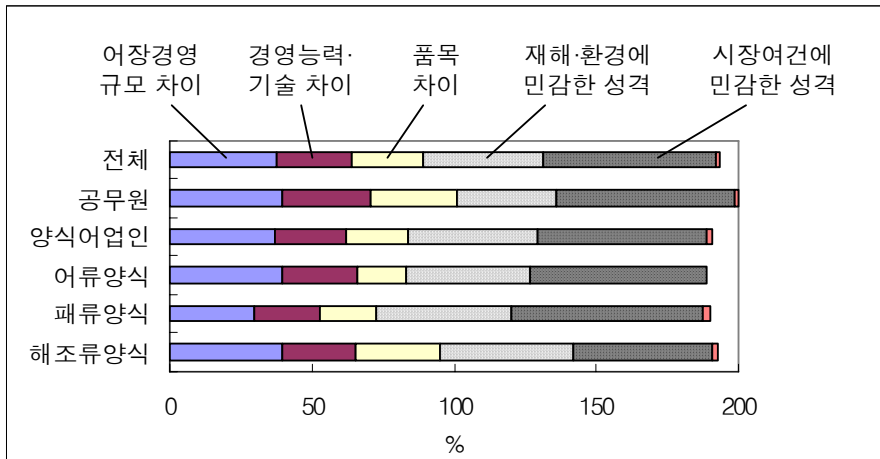


통계분석결과 및 설문조사 결과에서 양식어업 부문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하였다. 양식어업 부문의 양극화 원인으로 전체 응답자의 61%(이하 복수응답)가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폭락 등 시장여건에 대한 민감성을 꼽고 있다(〈그림 4-17〉 참조).

그 다음의 원인으로 재해·환경 등에 민감한 성격(42%), 어장 경영규모의 차이(36%)였는데 양식어업인이 전자에 더 많은 비중을 둔 반면 관련 공무원은 후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양식품목별로는 패류·어류 양식어업인이 해조류 양식어업인보다 시장여건에 따라 가격폭락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응답이 많았다. 반면에 해조류 양식어업인은 품목의 차이를 양극화의 원인으로 제시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30%) 이는 어류·패류에 비해 해조류 어업의 소득이 낮아 양극화를 체감하는 정도가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림 4-17〉 양식어업의 양극화 심화 원인



③ 대책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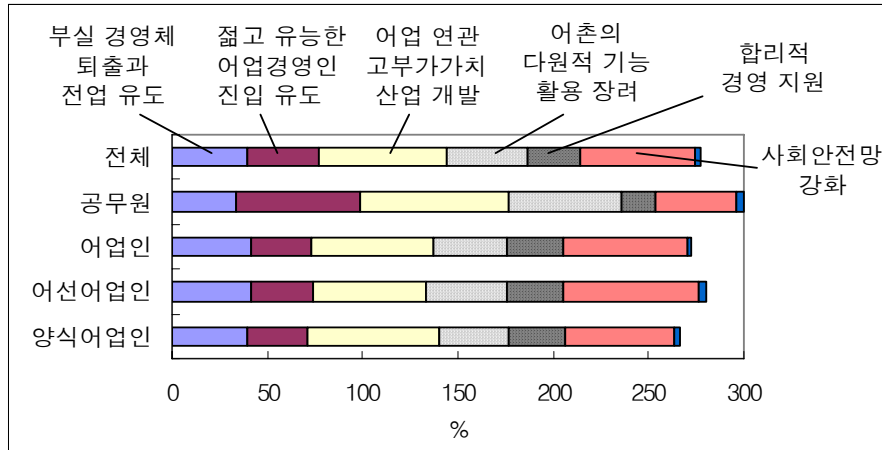
어촌 내의 소득격차를 줄이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대책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67%(이하 복수응답)가 어업과 연관된 고부가가치 산업 개발을, 61%가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꼽았고, 체험관광 등 어촌의 다원적 기능 활용 장려(42%), 부실 경영체 퇴출과 전업 유도(4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어업인들은 가공 및 유통산업 등 어업과 관련된 고부가가치 산업개발을 통한 어업소득 증대를 통한 소득의 격차해소를 바라고 있다. 동시에 소득을 늘리는데 한계가 많은 어촌의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의료, 생계보조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양극화를 줄이고자 한다. 그리고 체험관광 등 어촌의 다원적 기능의 활용 장려를 통한 어업외소득원 개발로 어촌의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한다. 즉 설문조사에서 어업인 또는 관련 공무원이 바라는 어촌의 양극화 해소 방향은 어업소득, 어업외소득 그리고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3가지 수단을 활용하는 방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응답별로 특이한 점은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해서는 어업인 응답률이 64%(2위)인 반면 관련 공무원은 43%(4위)에 그쳐 공무원보다 어업인이 그 필요

요성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무원은 어촌의 다원적 기능 활용장려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다.

〈그림 4-18〉 어촌 양극화 해소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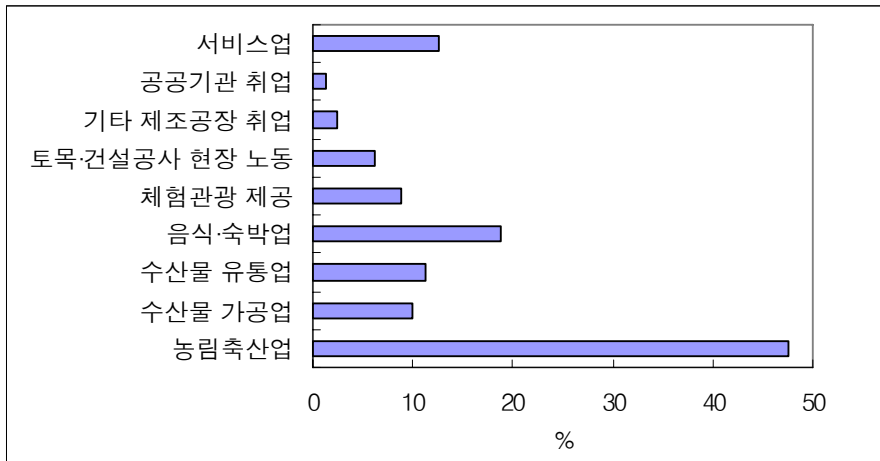


(4) 어업 이외의 다른 경제활동

① 어업 이외의 다른 경제활동의 종류

어업이외에 종사하는 다른 경제활동으로는 어업인의 48%(이하 복수응답)가 응답한 농림축산업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음식·숙박업(19%), 수산물 유통업(11%), 수산물가공업(10%)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어업이외 소득원으로 1차 산업이나 어업과 연관된 산업 이외에는 마땅한 소득원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4-19〉 어업 이외의 다른 경제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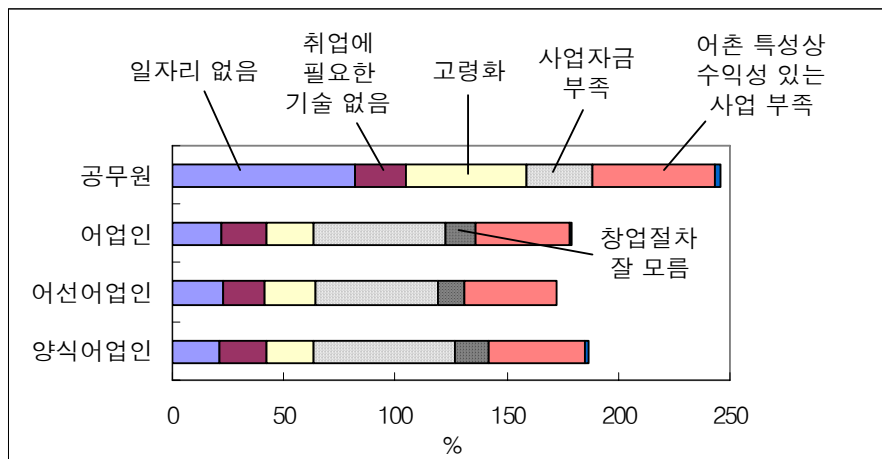


② 다른 경제활동 여건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어업 이외의 다른 경제활동 여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응답자의 69%가 다른 경제활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여건이라고 답하여 어촌에서 다른 경제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다른 경제활동을 할 의사는 있으나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어업인은 사업 자금 부족(59%, 이하 복수응답), 어촌의 특성상 수익성 있는 사업 부족(42%), 일자리 없음(22%), 고령화(22%)를 꼽았다. 이와 달리 공무원은 일자리 없음(82%)을 압도적으로 많이 지적하였고 어촌의 특성상 수익성 있는 사업 부족(55%), 고령화(55%)를 그 다음 이유로 많이 들었다.

〈그림 4-20〉 다른 경제활동 의사는 있으나 하지 못하는 이유



3. 소결 및 시사점

어촌 양극화의 원인을 통계자료 분석 및 설문조사로 살펴보았는데 대체로 통계자료를 분석한 내용과 설문조사 결과 내용이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설문조사를 통해 단순히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의 통계자료 분석에서 나열한 다양한 원인의 경중(輕重)을 가려내고 필요한 대책의 우선순위를 세우는 데 하나의 기준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통계자료 분석 및 설문조사 결과에 의한 어촌 양극화의 원인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하고 그 시사점을 살펴보려고 한다.

(1) 어촌과 다른 부문과의 소득격차 원인

통계자료 분석에 의하면 어촌과 다른 부문의 격차는 어업의 위축에 그 원인이 있으며, 어업의 위축은 어장축소 및 어업자원 감소, 수산물 수입증가와 수출경쟁 심화 그리고 어촌사회의 고령화 등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런데 설문조사에 의하면 어업비용의 증가가 소득격차 확대의 주 원인으로 제시되었는데 이 원인은 앞 절의 원인분석 결과를 보완하는 것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어업비용의 증가가 어업을 위축시키고 이로 인해 어업소득에서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다. 이는 특히 어선어업인을 중심으로 최근의 가파른 유류비 상승을 심각하게 체감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어업비용 증가는 어업조생산액은 증가하면서도 어업 GDP가 감소하고 있는 데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의 원인으로는 설문조사에서 어장축소·어업자원 감소, 해양환경 악화, 어업 이외의 소득원 부족, 어촌사회의 고령화 등의 순서로 지적되었다. 이 순서를 통해 원인의 경중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2) 다른 부문과 소득격차 해소대책

설문조사에 의하면 어업인들은 어촌과 다른 부문과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대책으로 어업자원 조성 및 어장환경 개선, 어업구조조정, 어업 이외의 소득원 개발 그리고 수산물 유통·가공기반의 지원을 제시하였는데 이들 대책은 주로 어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대책이라 할 수 있다.

(3) 생활환경의 격차원인

설문조사에 의하면 어촌과 농촌·도시 간 생활환경 격차의 확대의 원인은 소득격차보다는 차별적인 어촌정책 지원과 지리적으로 불리한 위치의 어촌 여건 때문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이는 소득격차를 줄인다고 해서 생활환경 격차가 해소되기 힘들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이 점은 소득 이외의 격차 문제를 다루는 2차년도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탐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4) 어촌 내 양극화와 불평등 원인

고수익·고위험의 양식어업 성장과 생산시설 및 경영규모의 차이가 어촌 내부에서 소득 불평등 및 양극화의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그런데 설문조사에 의하면 어업인은 그 원인으로 어가부채 증가 등에 따른 저소득층의 증대를 들고 있다.

어가부채 증가 등에 따른 어촌의 빈곤 문제는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아서 원인 분석에서 빠진 항목이다. 특히 어가부채 증가는 관련 공무원과는 대조적으로 어업인들이 많이 지적하여 어업인들이 어가부채와 빈곤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2차년도 연구에서 부채와 소득 사이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다룰 필요성이 제기된다.

(5) 양식어업의 양극화 심화 원인

양극화 정도가 큰 양식어가의 양극화가 전체 어촌 양극화를 주도하고 있는데 앞 절의 분석에서는 이러한 양식어업의 양극화 심화 원인으로 양식어업의 고수익성과 자연재해 등에 따른 고위험적 요소 때문으로 파악되었다. 설문조사 결과는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 등 시장여건에 민감한 성격이 두드러지게 지적되어 이 부분이 중요한 원인임을 부각하였다. 이 밖에 재해·환경에 민감한 성격, 어장시설 규모의 차이 등이 원인으로 제시되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주로 양식어업에 내재하는 고유한 특성에서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어촌내 양극화 해소 대책 방향

설문조사에 의하면 어촌 내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소득격차를 줄이는 대책으로는 어업과 연관된 고부가가치 산업 개발과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높은 비중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어촌에는 어업 이외의 다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지 않고 그나마 주로 1차 산업에 경제활동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어업 이외의 소득원 개발의 어려움과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7) 시사점

어촌 양극화 원인 및 대책방향에 대한 분석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어촌의 양극화 해소 방향은 어업관련 고부가가치 산업개발을 통한 어업

소득 증대 및 어업 이외의 소득원 개발을 통한 중산층 육성과 어촌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아울러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양식어업 부문에서의 구체적인 해소방안의 강구, 계속 증가하고 있는 어업비용문제, 어가부채문제 등의 해결을 통하여 어촌 내부의 양극화 완화 및 타 부문과의 소득격차 해소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제5장

어촌 양극화의 전망과 정책과제

1. 어촌 양극화의 전망

이상의 분석에서 최근 어촌-도시 간 소득격차 확대, 어촌 내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를 확인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였다. 이를 연구내용을 토대로 국제원유가격, WTO-DDA 협상, FTA 협상 등의 대외 변수, 어업 구조조정과 어촌 고령화와 같은 대내 변수를 감안하여 전망해보기로 한다.

1) 어촌과 도시의 소득격차 전망

현재 통계상으로 어가와 도시가구의 소득격차가 약간씩이나마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⁶⁾ 그러나 10년 전의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도 어가와 도시가구의 소득격차가 완화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격차가 확대될 여지가 더 많은데 그 이유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들 수 있다. 첫째, 어업 구조조정이 선행되지 않는 한 유류비 등 어업비용 상승, 어장축소와 어업자원 감소, 수산물 수출경쟁 심화 등으로 어업 부문의 소득을 늘리는 데에는 큰 한계가 있다. 특히 국제유가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여 어업비용이 내려갈 여지가 많지 않다. 양식어업이 잡는어업을 앞으로 더 대체하겠지만 현재 과잉생산의 위험을 안고 있는 양

26) 이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2003년부터 「어가경제조사」의 작성 범위가 확대된 영향 때문일 수 있다.

식어업도 수익성 제고가 쉽지 않은 상황에 있다.

둘째, WTO-DDA 협상 타결과 FTA 체결 등의 대외 변수는 어촌경제에 호재보다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교역환경의 변화로 수혜를 받는 업종은 도시의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고 어촌의 어업은 타격을 입을 우려가 있는 업종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관세가 높은 편이어서 이를 인하할 경우 증가일로에 있는 수산물 수입이 더 늘어나는 반면 전반적으로 관세가 낮은 해외로의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또한 여기에다 몇몇 수산보조금이 금지되면 어업과 어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셋째, 어촌에서 매력적인 다른 소득원을 개발하는 일이 단시일 안에는 쉽지 않다. 어촌관광이 대안적인 소득원으로 개발되어 왔으나 아직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열악한 기초생활환경,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경제 활력 저하 등 불리한 지역경제의 여건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지역여건으로는 설령 다른 소득원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어촌경제의 수익률이 도시경제의 수익률을 상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요컨대 기본적인 지역경제 여건에서 차이가 나는 데다 앞으로 개방화가 진전될수록 어촌 경제에 부정적인 효과가 야기되어 어촌과 도시와의 소득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에 대응한 과제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도시와의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 어업의 고부가가치화, 어업의 소득원 개발 등으로 어촌에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한다. 둘째, 어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어촌경제의 제반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초생활환경 개선과 어촌고유의 지역개발로써 다원적 기능을 갖춘 정주공간을 마련한다.

2) 어촌 내의 양극화 전망

향후 어촌 내의 양극화 추세를 전망하는 일은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원인은 주로 통계적인 분석에 기초해 있고 이를 보완하는 설문조사 결과도

심층적인 원인 규명에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요소들은 어촌의 소득 분포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고 여겨지지만 이것이 양극화 또는 불평등을 심화시킬지의 여부를 확실하게 밝혀내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이러한 요소들에 몇 가지 가정을 덧붙여 전망하고 그에 따른 대략적인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1) 양식어업의 지속적 성장

어촌의 소득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크게는 잡는어업과 양식어업의 비중 변화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양식어업이 성장하고 잡는어업이 위축되면서 어촌의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양식어가의 양극화와 불평등 정도가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 양식어업이 계속 성장한다면 어촌의 양극화와 불평등은 현재보다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어류 및 갑각류와 같은 고위험-고수익 양식품종으로 확대될 수록 더욱 그러할 것이다.

양식어업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적으로 잡는어업의 생산만으로는 늘어나고 있는 수산물 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운 데다 어장이 좁아지고 어업자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WTO-DDA 협상이나 한-중 FTA 같은 대외적인 변수에 따라 양식어업의 여건이 크게 변화될 가능성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므로 논외로 한다면 양식어업의 전망은 여전히 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식어업이 계속 강세를 보이면 어가의 입지유형별 사이의 격차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식어업은 연안촌락과 취락지구에서 비중이 높은 반면 도시근교에서는 어선어업의 비중이 높다. 지난 10년 동안 양식어업과 어선어업의 부침(浮沈)에 따라 연안촌락과 취락지구의 어가소득이 증가하고 도시근교의 어가소득이 감소하여 세 입지유형의 소득이 평준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양식어업이 더욱 강세를 보인다면 다른 입지유형의 소득이 도시근교보다 많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2) 어업 구조조정과 고령화

어업 내적으로는 어업 구조조정과 고령화가 큰 변화의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근해어선 위주로 해오던 어선감척사업을 연안어선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고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저인망류 어업의 구조조정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환경수용력과 시장경쟁력을 고려하여 현재의 양식어업 구조에 대한 재편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어업 구조조정 사업으로 어업자원 규모에 맞는 적절한 어획능력을 갖추고 시장 여건에 맞는 양식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되면 잔존 어업경영체의 경영성과는 크게 개선될 수 있다. 반면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밀려나는 어업경영체는 어촌을 떠나지 않는다면 채취어업 등과 같이 소규모 어업으로 전환하거나 어촌 내에서 다른 업종으로 직업을 전환하려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바로 어촌의 고령화 추세와 맞물리면서 어업의 세대 교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 어업인에게 구조조정 사업은 은퇴 기회로 활용할 유인이 많기 때문이다. 이를 뒤집어서 본다면 어촌에서 다른 경제활동의 여건이 나아지지 않는 한 어촌 잔류를 전제로 청장년층의 어업인이 어업을 그만둘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어업 구조조정은 어촌을 정예화된 청장년층의 어업경영체와 고령의 은퇴 어가로 양분할 것으로 보인다. 은퇴한 고령 어업인은 다른 직업에 종사하기보다는 단순 채취어업으로부터 얻는 소득 또는 이전소득·비사업소득을 기반으로 생계를 유지할 것이다. 반대로 잔류하는 어업경영체는 이전보다 규모화된 생산시설을 보유한 전업(專業)어가 또는 영어조합법인조직 등을 통하여 어업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즉 어업 구조조정은 고령자와 청장년층간에 생산시설경영규모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이는 어촌내 고령자와 청장년층간에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어업 구조조정과 고령화로 어업소득 계층분화가 촉진되면 어촌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러나 이는 어촌의 고령화에 따

라 과도기로 겪어야 하는 불가피한 측면이기도 하다. 어업 구조조정이 성공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는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

(3) 양식어업의 위험저감 제도 도입

양식어업의 경우 어업 구조조정이 양극화를 강화하는 요소만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구조조정을 통해 과잉생산의 위험이 감소되면 이는 양극화를 약화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와 비슷하게 현재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수산업관측사업을 확대하고 유통협약제도를 활성화한다면 과잉생산의 위험을 더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재해에 따른 위험도 양식재해보험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어 어느 정도 제도 내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양식어업의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이 양식어업에 내재한 위험에 기인한 면이 크다고 볼 때 제도적으로 위험을 감소시키는 이러한 장치들이 도입되고 활성화되면 양식어가를 비롯하여 어촌 내의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4) 소결

이상에서 어촌의 소득 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가려내 향후의 양극화 추세에 기여하는 모습을 부분적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표 5-1>과 같이 정리해보았다. 이들을 종합한 양극화의 다면적인 전망은 각 요소를 조합한 효과의 크기에 의존할 것이다. 그 효과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는 어려우므로 다른 연구과제로 미루기로 한다.

다만 부분적인 전망이지만 이를 기초로 양극화 문제에 대응하는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어업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등장할 고령의 은퇴 어가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시급하게 확충한다. 둘째, 잡는어업의 위축에 따른 어업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어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가의 전업(轉業)을 촉진하기 위한 어업의 소득원을 충분히 개발한다. 셋째, 양식어

업의 성장에 따른 양극화 심화를 막기 위해 양식어업에 내재한 과잉생산·재해피해의 위험을 줄이는 제도적인 장치를 서둘러 도입한다.

〈표 5-1〉 어업 부문별 양극화 심화 요소와 약화 요소

구 분	심화 요소	약화 요소
잡는어업	· 종사자의 고령화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단기 효과) ➡ 어선경영규모의 양극화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장기 효과) ➡ 어업소득 상황평준화
양식어업	· 종사자의 고령화 + 양식어업 구조조정(단기 효과) ➡ 양식시설경영규모의 양극화 · 고수익-고위험 품종의 양식 확대 ➡ 양식 실패 위험 증가	· 양식어업 구조조정(장기 효과) · 수산업관측사업 확대 · 유통협약제도 활성화 ➡ 과잉생산의 위험 감소 · 양식재해보험 도입 ➡ 재해 위험 감소

2. 어촌 양극화의 정책과제

1) 우리나라 양극화의 원인과 정책방향

(1) 양극화의 원인²⁷⁾

양극화지수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 현상은 1980년대 중반부터 외환위기 이전까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높은 경제성장세와 더불어 실질임금이 상승하면서 중산층의 비중이 확대된 덕분이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중산층이 축소되고 하위 소득계층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소득 양극화

27) 삼성경제연구소, 「소득양극화의 현황과 원인」, 2006. 8.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후 2000년대 들어 일시적으로 개선되었던 소득양극화지수는 2003년부터 다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는 소득 양극화 심화 추세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양극화 현상은 경기회복으로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으며, 양극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의 소득양극화지수(ER지수)와 소득불균등지수(지니계수)는 유사한 추세를 나타내면서 중산층 감소와 소득불균등 악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그리고 소득 양극화의 심화에는 경기적 요인으로 저성장과 내수침체, 산업·고용구조의 취약성으로 노동시장의 변화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거와는 달리 수출과 내수 간의 선순환 고리가 약화되어 수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고용과 투자는 크게 늘지 않는 등 수출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 든 것도 한 원인이었다. 노동시장의 경우에는 비정규직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급증이 양극화 심화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중국경제의 부상으로 인한 국내 및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심화와 자본 및 일자리의 해외이전 등 세계화 등에 의한 경제환경 변화는 우리나라의 제조업 기반을 약화시키고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급속히 진행되는 인구고령화 현상은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 이러한 불안정한 성장전망 속에 산업·고용·소득의 양극화 현상은 지속성장의 기반인 사회통합에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2) 정책방향²⁸⁾

양극화화는 분배구조의 악화로 사회통합기반을 저해할 뿐 아니라 물적 자본 및 인적 자본 등의 공급기반을 약화시켜 성장잠재력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 또한 산업간·기업간 양극화는 낙후부문의 비중을 증가시켜 경제 전체적으로 물

28) 재정경제부, 「경제양극화 현황과 정책과제」, 2005(국가비전 당정 워크숍 자료).

적 자본 투자의 축적을 저해하고, 고용 및 소득 양극화는 낙후부문 종사자 및 저소득층의 인적 자본의 축적을 저해하는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러한 양극화의 영향에 대처하고 그리고 양극화와 소득불균등을 함께 고려한다는 관점에서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그 정책방향을 선도부문과 낙후부문의 '동반성장' 전략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 구조적·사회적 통합에 두고 있다.

특히 동반 성장전략의 핵심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있으며, 이를 위해 교육·직업 훈련시스템 개선을 통한 인적자본의 확충, 차세대 성장동력의 확보 및 중소기업혁신 등이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즉,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모든 계층의 시장참여 기회의 확대를 통해 우리 사회의 잠재적 생산능력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것이 동반성장의 해법이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동반성장 전략과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정책방향²⁹⁾을 바탕으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제안된 구체적 정책과제 또는 방안을 정리해 보면 <표 5-2>와 같다. 이들 중 낙후부문 경쟁력 제고, 자활기회 확대 및 취약계층 지원확대 등은 어촌의 양극화 완화를 위한 유효한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29) 권오규 경제부 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시장원리를 폭넓게 도입하면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나가는 것이 최근 선진국들의 공통된 모습' 이라면서 '경기확장기에 가장 늦게 수혜를 얻고 경기 쇠퇴기에 가장 빨리 피해를 입는 계층이 저소득층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기를 지속적으로 확장시키기 위한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정책방향을 집중할 것' 이라고 말한 점을 비추어 양극화 해소방안의 정부 정책방향은 여전히 동반성장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연합뉴스 2006.7.21).

〈표 5-2〉 양극화 완화를 위한 국가 정책과제

구 분	정 책 과 제
선도부문 경제의 고부가가치화	기술 혁신형 성장전략 규제개혁 선진통상국가 실현
낙후부문 경쟁력제고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영세자영업자 대책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역간 균형발전 농업의 경쟁력 강화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자활기회 확대	일자리 기회의 확대 교육기회의 확대 직업훈련 기회의 확대 고용지원인프라 확충 근로소득보전제도(EITC) 도입검토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기업연금제도 도입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확대 장애인, 노인 등 지원 강화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자료 : 재정경제부, 「경제양극화 현황과 정책과제」, 2005(국가비전 당정 워크숍 자료)

2) 어촌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본 정책방향과 과제

(1) 기본 정책방향

어촌의 양극화 현상은 어업·어촌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사회경제 양극화 현상과도 밀접히 관련하여 발생하므로 우리나라 전체와 어촌과의 관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어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는 우리나라 전체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과 방안을 수용하고 타 부문과의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체계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어가의 소득 양극화 실태 분석 결과와 설문조사 결과, 앞에서 검토한 우리나라 전체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양극화 해소의 정책방향과 정책과제 등을 바탕으로 어촌 양극화 해소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실증분석 결과 어가의 경우는 타 부문과 비교하여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양쪽 모두가 심화되고 특히 도시가구와의 소득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간계층이 얇아지는 것을 개선 즉 중간계층을 복원시키는 방안³⁰⁾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소득분배의 개선으로 소득불평등과 소득중대를 통한 소득격차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촌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확충이 요구된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어업인과 관련 공무원은 어촌 양극화를 완화하거나 해소하는 대책으로 어업과 관련된 고부가가치 산업개발을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3〉 참조). 즉 어업소득의 증대에 의한 어촌의 양극화를 극복하자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의료, 생계보조 등 사회안전망의 강화를 통해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어촌의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30) 중산층 복원을 위해서는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건실한 유효수요 회복을 중점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표 5-3〉 양극화 해소 대책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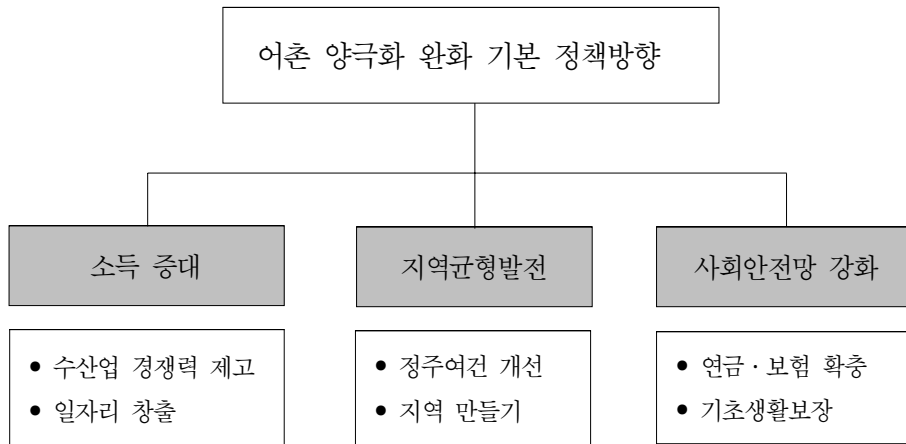
구 분	복수응답률(%)		
	어업인	공무원	전체
부실 경영체의 퇴출지원과 전업유도	41	34	40
고령 경영인을 대체할 젊고 유능한 어업경영인 진입유도	32	64	38
가공, 유통산업 등 어업과 관련된 고부가가치 산업개발	64	79	67
체험관광 활성화 등 다원적 기능 활용 장려	39	59	42
경영컨설팅제, 교육프로그램 등을 도입하여 합리적 경영지원	30	18	28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의료, 생계보조 등 사회안전망 강화	64	43	61
기 타	3	4	3

어업인들은 어업의 고부가가치 산업개발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동일하게 가장 우선하는 대책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어촌현실을 잘 반영하는 의견이라 할 수 있다. 반면, 공무원은 고부가가치 산업개발과 젊고 유능한 어업경영인의 진입유도 즉 어업과 관련된 내용을 우선대책 방향으로 꼽고 있다.

기타 대책방향으로는 체험관광 활성화 등 어촌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하는 대책, 부실 경영체의 퇴출지원과 전업유도 즉 어업구조조정 대책 등이 주요 해소 대책 방향으로 제안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본 정책방향,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및 설문결과 등을 고려하여 어촌 양극화 완화 또는 해소의 기본 방향을 도식화하면 〈그림 5-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어촌의 양극화 해소 기본 정책방향으로 첫째 어가소득의 안정적 확보, 둘째 어촌지역균형발전, 셋째 어촌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그림 5-1〉 어촌 양극화 완화의 기본 정책방향



(2) 정책과제

앞에서 제시한 기본 정책방향에 의거하여 어촌양극화를 완화 또는 해소하는 정책과제를 크게 세 가지부문 즉 어가 소득의 안정적 확보, 어촌지역균형발전, 어촌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이들 세 가지 부문에 대한 정책과제³¹⁾를 대략 제시하면 〈표 5-4〉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모든 정책과제를 다루기보다는 2차년도 연구에서 다루게 될 양극화 해소 방안과 연계하여 기존의 정책과제의 일부 또는 새로운 시각에서 앞에서 기본 정책방향별로 향후 정책과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서술하고자 한다.

31)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정책과제 및 해소방안 등은 2차년도 연구에서 보다 상세하게 다루고자 하므로 여기에서는 기존의 정책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표 5-4〉 어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구 분	정 책 과 제
어가소득의 안정적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소득의 안정적 확보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어업 경쟁력 강화 - 중간층 확보를 위한 사람육성 (교육지원, 전문어업경영체 육성, 어업경영컨설팅 지원 등) ○ 어업의 소득 확보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기회확대 (어촌관광, 공공사업 및 사회적 서비스업 발굴 등) ○ 직접소득지원(수산물불제 등)
어촌지역균형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환경 및 정주여건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림어촌지역개발기본계획추진 -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어촌·어항법) 수립 및 추진 -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 ○ 지역만들기 (어촌주민과 국민이 함께 하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복합공간, 생활복합공간, 산업복합공간
어촌사회 안전망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복지기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림어촌지역개발기본 계획추진 -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어촌·어항법) 수립 및 추진 ○ 어촌사회 안전망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차원의 사회안전망 강화(연금 및 보험 등) - 어촌차원의 사회안전망 확충(어촌계의 사회자본 활용)

① 어가소득의 안정적 확보(소득정책)

어촌의 양극화 및 타 부문과의 소득격차를 해소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어가소득의 안정적 확보인 소득정책이라 할 수 있다. 어가의 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와 달리 어업소득만으로 생계를 꾸려가기가 힘들므로 어업의 소득원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동시에 최근 수산물시장 완전개방에 대비하여 상대적 열위에 있는 어가경영의 안정을 위한 직접소득지원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어가소득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소득

정책으로는 어업소득·어업외소득 개발, 직접소득지원 등이 있다.

어업소득의 향상을 위해서 현재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이 강구 또는 검토되고 있는데 크게 보면 어업경쟁력강화, 수산업의 고부가가치산업개발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주로 산업적 측면에서의 수산업의 성장을 의미한다. 수산업의 성장을 통한 어업소득의 향상은 워낙 광범위하고 다양한 세부과제가 추진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어업인의 역량을 제고하여 어업소득을 향상시킬 것인가 하는 사람육성문제, 어업외소득 증대 방안으로 어촌일자리 창출과 어가소득의 안정화를 위한 수산직접지불제에 대하여 정책과제로 제시하고자 한다.

가. 중간층 확보를 위한 사람 육성(전문어업경영체 육성)

어업생산만으로는 어업소득의 증대에는 한계가 많고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어업경영의 다각화와 어업의 부가가치 증대를 통한 어가소득을 증대시켜야 하는데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체로 영어조합법인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영어조합법인은 의욕과 열의를 가진 선진어가를 조합구성원으로 하는 소수정예의 생산자 단체이다. 이들 영어조합법인 중에서 성공했거나 또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법인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어촌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성공한 영어조합법인의 경우 소득증대효과, 지역고용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경제사회에 파급효과가 높고 기여하는 바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영어조합법인을 어촌사회의 핵심세력으로 육성하여 전국 어촌에 시범모델로 전파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향후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할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육성과 지원대책을 간략하게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교육 실시, 맞춤형 경영컨설팅 서비스 제공, 컨설팅 쿠폰제 도입 등을 통하여 전문경영교육 및 컨설팅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인터넷 수산물시장 기반구축, 홈페이지 구축 등 직거래 활성화 기반조성에 대하여 지원한다.

셋째, 운영정보, 사업정보, 상품정보 등을 공유하고 교환할 수 있는 정보교류 및 교환의 장을 마련하여 상호거래를 통한 사업경영의 이점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정보교환 및 제공 등 정보화 기반을 마련한다.

넷째, 지역수산물을 활용하여 지역브랜드를 만들고, 지역민을 고용하는 등 영어조합법인은 지역사회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지역의 기업으로 발전가능성이 많으므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확대가 요구된다.

나. 일자리 창출

어가는 순수 어업소득만으로 어가를 꾸려갈 수 없으므로 대체로 어업이의 소득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앞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농업 외에는 마땅한 일자리가 없고 특히 어촌의 지리적 특성상 수익 있는 사업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어촌과 어업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이와 관련된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과거 어업구조조정으로 인한 타 산업으로의 전업실태를 검토한 바에 따르면 어업인의 경우 어업 관련 또는 어업을 활용하는 일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즉 타 산업으로의 전업은 대부분 실패하거나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일자리 부족, 기술 부족 그리고 고령화 등이었다.

따라서 어촌의 일자리 창출로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어촌개발 사업 또는 어촌관광사업과 관련된 일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어촌지역 내 도로개설 및 어항개발 등 공공사업장 취로, 어촌관광사업 참여유도(민박업, 식당운영, 관광안내자로 고용) 등이 해당된다.

둘째,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된 일자리의 취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단순노무직 일자리(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오염해역준설사업, 해중경관지역 기초조사사업, 선대구조개선사업 등), 대졸 이상의 전문직 일자리(어항시설안전점검, 수산통계 조사요원, TAC옵서버요원 등) 등이 있다.

셋째, 고령화된 어촌의 특성을 고려하여 향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사회적 서비스업과 관련된 일자리를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노인 간병, 방문도우미 등이 해당된다.

다. 수산직접지불제를 통한 어가소득의 안정화

최근 WTO/DDA 및 FTA 협상 추진으로 수산보조금 및 관세 철폐 등 시장 개방 압박이 가중되면서 어가소득의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직접지불제를 수산부문에 도입하여 어가소득의 안정화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검토되고 있는 수산직불제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조건불리직불제, 한계어촌정착지원직불제, 전통어업지원직불제, 도시민교류촉진직불제 등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 양식어장휴식년직불제, 인양폐어구수매직불제, 배합사료 직불제 등을 통하여 친환경어업 실시로 어장환경을 개선한다.

셋째, 휴어직불제, 친환경어구사용직불제 등을 실시하여 수산자원관리를 촉진한다.

넷째, 어업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의 은퇴를 유도하는 경영이양 지원직불제의 실시를 고려한다.

② 어촌지역균형발전

어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어촌경제의 제반 여건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도시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촌의 정주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기초생활환경 개선과 어촌 고유의 지역개발을 통해 다원적 기능을 갖춘 정주공간의 확보로 실현될 수 있다.

어촌 주민들과 도시민들이 '살고 싶고', '돌아오고 싶은' 어촌이 되려면 국가적 최소단위(National Minimum)의 정주환경을 확보해야 한다. 국가적 최소단위를 만족한다는 것은 정주환경 지표로 볼 때 전국 최소수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는 것을 뜻한다.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도시와의 정주환경을 비교한 최근의 조사결과를 보면 어촌의 낙후 정도를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2004년 실시된 농림어업인 복지 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은 도시에 비해 크게 열악한 것으로 나타난다.³²⁾ 도로포장률은 도시가 83%인 데 반해 농산어촌이 51%이고, 1970년 이전에 지은 노후주택 비율은 도시가 5%, 농산어촌이 20%, 빈집 비율도 각각 3%, 8%로 차이가 크다. 상수도 보급률도 농산어촌이 도시의 절반 수준이고 하수도 보급률은 이보다 더 못한 3분의 1 이하 수준에 그친다. 주택시설에 대한 신·개축 의사 면에서도 농산어촌(17%)이 도시(8%)보다 높다. 이는 어촌 주민의 편익 향상을 위해 주거, 교통, 상·하수도 등 기초생활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점은 문화복지 기반에서도 비슷하게 드러난다.³³⁾ 같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산어촌의 문화·예술 시설 이용률은 33%로 55%인 도시에 비해 크게 낮다. 문화·여가 시설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농산어촌(10%)이 도시(2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는 농산어촌의 특수성을 반영한 문화 복지 기반의 구축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이를테면 어촌 중심지역에 문화센터를 세우거나 마을단위의 생활체육시설 등을 확충하고, 직접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정주환경 개선과 함께 어촌개발에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은 개발과정에서 어촌 고유의 뛰어난 경관 등의 부존자원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활용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앞의 조사결과를 보면 농산어촌의 경관 보존에 대해 농산어촌 주민이나 도시민의 상당수가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³⁴⁾ 이는 어촌의 정주환경 개선에 친환경 개발방식을 도입하고 이를 어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의미한다.

32) 농림부, 「농림어업인 복지 등 실태조사 결과」, 2004. 12.

33) 전계서.

34) 전계서.

이처럼 도시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 국가적 최소단위의 정주환경을 달성하면서 지역의 뛰어난 부존자원을 활용하려면 정부 차원의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에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어촌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이다. 앞에서 인용한 조사를 비롯하여 지금까지 몇몇 실태조사가 있었으나 농촌지역 중심이어서 어촌이 소홀히 다뤄지거나 어촌의 어업기반 시설 위주로 조사가 되어 어촌 주민의 생활환경에 대한 실태파악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진된 정부의 각종 어촌개발사업은 어촌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어촌 주민이 소외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³⁵⁾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도 생활환경 격차 원인이 농촌과 도시에 비해 정책적으로 차별 지원한 때문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현재 어촌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림어촌지역개발기본계획’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있다. 이와는 별도로 해양수산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어촌·어항법)’이 조만간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두개의 계획은 법정 계획으로 내용이 중복될 가능성이 많은데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어촌개발사업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엄격히 하자면 이는 연안어업 관련 개발사업으로 어촌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어촌정주환경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어촌을 열린 공간으로 국민에게 제공하여 어촌주민과 도시민이 함께하는 생활복합공간, 산업복합공간 그리고 놀이복합공간으로 어촌공간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다양한 기능으로 어촌공간의 활용을 통하여 어촌주민과 도시민 모두에게 유익함을 주는 상생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러한 복합공간으로서 어촌공간 활용에는 어촌의 고유자원을 활용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어촌경관이 잘 보전될 필요가 있다.

35) 2006년 현재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어업인에 대해서 해양수산부, 농림부, 교육부 등 14개 부처가 99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③ 어촌사회안전망³⁶⁾ 확충에 어촌계의 사회자본 활용

국가차원에서 빈곤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확충 프로그램을 운영 또는 가동 중에 있는데 어촌에 대하여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림어촌지역개발기본계획' 이 이에 해당된다. 동시에 해양수산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어촌·어항법)' 이 조만간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계획추진에 의해 향후 어촌사회안전망은 확충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국가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차원에서 어촌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새로운 시도로 어촌사회를 구성하고 꾸려나가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어촌계(漁村契)를 적극 활용하여 어촌지역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다. 국가와 지역사회의 역할 분담에 의한 당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어촌계는 전통적인 동계(洞契)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지역단체성이 강한 촌락 공동체적 운영원리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어촌계는 공공재인 공동어장에서 공동작업-공동분배, 그리고 상호부조 정신 등이 강하게 남아있는 어업 또는 어촌공동체로 특히 최근 연구에 의하면 사회자본이 가장 많은 단체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어촌계는 매년 어장이용료 징수 또는 어촌계 공동사업 등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의 일부분에 대하여 어촌계원에게 배당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노인정 건립, 마을차량구입(위급 시 주민 수송용), 마을사업에 자금지원, 봄·가을 어버이날 경노잔치 및 일일관광 지원 등 어촌주민을 위한 다양한 지역사업을 하고 있다.

특히 배당금은 어촌계별로 상이한데 이러한 배당금은 어촌에서 고령의 노인에게는 주요한 수입원이며 생계수단이라 할 수 있다. 고령의 어촌계원일지라

36) 사회안전망은 실업·질병·노령·빈곤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빈곤층 및 취약계층보호를 위한 공공부조, 국민들의 복지지원 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노후소득보장, 건강 등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험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된다.

도 자격을 박탈하지 않고 계원으로서 보듬어 안고 대우를 하며 배당금을 지급하여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 고유의 촌락공동체를 통한 당해 지역의 사회안전망을 고도화할 수 있다.

어촌계 사업을 활성화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촌 스스로의 힘에 의한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안전망 추진주체가 될 수 있도록 육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어촌계의 지역부양능력을 2차년도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 어촌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체로 역량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우리나라는 소득 양극화와 소득불균등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으나 특히 소득 양극화가 소득불균등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또한 심화되고 있다. 양극화 현상은 산업구조의 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도 볼 수 있으나 경기가 회복되어도 양극화의 정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에 정부는 양극화 완화 또는 해소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사회경제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일부는 추진 중에 있다.

그런데 어촌은 타 부문 특히 농촌과 도시와의 소득격차로 우리나라 사회양극화의 한 극으로만 막연히 인식되어 왔지 어촌 양극화 문제에 대해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체로 어촌문제는 농촌과 함께 다뤄지는 것이 보통이어서 어촌과 어업현실이 반영된 어촌 양극화를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한계가 많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2개 년도에 걸쳐 수행되는데 1차년도인 올해는 어촌의 소득 양극화 및 불평등 실태를 분석하여 그 원인을 규명해보고 향후 전망과 함께 양극화 완화 또는 해소를 위한 기본정책 방향 및 향후 정책과제의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어촌의 양극화 문제는 소득뿐만 아니라 교육·문화·복지 등에서 다차원적으로 접근하여 다뤄져야 한다. 그런데 1차년도 연구에서 소득 양극화에 초점을 맞춘 것은 여러 측면에서 발생하는 성과의 격차가 결국은 소득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가장 기본적인 분석 대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차년도에서는 소득 양극화를 제외한 사회양극화 실태를 조사하여 타 부문과 비교분석하고, 1차년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어촌유형별로 양극화 해소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으로 1차년도 주요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아울러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 등을 포함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주요 연구결과

1) 양극화 및 불평등 실태

어촌 내의 양극화 분석에 앞서 어촌의 경제적 지위를 파악하기 위해 농촌·도시와 소득의 특징을 비교하였다. 이에 따르면 어촌의 소득은 농촌과의 격차를 좁히고 있으나 도시와는 상당한 격차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어가는 어업소득만으로는 가계비를 충족하지 못해 어업외 다른 소득원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 소득구조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어촌 내의 양극화 실태 분석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현재 어촌 내의 양극화 정도와 불평등이 농촌·도시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인 수준에 있다. 둘째, 1995~2005년 추이를 볼 때 2000년에 소득 감소와 함께 양극화와 불평등이 완화되다가 2005년에 소득이 늘어남과 동시에 양극화 정도는 1995년보다 심화되고 있다. 셋째 2005년을 기준으로 할 때 종사유형 중에서는 양식어업어가, 입지유형 중에서는 취약지구의 어촌(계)이 양극화 정도와 불평등도가 높았다.

2) 양극화 원인과 전망

어촌 양극화 심화의 원인으로는 잡는어업의 퇴조와 양식어업의 성장, 어선·양식장의 보유 또는 경영규모의 차이를 들 수 있다. 과잉생산으로 가격폭

락 등의 시장 여건과 자연재해·어장환경에 민감한 탓에 양식어업은 양극화와 불평등이 높은 부문인데 어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어촌의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어업인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이상의 원인이외에 설문조사에 의하면 어업인들은 어가부채 증가 등에 따른 저소득층의 증가가 양극화 심화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타 부문과의 소득격차 원인으로는 어업비용의 증가를 꼽고 있다.

향후에도 양식어업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어업 구조조정이 어촌의 고령화와 맞물려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고령의 은퇴 어가와 정예화된 어업경영어가 양분되는 양극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WTO-DDA, FTA 등이 타결되면 어촌의 소득을 더욱 떨어뜨릴 여지가 많아 도시와의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3) 기본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향후 양극화에 대한 전망을 고려하고 양극화의 원인에 대응하여 양극화를 완화 또는 해소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방향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어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어촌사회에 잔류할 고령의 은퇴 어가에 대한 대책이 요청된다. 이와 관련한 정책과제는 크게 어업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는 수산업 고부가가치화와 어업경쟁력 제고, 어업 이외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복지기반을 확충하는 큰 틀에서의 사회안전망 강화가 될 것이다.

따라서 어촌의 양극화 대응 기본 정책방향은 3가지로 첫째 어가소득의 안정적 확보, 둘째 어촌지역 균형발전, 셋째 어촌사회의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정책방향에 따른 정책과제를 대략적으로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가소득의 안정적 확보 방안으로는 어업소득 및 어업의 소득의 증대, 수산직불제 등에 의한 직접소득 지원 등이 있다. 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

이 강구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특히 어업인 능력과 역량에 주목하여 어업인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소득증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람육성 즉 전문어업경영인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둘째, 어촌지역균형발전의 정책과제로는 국가적 최소단위의 기초생활환경 및 정주여건 마련과 국민과 함께 하는 복합공간으로 어촌지역 만들기를 통해 어촌과 도시가 상생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어촌사회 안전망 확충의 과제로는 국가 차원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함께 새로운 시도로 어촌계의 사회자본을 활용하여 어촌의 지역차원에서도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 정책제언

1차년도 본 연구는 주로 양극화지수의 실증 분석에 의한 어촌 전체의 양극화 실태와 원인 파악에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어촌계 자료를 활용하여 어촌 양극화 정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객관적 통계자료의 미흡으로 종사유형별 또는 입지유형별로 세분화된 실태와 원인 규명이 불가능했으며, 소득 이외의 사회 양극화 실태를 분석하기에도 한계가 많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안된 정책과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제시되었다기보다는 향후 2차년도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어촌 유형별 양극화 완화 또는 해소 방안연구를 염두에 두고 그 방향성에 초점을 두고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2차년도 연구에서 제시되는 보다 구체적인 양극화 완화 또는 해소방안이야말로 정책적으로 유용한 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2차년도 연구에서는 소득 이외의 격차를 포함하는 사회양극화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하여 어촌사회양극에 대한 새로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1차년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어촌유형별로 심층적인 사례조사 분석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양극화 완화 또는 해소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처음으로 어촌의 양극화 문제를 정면에서 다뤘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으며, 그동안 어촌을 대상으로 한 관련 연구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와 어촌 정책 입안자들에게 유용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혜정, “농가소득 양극화, 그 실태와 정책과제”, 「농업·농촌의 양극화 실태와 대응(제14회 연례심포지엄 주제발표 논문집)」, 사단법인 농정연구센터, 2006.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업 양극화 문제 해소방안」, 2005. 8.
_____, 「양극화 문제 해소방안 연구 중간보고서」, 2006.
- 김홍중 외, 「전 세계적 양극화 추세와 해외 주요국의 대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과 정책과제」, 2004. 3.
- 박시현 외, 「경제활동기회의 농촌지역간 차이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12.
- 박준기 외, 「저소득농가의 농가경제 실태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4.
- 삼성경제연구소, 「소득양극화의 현상과 원인」, 2006. 4.
_____, 「소득양극화의 현황과 원인」, 2006. 8.
- 수협중앙회,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 1995·2000·2005.
- 신동균 외, “소득분포의 양극화 추이”, 「노동경제논집」, 제28권 제3호, 한국노동경제학회, 2005.
- 안동환, “도시근로자가구와 농가의 소득불평등도 비교 분석: 엔트로피지수의 그룹별·소득원별 분해”, 「농업경제연구」, 제45권 제1호, 2004.
- 이동필 외, 「도농간 소득 및 발전격차의 실태와 원인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 재정경제부, 「경제양극화 현황과 정책과제」, 2005. 3.

정책기획위원회, 「사회비전 2030」, 2006.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각 년도.
 ———, 「어업총조사」, 2000 · 2005.
 한국개발연구원, 「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경제정책 제언」, 2006.
 해양수산부,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각 년도.
 ———, 「주요양식품중 어가별 소득자료집」, 2003.
 KDI경제정책정보센터, 「해밀턴 프로젝트」, 2006.

J. Duclos, J. Esteban, D. Ray, “Polarization : Concept, Measurement, Estimation”, *Econometrica*, Vol. 72, 2004.
 Esteban, Joan Maria, and Ray, Debraj. “On the Measurement of Polarization”, *Econometrica*, Vol. 62, 1994.
 Esteban, Joan Maria, Gradin. Carlos, and Ray, Debraj, “Extensions of a Measurement of Polarization with an Application to the Income Distribution of five OECD countries”, Mimeo, Instituto de Analisis Economico, 1999.
 Gradin, Carlos. “Polarization by Sub-Populations in Spain, 1973-91”, *Review of Income and Wealth* Vol. 46, 2000.
 M. C. Wolfson, “When Inequalities Diverge”,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4, 1994.
 Shorrocks, A. F., “Inequality Decomposition by Factor Components”, *Econometrica*, Vol. 50, 1982.

<http://ecos.bok.or.kr/>(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fs.fips.go.kr/main.jsp>(해양수산부 어업생산통계시스템)
<http://kosis.nso.go.kr/>(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부 록 1

2007년 2차년도 연구계획

1) 제목 : 어촌 유형별 양극화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2) 목적

- 어촌유형별 양극화 해소방안을 도출
 - 1차년도 연구 결과에서 어촌계별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 정도, 종사유형 및 입지유형에 의거 9개의 어촌유형을 도출하였으며, 이들 어촌유형별로 양극화 해소방안 제안을 목적으로 함
- 본 연구는 어촌유형별 양극화 해소방안이자 동시에 어촌유형별 어촌발전 방안이기도 하므로 향후 어촌발전 전략 및 정책 수립에 주요한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함

3) 연구방법

- 어촌양극화 해소 수단의 범위를 확정(해소수단의 리스트 작성)
 - 기존의 다양한 양극화 해소수단을 검토하여 본 연구에 적용할 범위를 확정
 -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림어촌지역개발기본계획,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비교 검토
 - 거시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해소수단 검토

- 본 연구에서는 지역균형발전, 복지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해소방안에 중점을 둬
- 설문조사 : 유효한 조사표 작성이 중요함
 - 어촌과 어가를 대상으로 상이한 내용의 구조화된 설문서에 의한 조사
 - 어촌(어촌계)조사 : 1 유형별 22개 어촌조사/총 198개 어촌(계)조사
 - ※ 총 1900여개 어촌계의 약 10%에 해당
 - ※ 조사내용 : 소득 이외의 부문 격차실태 및 원인조사
어촌계의 능력(어촌지역 사회안전망 구축 및 지원주체)
 - 어가조사 : 조사대상 198개 어촌(계)별 어가수의 10%
 - ※ 조사내용 : 해소수단 적용 가능성조사, 새로운 해소방안 발굴 등 조사
- 사례분석
 - 설문조사를 보완하기 위한 심층 사례분석
 - 사례분석대상 : 18개 어촌(유형별로 2개씩)
 - 어촌 양극화의 실태 및 영향과 해소방안
- 양극화 해소정책 및 방안 선진 국내외 사례연구

4) 주요 연구 내용

- 1차년도에서 다루지 못했던 소득 이외의 부문 즉 생활환경, 복지 및 교육 격차에 대한 실태 및 원인 분석
 - 특히 농가와 도시와 비교 검토
- 유형별 해소수단 적용 가능성(범위와 한계) 검토
- 새로운 해소방안 발굴
- 선진외국 해소방안 사례의 시사점

- 어촌유형별 해소방안 도출
- 정책과제 검토
 -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해소방안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제도개선 등의 정책과제를 제안

5) 연구추진 방법

- 지역대학과 협동연구로 추진

부 록 2

어촌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에 대한 의견조사표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해양수산정책의 수립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원은 **어촌사회의 양극화 실태와 정책방향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 수행에 어업인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본 설문조사표를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귀하의 의견이 정부의 수산정책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사표에 기입하시는 사항은 연구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개인에 관한 사항은 일체 공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1월



수산·어촌연구본부

연구책임자 최성애 ☎ 02) 2105-2865

담당자 김봉태 ☎ 02) 2105-2751

(어업인용)

먼저 귀하에 대한 기본 사항을 기입해주시요.

- 1) 성 명 : _____
- 2) 연 령 : _____ 세
- 3) 주 소 : _____
- 4) 전화번호 : _____

귀하 가구(동거하는 모든 가구원)의 경제활동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문1. 현재 귀하 가구가 주로 종사하는 어업은 무엇입니까?

- | | |
|------------|----------------------|
| ① 어선어업 | ② 양식어업 (품목 : _____) |
| ③ 비어선 채취어업 | ④ 기타 (_____) |

문2. 귀하 가구의 어업 종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_____ 년

문3. 현재 귀하 가구의 연간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 | | |
|-------------------|-------------------|
| ① 1,000만 원 미만 | ② 1,000만~2,000만 원 |
| ③ 2,000만~3,000만 원 | ④ 3,000만~4,000만 원 |
| ⑤ 4,000만~5,000만 원 | ⑥ 5,000만 원 이상 |

문4. 현재 귀하 가구의 어업소득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얼마입니까?

_____ %

문5. 귀하 가구는 어업 이외에 다른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 | | |
|---------|-----------------|
| ① 하고 있다 | ② (거의) 하고 있지 않다 |
|---------|-----------------|

문5에서 ① 응답자만

➡ 문5-1. 다른 경제활동을 하신다면 어떤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표시해주시요.

- | | |
|-------------------|-----------------|
| ① 농림축산업 | ② 수산물 가공업 |
| ③ 수산물 유통업(직판장 등) | ④ 음식·숙박업(민박 포함) |
| ⑤ 체험관광(낚시 포함) 제공 | ⑥ 토목·건설공사 현장 노동 |
| ⑦ 기타 제조공장 취업 | ⑧ 선박·토지·건물 임대 |
| ⑨ 공공기관(공무원 포함) 취업 | ⑩ 서비스업 |
| ⑪ 기타 (_____) | |

문5에서 ② 응답자만

➡ 문5-2. 어업 이외의 경제활동이 없거나 미미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표시해주시요.

- ① 어업소득만으로 충분함
- ② 어업만으로도 일손이 부족함
- ③ 다른 경제활동을 하고 싶어도 여건이 되지 않음
- ④ 기타 (_____)

문5-2에서 ③ 응답자만

➡ 문5-2-1. 다른 경제활동을 하고 싶어도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표시해주시요.

- ① 어촌과 인근 지역에 일자리가 없음
- ② 취업에 필요한 기술(기계 조작 등)이 없음
- ③ 나이가 많아서 취업 등 다른 일을 시작하기 힘들
- ④ 사업자금이 부족함
- ⑤ 창업하는 절차를 잘 모름
- ⑥ 어촌 지역의 특성 상 수익성 있는 사업을 찾기 힘들
- ⑦ 기타 (_____)

어촌을 농촌·도시와 비교하여 여쭙겠습니다.

문6. 귀하는 어가의 평균 소득 수준이 농가, 도시가구와 비교해서 지난 10년 동안 어떤 양상을 보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소득격차의 큰 변화 없음
- ② 농가, 도시가구 모두와 소득격차가 더 벌어짐
- ③ 농가와의 소득격차는 줄었으나 도시가구와는 더 벌어짐
- ④ 농가와의 소득격차는 더 벌어졌으나 도시가구와는 줄어듦
- ⑤ 농가, 도시가구 모두와 소득격차가 줄어듦
- ⑥ 기타 (_____)

문6에서 ②, ③, ④ 응답자만

▶ 문6-1. 지난 10년 동안 어가가 농가 또는 도시가구와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 이하로 답해주세요.

(_____, _____, _____)

- ① 어장축소, 어업자원 감소에 따른 조업경쟁 심화
- ② 유류비 등 어업비용 증가
- ③ 수입자유화에 따른 수산물 수입 증가
- ④ 적조·어병 발생, 어장 오염, 갯녹음 현상, 수온 상승 등 환경 요인
- ⑤ 부가가치 높이는 유통·가공 기반 부족
- ⑥ 어업 이외의 다른 소득원 부족
- ⑦ 어촌사회의 고령화
- ⑧ 기타 (_____)

문7. 농가 또는 도시가구와 어가의 소득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면서 중요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어업의 구조조정으로 안정적 경영 도모
- ② 어업비용 절감 기술 개발
- ③ 어업자원 조성 및 어장환경 개선
- ④ 수산물 유통·가공 기반 지원
- ⑤ 어업 이외의 다른 소득원 개발 지원
- ⑥ 기타 (_____)

문8. 귀하는 교육·의료·문화 등의 생활환경 측면에서 어가가 농가, 도시가구와 비교해서 지난 10년 동안 어떤 양상을 보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생활환경 격차의 큰 변화 없음
- ② 농가, 도시가구와 비교하여 생활환경이 더 악화됨
- ③ 농가와의 격차는 줄었으나 도시가구에 비해서는 더 악화됨
- ④ 농가에 비해 더 악화되었으나 도시가구와의 격차는 줄어들음
- ⑤ 농가, 도시가구와 비교하여 생활환경이 개선됨
- ⑥ 기타 (_____)

문8에서 ②, ③, ④ 응답자만

➡ 문8-1. 농가 또는 도시가구와 비교하여 어가의 생활환경이 더 악화된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농가 또는 도시가구와의 소득격차 확대
- ② 농촌 또는 도시에 비해 부족한 정책적 지원
- ③ 지리적으로 불리한 곳에 있는 어촌의 고유한 여건
- ④ 기타 (_____)

어촌의 경제를 어촌 내부의 관점에서 여쭙겠습니다.

문9. 귀하는 어촌사회 내부에서 어가소득의 격차가 지난 10년 동안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소득격차의 큰 변화 없음 ② 소득격차가 더 벌어짐
- ③ 소득격차가 줄어들음

문10. 귀하는 지난 10년 동안 어촌사회 내부에서 고소득 계층과 저소득 계층으로 나누어지는 양극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러함 ② 그렇지 않음
- ③ 잘 모름

문9에서 ② 또는 문10에서 ① 응답자만

➡ 문10-1. 지난 10년 동안 어촌사회 내부에서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거나 소득 양극화가 심해졌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어선경영규모, 어장보유면적 등 생산시설 보유의 격차 확대
- ② 어가의 어업경영 능력 차이 확대
- ③ 수익성이 높지만 실패할 위험도 큰 양식어업의 확대
- ④ 어업이외 다른 소득원 보유의 격차 심화
- ⑤ 어가부채 증가에 따른 저소득층의 증가
- ⑥ 기타 (_____)

문11. 어촌사회 내부의 소득격차를 줄이고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개 이하로 답해주시시오.

(_____, _____, _____)

- ① 부실 경영체의 퇴출 지원과 전업 유도
- ② 고령 경영인을 대체할 젊고 유능한 어업경영인의 진입 유도
- ③ 가공·유통 산업 등 어업과 연관된 고부가가치 산업 개발
- ④ 체험관광 활성화 등 어촌의 다원적 기능 활용 장려
- ⑤ 경영컨설팅제, 교육프로그램 등을 도입하여 합리적 경영 지원
- ⑥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의료·생계보조 등 사회안전망 강화
- ⑦ 기타 (_____)

양식어업 어가만

문12. 어가경제 통계 분석에 따르면 양식어업 어가의 소득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양극화 경향이 뚜렷합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까지만 답해주시시오. (_____, _____)

- ① 어장경영규모의 차이
- ② 양식어업 경영능력 또는 양식기술의 차이
- ③ 양식품목의 차이
- ④ 자연재해, 바다환경 변화 등에 민감한 양식어업의 성격
- ⑤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폭락 등 시장 여건에 민감한 양식어업의 성격
- ⑥ 기타 (_____)

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공무원용) 의견조사표에서 내용이 약간 바뀌거나 추가된 질문

문1. 어가수를 기준으로 할 때 현재 귀하 관내 어업의 비율은 대략 어떠합니까?

- | | | |
|------------|-------|---|
| ① 비어선 채취어업 | _____ | % |
| ② 어선어업 | _____ | % |
| ③ 양식어업 | _____ | % |
| ④ 기타 | _____ | % |

문2. 평균적으로 볼 때 귀하 관내 어가는 어업 이외의 경제활동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 | | |
|-----------------|-----------------|
| ① 전체 소득의 75% 이상 | ② 전체 소득의 50~75% |
| ③ 전체 소득의 25~50% | ④ 전체 소득의 25% 미만 |

문4. 귀하 관내의 어가는 어업 이외에 다른 경제활동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여건에 있습니까?

- | | |
|--------|-----------|
| ① 그러함 | ② 그러하지 않음 |
| ③ 잘 모름 | |

➡ 문9-2. 관내 어업 부문별로 볼 때 지난 10년 동안 부문 내에서 소득격차가 크게 확대되었거나 양극화 경향이 뚜렷한 부문을 순서대로 써주십시오.

(_____, _____, _____)

- | |
|------------|
| ① 비어선 채취어업 |
| ② 어선어업 |
| ③ 양식어업 |

어촌의 양극화 실태와 정책과제
- 소득 양극화 실태와 원인 분석을 중심으로 -

2006年 12月 26日 印刷

2006年 12月 28日 發行

編輯兼
發行人 李 正 煥

發行處 韓國海洋水產開發院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3동 1027-4
수암빌딩

전 화 2105-2700 FAX : 2105-2800

등 록 1984년 8월 6일 제16-80호

組版・印刷 / 영진인쇄사 02)734-3713 정가 15,000원

판매 및 보급 : 정부간행물관매센터

Tel : 394-0337, 734-6818